

정책연구 2021-28

# 전남형 자치경찰 치안정책 개발 연구



정책연구 2021-28

# 전남형 자치경찰 치안정책 개발 연구



## 연구진

---

**박재희**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최인수**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전대욱**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시행

-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은 ‘중앙권한의 획기적인 지방이양’ 추진전략과 관련한 추진 과제로서 경찰권의 분권성과 민주성을 강화하고 지역 특성과 주민 요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치안 서비스 제공을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였음
-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와 함께 치안 사무의 공동 책무자로서 주민들의 요구나 선호를 반영한 지역 맞춤형 치안 서비스와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를 통한 통합적 치안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가 됨

### □ 도민 관점의 자치경찰 치안 정책개발

- 자치경찰제가 성공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
- 전남의 특수한 치안 여건에 적합한 자치경찰 시책을 개발하여 자치경찰제가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함
- 연구의 결과물은 전남자치경찰위원회의 치안정책 수립 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것임

## 2. 주요 연구 내용 및 결과

### □ 자치경찰 시책의 우선순위

- 자치경찰은 지역사회 근린 경찰 활동에 최우선 기능을 부여하여 자치경찰 활동의 가시화를 통해 사건·사고 및 범죄예방활동을 통한 주민 생활의 안정화에 가장 큰 중점을 두고 활동할 필요가 있음

- ‘전남 자치경찰에 바란다’ 도민 설문조사에서도 향후 3년간 도민 안전 향상을 위해 가장 많은 투자가 필요한 자치경찰 분야로 응답자의 절반이 생활안전 및 범죄예방활동을 선택함
- 분야별 중요도는 생활안전 및 범죄예방 활동 > 사회적 약자 보호 활동 > 교통안전 활동 순임

#### □ 효과적인 범죄예방 시책

- 효과적인 범죄예방 활동은 범죄예방시설 설치·운영 및 경찰관의 순찰 강화 활동임
- 범죄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은 상시 지역순찰을 강화하여야 함
  - 생활안전을 가장 위협하는 장소는 유흥번화가와 주거지역임
  - 도시주변지역과 농·산촌 지역은 주거지역이 가장 생활안전을 위협하는 장소이며 어촌·도서지역은 유흥번화가와 함께 외국인 밀집지역도 생활안전을 위협하는 장소로 나타났음
- 지역순찰의 방법은 도보 순찰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자전거 순찰, 스쿠터 순찰, 차량 순찰 등의 우선순위로 순찰팀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 자치경찰은 주민이 요구하는 안전 서비스가 무엇인지 항시 귀를 기울여 듣고, 지속적으로 이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운영체제를 갖추어야 함

#### □ 효과적인 교통안전 시책

- 교통안전을 가장 위협하는 요소는 교통법규 위반과 이륜차 법규 위반임
  - 교통법규 위반을 위협하는 요소는 음주운전과 불법주정차로 나타났으며 어촌·도서 지역은 음주운전과 과속신호 위반으로 나타났음
  - 도시 중심지역 도민들은 이륜차 법규 위반을 가장 위협하는 요소로 꼽았음
  - 어촌·도서 지역 도민들은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안전시설 부족을 위협 요소로 꼽았음

- 효과적인 교통안전 시책은 법규위반단속과 교통안전 시설개선이 제시되었음
  - 효과적인 교통약자 보호 활동은 어린이 등하굣길, 노인시설 주변 보행로 등에 대한 안전 활동 강화와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내 교통시설 개선 활동으로 나타났음
  - 특히, 학교 주변 불법주정차 및 보행자 무단횡단 단속, 단속 카메라 설치, 학교 앞 교통 캠페인 등 교통지도의 필요성이 제시됨
- 교통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위반, 이륜차 법규위반에 대한 단속 강화와 안전한 인도 조성 및 확장, 사고다발지역의 도로정비, 교통안전구간 확보, 인프라 확보(교통안전 표시물 추가 설치 및 홍보, 안전시설) 등이 요청됨

#### □ 효과적인 사회적 약자 보호 시책

- 사회적 약자 보호 시책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자치경찰 지원활동임
- 지자체와의 연계를 통해 피해자들의 법률 및 상담 지원 등이 다양하게 진행되어야 함
  -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서와 시·군청과의 협조체계 구축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 학교폭력과 관련해서는 시·군청의 아동청소년과, 교육지원청과 함께 캠페인 활동을 펼쳐야 함
  - 어르신 치매 및 실종과 관련해서는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가정폭력과 관련해서는 여성 상담센터 및 쉼터와 연계가 이루어져야 함
- 가장 시급하게 근절해야 할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응 등 청소년 범죄임
  - 전남지역은 청소년 범죄> 성범죄> 가정폭력 순임
  - 농·산촌 지역은 청소년 범죄> 성범죄> 아동학대 순임

- 지역 교육지원청 및 학교와의 협업을 통한 학교 주변 안전시설 확충 및 순찰 강화가 요구됨

#### □ 효과적인 소통 및 참여 시책

- 자치경찰과 지자체의 정기적인 미팅을 위한 제도적 공간과 기회가 마련되어야 함
  - 독거노인, 생활보호 대상자, 장애인 등은 지자체에서 현황 파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자체와 소통 및 협력이 필요함
  - 교통안전 활동의 경우 각 면사무소와의 연계가 필요함
  - 어르신 범죄 예방 활동은 아파트 관리사무소, 이장님 마을 방문을 통해 홍보 활동을 전개할 수 있음
- 자치경찰 정책 제안은 지역 주민으로부터 관의 실행부서로 수렴되는 bottom-up 과정이 되어야 함
  - 관이 정책의 설계를 하되 시책 개발 과정은 지역 주민의 자발성 및 협력에 바탕을 두어야 함
- 주민자치회를 활용하여 자치경찰 시책의 홍보 및 공유가 이루어지고 주민의 의견이 공식적으로 수렴될 수 있어야 함
  - 파출소장이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여함으로써 동에서 시로 주민들의 의견이 지역 경찰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음
- 자치경찰제가 성공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지역 경찰의 인력 및 인사 운영 제도의 개선이 필요함
  - 지역 경찰과 주민 간 유대감을 형성하고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는 경찰의 순환보직 제도는 개선되어야 함
  - 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자치경찰이 되기 위해서는 지역 경찰 인력의 충원이 충분하게 이루어져야 함
  - 한정된 인력에서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업무 이외에 주민들을 위한 예방 활동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 주민의 참여는 자율성을 기반으로 하는 봉사활동이기 때문에 이들이 자긍심과 보람을 가질 수 있는 유인제도가 설계되어야 함
  - 자율방범대, 생활안전협의체 등 주민참여조직에 대한 지원을 통해 치안 활동을 촉진시키는 동시에 주민참여조직의 책임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주민자치조직 활동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가 필요함
  - 감사패, 상장, 유니폼, 우수사례 발굴 및 포상 등 참여주민들의 소속감을 키워 지속가능한 참여를 보장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음
  - 자치경찰 정책 공모사업, 주민자치조직 지원조례 제정, 자치경찰위원회와 주민자치조직 간 MOU 체결, 정기적인 간담회 등 제도적 지원 마련도 필요함

### 3. 정책 제언

-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자치경찰 정책에 대한 큰 방향 또는 지침을 안내하되, 세부 시책과 관련해서는 파출소·지구대별 주요 활동의 우선순위를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함
- 도시중심 지역 이외의 도시 주변 및 농·산·어촌 지역에 대해서는 국가경찰권이 닿지 않는 소외지역 또는 외곽지역에 대한 자치경찰 활동을 전개함
  - 특히 도서지역과 인구소멸지역은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 맞춤형 시책이 필요함
- 전남형 자치경찰 시책의 추진전략으로 지역 맞춤형 단계별 대응 전략 마련, 국가안전대진단과 연계한 범죄취약지역 및 시설개선 추진,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 지자체·유관기관과 협업체계 강화, 맞춤형 찾아가는 치안 서비스 제공을 제시함
  - 도서지역 세부시책으로 합동 기동순찰팀 구성을 통한 스팟 활동 전개, 인권 침해 취약사업장 경·관 합동 점검, 인권 침해 피해자 시설 입소 및 후견인 지정 협조 등 사례관리, 찾아가는 상담소 운영, 성폭력 피해자 의료 지원 서비스 제공,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관리 활동 강화, 교통안전시설 개



- 선, 도서지킴이 재정비, 도서 치안신고망 데이터베이스 구축, 도서 내 범죄 예방을 위한 CPTED 구축 등임
- 인구소멸지역 세부시책으로 공·폐가 합동 범죄예방진단 실시, 여성안심 구역 지정 및 관리 카드 정비,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한 범죄 취약환경 및 시설 개선, 탄력 순찰 등 현장 대응 강화, 유관기관과 협력 확대를 통한 치안 문제발굴 및 해결 등임
- 향후에는 본 연구에서 정리된 자치경찰 시책 이외에 경찰청에서 기획되었으나 일선 경찰기관에서 의도대로 시행되지 않은 시책들에 대한 분석도 필요함
  - 자치경찰제 시행 이전에도 경찰청에서 많은 정책들이 수립되어 왔기 때문에 기존 정책에 대한 분석도 향후 자치경찰 시책 개발에 도움이 될 것임

## 제1장 | 서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	3
1. 연구배경 .....	3
2. 연구목적 .....	3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	5
1. 연구범위 .....	5
2. 연구방법 .....	6

## 제2장 | 자치경찰 치안정책에 대한 이론적 논의

제1절 자치경찰의 의의 .....	11
1. 지방자치 관점 .....	11
2. 기능 관점 .....	12
제2절 자치경찰 치안정책의 범위 .....	13
1. 자치경찰 정책·시책·사업의 구분 .....	13
2. 법률에서 규정한 자치경찰사무의 범위 및 기준 .....	13
3. 별표에서 규정한 자치경찰사무의 범위 .....	15
제3절 자치경찰 치안정책에 대한 선행연구 .....	20
1. 시·도 자치경찰 연구 .....	20
2.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 시책 .....	23

## 제3장 | 전남 치안 및 자치경찰 현황 검토

제1절 전남 치안 현황 .....	33
1. 치안 여건 .....	33
2. 치안 역량 .....	47
제2절 자치경찰위원회 및 주민참여조직 현황 .....	53

1. 자치경찰위원회 .....	53
2. 주민참여조직 .....	54

#### 제4장 | 전남형 자치경찰 치안정책 개발을 위한 기초 조사

제1절 도민 의견수렴 .....	59
1. 도민 설문조사 .....	59
2. 현장 면담 조사 .....	90
제2절 해외 사례 조사 .....	97
1. 프랑스 자치경찰 사례 .....	97
2. 이탈리아 자치경찰 사례 .....	103
3. 벨기에 자치경찰 사례 .....	106
4. 스페인 자치경찰 사례 .....	109
5. 해외사례 시사점 .....	111

#### 제5장 | 전남형 자치경찰 치안정책 개발

제1절 기본 방향 .....	117
1. 생활안전 .....	117
2. 교통안전 .....	119
3. 사회적 약자 보호 .....	121
4. 소통 및 참여 .....	123
제2절 정책의 유형 구분 및 시책 리스트 구성 .....	125
1. 정책의 유형 구분 .....	125
2. 시책 리스트의 구성 .....	126
제3절 분야별 시책 .....	127
1. 생활안전 .....	127

2. 교통안전 .....	134
3. 사회적 약자 보호 .....	139
4. 소통 및 참여 .....	148
제4절 지역 맞춤형 주민 체감 시책 .....	154
1. 추진전략 .....	154
2. 세부 시책 .....	156

## 제6장 | 결론

제1절 연구 요약 .....	167
제2절 정책 제언 .....	171

【참고문헌】 .....	179
--------------	-----

【부록】 .....	184
------------	-----

## 표목차 | LIST OF TABLES

〈표 1-1〉 연구의 흐름도 .....	7
〈표 2-1〉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1호 시책 .....	24
〈표 2-2〉 60세 초과 범죄 피해자 현황(범죄통계시스템 활용) .....	27
〈표 2-3〉 위기 어르신 발굴·보호를 위한 찾아가는 현장활동 추진실적 .....	28
〈표 2-4〉 어르신 실종예방 및 조기발견 대응체계 추진실적 .....	29
〈표 3-1〉 도서 지킴이 현황 .....	33
〈표 3-2〉 전남지역 염전·양식업 현황 .....	34
〈표 3-3〉 전남지역 어르신 인구 .....	36
〈표 3-4〉 시·군별 사회적 약자 거주인구 현황(2021년 6월 기준) .....	37
〈표 3-5〉 전남지역 공·폐가 현황 .....	39
〈표 3-6〉 한전 자료 기반 시도별 농촌지역 빈집분포 .....	40
〈표 3-7〉 농촌빈집실태조사 기반 시도별 농촌 빈집분포 .....	40
〈표 3-8〉 전라남도 지역별 지역관서(지구대, 파출소, 치안센터) 현황 .....	49
〈표 3-9〉 지구대 및 파출소 별 관할인구 .....	49
〈표 3-10〉 자치경찰 협력단체 현황 .....	50
〈표 3-11〉 전체 인력('21.3월 기준) .....	50
〈표 3-12〉 계급별 인력 .....	51
〈표 3-13〉 관서별 인력 .....	51
〈표 3-14〉 경찰 1인당 인구수 .....	51
〈표 3-15〉 예산 .....	52
〈표 3-16〉 자율방범대 및 생활안전협의회 현황 .....	55
〈표 3-17〉 모범운전자회 .....	56
〈표 3-18〉 녹색어머니회 .....	56
〈표 4-1〉 '전남 자치경찰에 바란다' 도민 설문조사 문항 구성 .....	60
〈표 4-2〉 경찰서 등급구분 .....	91
〈표 5-1〉 범죄 위험 요소 .....	118
〈표 5-2〉 생활안전을 위협받는 장소 .....	118

〈표 5-3〉 교통안전을 가장 위협하는 요소 .....	120
〈표 5-4〉 교통법규 위반 위협 요소 .....	120
〈표 5-5〉 교통안전 강화 활동 .....	121
〈표 5-6〉 사회적 약자 안전성 및 만족도 .....	122
〈표 5-7〉 시급하게 근절해야 할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	122
〈표 5-8〉 시책 리스트 구성 .....	126
〈표 5-9〉 생활안전 분야 시책 리스트 .....	150
〈표 5-10〉 교통안전 분야 시책 리스트 .....	151
〈표 5-11〉 사회적 약자 보호 분야 시책 리스트 .....	152
〈표 5-12〉 도서 지킴이 재정비 결과(21년 하반기 기준) .....	158
〈표 5-13〉 도서 관사·보건진료소 CPTED 현황 .....	160
〈표 6-1〉 자치경찰의 주요 활동 지역(예시) .....	174

## 그림목차 | LIST OF FIGURES

〈그림 3-1〉 전남 시·군별 인구 증감률 .....	37
〈그림 3-2〉 광역도 농촌 지역 빈집 수 .....	39
〈그림 3-3〉 교통사고 .....	42
〈그림 3-4〉 집회 시위 .....	43
〈그림 3-5〉 112 신고 .....	43
〈그림 3-6〉 발생 범죄 .....	44
〈그림 3-7〉 5대 범죄 .....	45
〈그림 3-8〉 범죄안전지수 .....	46
〈그림 3-9〉 안전체감도 .....	46
〈그림 3-10〉 지역별(시·도) 경찰서 현황 .....	47
〈그림 3-11〉 전남경찰청 조직도 .....	48
〈그림 3-12〉 시도별 전라남도 경찰 1인당 담당 인구수 .....	52
〈그림 4-1〉 응답자 성별 .....	61
〈그림 4-2〉 응답자 연령 .....	61
〈그림 4-3〉 응답자 직업 .....	62
〈그림 4-4〉 응답자 거주지역 .....	62
〈그림 4-5〉 응답자 거주지역 유형 .....	63
〈그림 4-6〉 자치경찰제 인지도 .....	63
〈그림 4-7〉 자치경찰제 효과성 .....	64
〈그림 4-8〉 범죄 안전성 .....	65
〈그림 4-9〉 생활안전활동 만족도 .....	65
〈그림 4-10〉 범죄 위험요소 .....	66
〈그림 4-11〉 생활안전 위협 장소 .....	66
〈그림 4-12〉 범죄예방활동 .....	67
〈그림 4-13〉 치안활동 참여 의사 .....	67
〈그림 4-14〉 교통안전성 .....	68
〈그림 4-15〉 교통활동 만족도 .....	69

---

〈그림 4-16〉 교통안전 위협 요소 .....	69
〈그림 4-17〉 교통위반 위협요소 .....	70
〈그림 4-18〉 교통안전 강화 활동 .....	70
〈그림 4-19〉 교통약자 보호 활동 .....	71
〈그림 4-20〉 사회적 약자 안전성 .....	72
〈그림 4-21〉 사회적 약자 보호활동 만족도 .....	72
〈그림 4-22〉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	73
〈그림 4-23〉 사회적 약자 보호활동 .....	73
〈그림 4-24〉 범죄 피해자 지원책 .....	74
〈그림 4-25〉 분야별 중요도 .....	75
〈그림 4-26〉 지역별 자치경찰제도 인지도 .....	75
〈그림 4-27〉 지역별 자치경찰제도 효과성 .....	76
〈그림 4-28〉 지역별 범죄 안전성 .....	77
〈그림 4-29〉 지역별 생활안전활동 만족도 .....	77
〈그림 4-30〉 지역별 범죄 위협요소 .....	78
〈그림 4-31〉 지역별 생활안전 위협장소 .....	79
〈그림 4-32〉 지역별 범죄예방활동 .....	79
〈그림 4-33〉 지역별 치안활동 참여 의사 .....	80
〈그림 4-34〉 지역별 교통 안전성 .....	81
〈그림 4-35〉 지역별 교통활동 만족도 .....	81
〈그림 4-36〉 지역별 교통안전 위협요소 .....	82
〈그림 4-37〉 지역별 교통위반 위협요소 .....	83
〈그림 4-38〉 지역별 교통안전 강화 .....	84
〈그림 4-39〉 지역별 교통약자 보호 .....	85
〈그림 4-40〉 지역별 사회적 약자 안전성 .....	86
〈그림 4-41〉 지역별 사회적 약자 보호활동 만족도 .....	86
〈그림 4-42〉 지역별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	87



〈그림 4-43〉 지역별 사회적 약자 보호활동 .....	88
〈그림 4-44〉 지역별 범죄 피해자 지원책 .....	89
〈그림 4-45〉 지역별 분야별 중요도 .....	90
〈그림 5-1〉 지역맞춤형 주민체감 시책 .....	163

## 제1장

# 서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 제1절

## 연구배경 및 목적

## 1. 연구배경

## □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시행

-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은 ‘중앙권한의 획기적인 지방이양’ 추진전략과 관련한 추진 과제로서 경찰권의 분권성과 민주성을 강화하고 지역 특성과 주민 요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을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였음
-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와 함께 치안 사무의 공동 책무자로서 주민들의 요구나 선호를 반영한 지역 맞춤형 치안서비스와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를 통한 통합적 치안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가 됨

## □ 도민 관점의 자치경찰 치안정책 개발의 필요성

- 자치경찰제가 성공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
- 도민의 입장에서 자치경찰제의 시행은 ‘우리 동네 치안은 우리가 책임진다’는 주민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음
- 자치경찰과 주민참여의 연계는 지역의 안전 취약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주민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민·관 공동의 대안 마련임

## 2. 연구목적

- 연구의 목적은 도민 관점에서 전남형 자치경찰 치안정책을 개발하는 것임

- 도민들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 전남의 특수한 치안 여건에 적합한 자치경찰 시책을 개발하여 자치경찰제가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함
- 연구의 결과물은 전남자치경찰위원회의 치안 정책 수립 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것임

##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 1. 연구범위

#### □ 기간 범위

- 전남 자치경찰 치안 정책의 발굴 시점은 원칙적으로 2021년을 기준으로 하고 2022년을 목표 연도로 하되 치안 정책의 세부 추진계획에 따라 적용 시점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것임

#### □ 공간 범위

- 전남형 자치경찰 치안정책 개발은 전라남도를 대상으로 하며 개발된 치안정책은 전남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 추진계획에 반영됨

#### □ 내용 범위

- 자치경찰 치안 정책의 범위를 제한하기 위해 자치경찰 사무를 살펴보고 자치경찰 치안 정책 선행연구를 검토함
  - 연구원 보고서, 타 시도의 자치경찰 시책, 언론 기사 등을 검토
- 전남 자치경찰 시행 여건과 관련하여 전남의 치안 및 자치경찰 현황을 살펴봄
  - 전남 치안 여건은 관할 지역의 인구수, 범죄 발생 빈도를 살펴보고 전남 치안 역량은 경찰 인력, 조직, 예산 등을 살펴봄
- 전남형 자치경찰 치안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정책의 유형을 구분하고 정책 리스트를 구성함
  - 정책의 효력이 미치는 시간적 범위에 따라 단기 시책, 중기 시책, 장기 시책으로 구분할 수도 있고 정책 대상 지역에 따라 도·농복합형, 농·산·어촌형, 도서형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정책 리스트는 자치경찰 치안정책의 법정 기능과 주민의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한 주민참여 전략의 검토를 통해 기본 틀을 설정하고 정책의 유형을 고려한 영역별 치안 정책을 개발함

## 2. 연구방법

- 자치경찰 치안 정책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관련하여 정부 문서, 연구원 보고서, 언론 기사, 선행연구 등 기존 문헌들을 분석함
- 전라남도 치안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인구수, 범죄 발생 빈도 등 기초 통계량을 수집하고 자치경찰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정부 문서, 선행연구 등을 검토함
- 전남형 자치경찰 치안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전남 자치경찰에 바란다' 도민 대상 설문조사 및 방문 조사를 시행함
- 자치경찰 특수 시책을 제시하기 위해 해외 사례를 검토하고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프로세스 방안을 제시함
- 원내 및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전문가 워크숍, 정책 간담회 등을 통해 분야별 자치경찰 정책의 내용에 대한 자문 의견을 수렴함

〈표 1-1〉 연구의 흐름도

단계	세부 내용	연구 방법
서론	① 연구배경 및 목적 ② 연구범위 및 방법	
자치경찰 치안정책에 관한 논의	① 자치경찰의 의의 ② 자치경찰 치안정책의 범위 ③ 자치경찰 치안정책에 대한 선행연구	문헌 검토
전남 치안 및 자치경찰 현황	① 전남 치안 여건 및 역량 ② 자치경찰위원회 및 주민참여조직 현황	문헌 검토
전남형 자치경찰 치안정책 개발을 위한 기초 조사	① 도민 설문 및 경찰공무원 면담 조사 ② 해외 특수 시책 조사	설문조사 및 방문조사 문헌 검토
전남 자치경찰 치안정책 개발	① 정책개발의 기본 방향 ② 정책의 유형 구분 및 시책 리스트 구성 ③ 분야별 시책 ④ 지역 맞춤형 주민체감 시책	설문조사 분석 신문기사 검색
결론	① 연구 요약 ② 정책 제언	← 전문가 자문회의





## 제2장

# 자치경찰 치안정책에 대한 이론적 논의

제1절 자치경찰의 의의

제2절 자치경찰 치안정책의 범위

제3절 자치경찰 치안정책에 대한 선행연구



## 제1절 자치경찰의 의의

## 1. 지방자치 관점

- 자치경찰의 개념은 지방자치를 중심으로 개념 정의하는 경우와 경찰 기능을 중심으로 개념 정의하는 경우로 나누어 정리해 볼 수 있음
- 지방자치 관점에서 자치경찰을 논의한 연구들은 자치경찰의 조직, 사무, 인사 등에 대한 권한 및 책임의 관점에서 자치경찰을 개념화하고 있음
- 안영훈(2007)은 자치경찰을 “주민의 직접 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지방 정부 의회 또는 지방정부의 장 책임하에 자율적인 자치경찰 조직·인사·재정 수단을 갖고 관할구역 내에서 주민을 위한 공공(경찰)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이라고 정의하였음
- 송하철(2013)은 자치경찰을 “지역중심의 생활치안과 사회안전망 확보, 지역 행정의 종합성 제고라는 비전을 가지고 치안역량 저변확대와 국가전체 치안력 강화, 그리고 지역특성에 맞는 치안행정 실현, 주민 친화적 치안서비스 제공, 지역치안에 대한 자치행정의 책임성 확보를 목표로 이루어지는 경찰 활동”으로 정의하였음
- 윤영균(2013)은 자치경찰은 “지방자치단체가 자기구역에서 자신이 설치한 자치경찰조직과 자치경찰공무원으로, 자신의 권한과 책임으로 민주적이고 자주적으로 자치경찰사무를 처리하는 제도”로 정의하였음
- 성수영(2018)은 “지방자치단체에 자치권을 부여하여 경찰의 설치·운영과 책임을 부여하고 자치단체에 위임하는 제도”로 정의하였음
- 양영철(2021)은 “자치단체가 자신의 능력과 조직 및 인력으로 자치단체에 속한 자치경찰 사무를 처리하는 제도”라고 정의하였음

## 2. 기능 관점

- 이황우(1999)는 자치경찰을 “지방분권의 정치사상에 따라 경찰이 지방자치 단체의 권한과 책임하에 지역주민의 의사에 기반하여 치안 업무를 자주적으로 수행하는 제도”로 정의하였음
- 최기문(2000)은 자치경찰을 “경찰행정을 지방분권화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그 유지의 권한과 책임을 지고 주민의 참여와 통제를 받는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제를 정착시키는 한편,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제도”로 정의하였음
- 최종술(2003)은 자치경찰을 “중앙정부로부터 부당한 간섭과 통제를 방지하여 자주성을 확보하고 자치단체장으로부터 정치적 이용 가능성을 배제하여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장으로부터 분리된 독립기관”으로 정의하였음
- 이상열 외(2015)는 자치경찰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의 범죄예방과 범죄의 두려움 감소를 비롯한 체감안전의 향상과 각종 안전 확보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행하는 경찰제도”로 정의하였음
- 신현기 외(2018)는 자치경찰을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과 책임하에 지역주민들의 안전은 물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자치권(경찰권 일부)을 행사하는 제도”로 정의하였음
- 이상훈·이상열(2020)은 자치경찰을 “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 하에 지역주민들에게 범죄예방과 각종 안전 등 다양한 경찰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 정의하였음

## 제2절 자치경찰 치안정책의 범위

### 1. 자치경찰 정책·시책·사업의 구분

- 자치경찰정책은 자치경찰사무를 시행하기 위한 기본 방침이라고 할 수 있음
- 자치경찰시책은 자치경찰제가 구현하고자 하는 정책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 또는 수단으로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구체적인 사업으로 연계하기 위한 활동을 의미함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 자치경찰사업은 자치경찰시책을 실현하기 위한 개별 업무를 의미함
- 본 연구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자치경찰정책은 주로 자치경찰시책을 의미함

### 2. 법률에서 규정한 자치경찰사무의 범위 및 기준

#### 1) 법에 따른 자치경찰 사무의 범위

- 자치경찰의 사무는 경찰의 임무(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범위에서<sup>1)</sup> 관할 지역의 생활안전·교통·경비·수사 등에 관한

1) 제3조(경찰의 임무) 경찰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2.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3. 범죄피해자 보호
4. 경비·요인경호 및 대간첩·대테러 작전 수행
5. 공공안녕에 대한 위협의 예방과 대응 관련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6. 교통의 단속과 위협의 방지
7.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

사무로 지역 내 주민의 생활안전 활동에 관한 사무, 지역 내 교통 활동에 관한 사무,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 관리에 관한 사무, 일부 수사사무 등을 포함함

- 지역 내 주민의 생활안전 활동에 관한 사무는 생활안전을 위한 순찰 및 시설의 운영, 주민참여 방법활동의 지원 및 지도, 안전사고 및 재해·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아동·청소년·노인·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보호 업무 및 가정폭력·학교폭력·성폭력 등의 예방,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회질서의 유지 및 그 위반행위의 지도·단속, 그 밖에 지역주민의 생활안전에 관한 사무를 포함함
- 지역 내 교통활동에 관한 사무는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지도·단속, 교통안전 시설 및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심의·설치·관리,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 및 홍보, 주민참여 지역 교통활동의 지원 및 지도, 통행 허가, 어린이 통학버스의 신고, 긴급자동차의 지정 신청 등 각종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무, 그 밖에 지역 내의 교통안전 및 소통에 관한 사무를 포함함
- 자치경찰의 사무에는 수사에 관한 사무도 일부 포함되며, 경찰의 수사에 대해서는 국가수사본부장의 지휘·감독을 받게 됨
  - 수사사무는 학교폭력 등 소년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범죄, 교통사고 및 교통 관련 범죄, 형법 제245조에 따른 공연음란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따른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에 관한 범죄, 경범죄 및 기초질서 관련 범죄, 가출인 및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실종아동 등 관련 수색 및 범죄를 포함함

## 2) 대통령령에 따른 기준

- 지역 내 주민의 생활안전활동, 지역 내 교통활동,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

런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의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과 그 범위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이에 반하여 수사사무의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대통령령 제3조는 법 제4조 제1항 제2호 라목에 따른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범위를 규정하고 있음

○ 대통령령(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는 광역자치단체가 조례 제정 시 경찰법 제3조에 따른 경찰의 임무 범위와 별표에 따른 생활안전, 교통, 경비 관련 자치경찰사무의 범위를 준수할 것, 관할 지역의 인구, 범죄발생 빈도 등 치안 여건과 보유 인력·장비 등을 고려하여 자치경찰사무를 적절한 규모로 정할 것, 기관 간 협의체 구성, 상호협력·지원 및 중복감사 방지 등 자치경찰사무가 국가경찰사무와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사항을 포함할 것, 자치경찰 사무의 내용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데 효율적인 것으로 정할 것 등을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음

### 3. 별표에서 규정한 자치경찰사무의 범위<sup>2)</sup>

#### 1) 지역 내 주민의 생활안전 활동에 관한 사무

##### 가. 생활안전을 위한 순찰 및 시설 운영

- (1) 지역 주민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 시설 설치 및 운영
- (2) 지역 주민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 진단
- (3) 지역주민 안전을 위한 순찰과 범죄예방활동 시행 및 관리

2)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별표]에는 생활안전, 교통, 경비 관련 자치경찰사무의 범위가 제시되어 있음



#### 나. 주민참여방법활동의 지원 및 지도

- (1) 범죄예방을 위한 주민참여 지역 협의체 구성·운영
- (2) 주민참여형 범죄예방활동 시행·관리

#### 다. 안전사고 및 재해·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 (1)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긴급구조지원
- (2) 재해발생 시 지역의 사회질서 유지 및 교통관리 등
- (3) 긴급구조지원기관으로서의 긴급구조지원 활동

#### 라.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보호 업무 및 가정·학교·성폭력 등의 예방

- (1) 아동·노인·장애인 학대 예방과 피해 아동·노인·장애인에 대한 보호 활동
- (2) 아동·청소년·노인·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의 실종 예방·대응 활동
- (3) 아동 대상 범죄예방 및 아동안전 보호 활동
- (4) 청소년 비행방지 등 선도·보호 활동
- (5) 가정폭력범죄 예방과 피해자 등 보호 활동
- (6) 학교폭력의 근절·예방과 가해학생 선도 및 피해학생 보호 활동
- (7) 성폭력 예방과 성폭력 피해자 등 보호 활동
- (8) 그 밖에 관련 법령에 경찰 사무로 규정된 사회적 약자 보호 및 가정폭력·학교폭력·성폭력 등 예방 업무

#### 마. 주민의 일상생활 관련 사회질서 유지 및 그 위반행위의 지도·단속

- (1) 경범죄 위반행위 지도·단속 등 공공질서 유지

- (2) 공공질서에 반하는 풍속·성매매 사범 및 사행행위 지도·단속
- (3) 그 밖에 관련 법령에 경찰의 사무로 규정된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회 질서의 유지 및 그 위반행위의 지도·단속 업무

**바. 그 외 지역주민의 생활안전에 관한 사무**

- (1) 지역주민의 생활안전 관련 112신고 처리
- (2) 지하수, 내수면 등 일반적인 출동이 어려운 특정 지역에서 주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를 위한 경찰대 운영
- (3) 유실물 보관·반환·매각·국고 귀속 등 유실물 관리
- (4)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에 따른 응급구호대상자에 대한 보호조치 및 유관 기관 협력
- (5) 그 밖에 관련 법령에 경찰의 사무로 규정된 지역주민의 생활안전에 관한 사무

**2) 지역 내 교통활동**

**가.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지도·단속**

- (1) 교통법규 위반 지도·단속, 공익신고 처리 등
- (2) 음주단속 장비 등 교통경찰용 장비보급·관리·운영 등

**나. 교통안전시설 및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심의·설치·관리**

- (1) 교통사고 예방, 교통 소통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운영
- (2) 도로교통 규제 관련 지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지원
- (3)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심의·설치·관리·운영

다.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 및 홍보

- (1)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
- (2) 교통안전에 대한 홍보

라. 주민참여 지역 교통활동의 지원 및 지도

- (1) 교통활동 지원 협력단체에 대한 운영·관리
- (2) 주민참여형 교통안전활동 지원 및 지도

마. 통행 허가, 어린이 통학버스의 신고, 긴급 자동차의 지정 신청 등 각종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무

- (1) 차마의 안전기준 초과 승차, 안전기준 초과적재 및 차로폭 초과 통행허가 처리
- (2) 도로공사 신고접수, 현장점검 및 지도·감독 등
- (3)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신고접수·관리 및 관계 기관 합동 점검
- (4) 긴급자동차의 지정 신청·관리
- (5) 버스 전용차로의 통행 지정신청 처리
- (6) 주·정차 위반차량 견인대행법인 등 지정

바. 그 밖에 지역 내 교통안전 및 소통에 관한 사무

- (1) 지역주민의 교통안전 관련 112신고 처리
- (2) 운전면허 관련 민원 업무
- (3) 지역교통정보센터 운영 및 교통정보 연계
- (4) 정체 해소 등 소통 및 안전 확보를 위한 교통관리
- (5) 지역 내 교통안전대책 수립·시행
- (6) 교통안전 관련 기관 협의 등

### 3) 다중운집 행사 관련

#### 가. 교통질서 확보 및 교통안전 관리

- (1) 다중운집 행사장 주변 주요 교차로 소통 확보를 위한 교통관리 지원
- (2) 행사장 주변 보행자 등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활동 지원

#### 나. 안전관리 지원

- (1)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지원
- (2) 행사장 주변 안전사고 예방 및 질서유지를 위한 안전활동 지원

### 제3절 자치경찰 치안정책에 대한 선행연구

#### 1. 시도 자치경찰 연구

##### 1) 경북형 자치경찰 시책<sup>3)</sup>

###### ☐ 보행자 우선 교통안전

- 노인 보행자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시설을 개선함

###### ☐ 가해자 및 피해자 심층관리

- 유관기관과의 협업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가해자와 피해자를 심층 관리함
  - 가정폭력 재발방지 프로그램
  - 청소년 재범 방지를 위한 선도프로그램
  - 학교·가정 밖 청소년 발굴 및 지원 프로그램
  - 지적 장애인 인식개선 프로그램

###### ☐ 민간기업의 참여 유도 및 협력 치안 활성화

- 민간기업의 사회공헌사업과 연계하여 지역 내 범죄취약지의 환경개선사업 동참을 유도함

###### ☐ 지역공동체 치안 협의체를 통한 범죄예방 진단

- 자율방범대 등 협력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하여 치안 정보를 공유하고 지역 치안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함
  - 자율방범대원들의 자긍심 및 유대감을 고취함

---

3) 한부영·박재희(2019).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경북형 자치경찰모델 구상.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정책이슈리포트

-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범죄취약지 대상 방법 시설물을 설치하고 주민 불안감을 해소함
  - 인구·사회·물리적 환경 데이터 분석을 통해 지역맞춤형 범죄예방 전략을 추진함

## 2) 부산형 자치경찰 시책<sup>4)</sup>

### ☐ 불법촬영 합동점검 순찰대 운영

- 주민들의 생활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불법촬영 합동점검 순찰대를 운영함
- 특히 합동점검 순찰대에 자율방범대, 자전거순찰대 등 다양한 주민자치조직을 활용하여 지역의 협력적 치안 파트너십을 구축함

### ☐ 여성범죄 우려지역 방범용 CCTV 설치

- 사회적 취약계층인 여성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범죄 및 성폭력 등을 예방하고자 범죄 취약 지역에 방범용 CCTV를 설치 및 운영함

### ☐ 범죄예방환경디자인 사업 추진

- 쾌적하고 안전한 지역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수행되는 ‘스마트시티 구축사업’, ‘CPTED를 활용한 마을만들기 사업’ 등세부 사업에 자치경찰이 참여하고 협력함으로써 치안서비스의 완결성을 강화함

### ☐ 청소년 유해환경업소 근절 및 지도단속 업무

- 자치경찰과 일반행정의 연계를 통해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 단속 및 선도보호활동을 수행함

4) 박재희·한부영·최선미(2019). 부산형 자치경찰제 추진 모델 개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정책이슈리포트.

- 특히 학교안전경찰관, 학교안전지킴이 등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맞춤형 청소년 보호 서비스를 제공함

□ 교통안전심의위원회 업무 협의

- 정례화된 교통안전심의위원회 업무 협의를 통해 치안·교통 등 여러 분야별 정보 공유 및 긴밀한 협력 방안을 마련함

□ 범죄예방 로고젝터 설치

- 범죄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범죄예방환경디자인(CPTED)의 일환으로 범죄 예방 로고젝터 설치·운영함

□ 행정복지센터와 자치경찰 간 핫라인 설치

- 행정복지센터와 자치경찰 간 핫라인 채널을 기반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생활안전·교통·치안서비스를 제공함
- 이를 통해 지역주민의 치안 및 안전에 대한 대응력을 확보함

### 3) 울산형 자치경찰 시책<sup>5)</sup>

- 자치경찰 치안시책으로 재해재난, 보건복지, 교육 분야에서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를 제안함

#### (1) 재해·재난 분야

- 재난 발생 시 실종자 확인 및 수색, 긴급 통로 확보 등 지역의 안전과 이재민의 안심 확보를 위해 폭넓은 활동을 전개할 수 있어야 함

---

5) 박재희·이행준(2020) 울산시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사전진단.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정책이슈리포트

- 재해·재난의 경우 예방적 측면이 강조되므로 도시계획, 교통계획, 범죄예방 설계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범죄예방 뿐만아니라 재해·재난을 사전 예방할 수 있는 전문적인 활동을 보장해야 함

## (2) 보건·복지 분야

- 주민 생활 밀착형 위기관리를 수행하기 위해 자치경찰과 지역사회 보건기관 간 협력에 기반한 자살,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에 대한 사전 및 사후관리가 요구됨
  - 대표적으로 사전관리로는 자살 대응 매뉴얼 마련 및 전담인력배치, 참여기관 간 사전회의 및 교육 등이 있으며 사후관리로써 주민 신고 관리, 유관기관 및 통반장과의 협력체제 구축 등을 마련해야 함

## (3) 교육 분야

- 위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경찰, 지자체 및 유관단체 간 다각적인 정보 공유 및 안전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마련함
- 교육분야 프로그램으로서 청소년들의 준법정신 고양 및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지자체와 자치경찰의 협력으로 체험형 프로그램 교육(ex. 파주시 문산 청소년경찰학교)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함

## 2.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 시책

### 1)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1호 시책

#### 가. 생활안전

- 시민 중심 네트워크 협의체 구성과 휴가철 종합 치안활동 시책이 제시되었음



## 나. 교통안전

- 관광단지 교통안전 대책, 어린이 교통안전 종합 대책, 교통안전 환경조성 등의 시책이 제시되었음

## 다. 사회적 약자 보호

- 사회적 약자 안전 강화 대책으로 어린이 안전 강화, 1인 가구 안정, 고위험 정신질환자 응급의료 체계 고도화, 어르신 범죄피해 예방 시책이 제시되었음

〈표 2-1〉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1호 시책

구분	내용
서울	1인 가구 안정
부산	해수욕장 개장 대비 종합치안대책 기장 오시리아 관광단지 교통안전대책
인천	어린이 안전 강화
대구	시민중심 네트워크협의체 구성
대전	고위험 정신질환자 응급인원 체계 고도화
광주	어린이 교통안전 종합 대책
울산	교통안전 환경 조성
강원	지구대·파출소 근무 여건 개선
충남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개설
충북	아동학대 근절
경남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조성
경북	고위험 정신질환자 응급인원 병상확충
전남	어르신 범죄 피해예방 종합 안전 대책
전북	사회적 약자(아동·청소년)안전 강화 대책
제주	휴가철 종합치안 활동 (휴가철 안심 제주 4YOU)

## 2) 경남 자치경찰위원회

### 가. 생활안전

#### ☐ 공중화장실 안심 스크린 설치

- 도내 전 지역 공중화장실에 안심 스크린 사업을 추진함
  - 도 단위 예산 지원 및 각 시·군 예산편성 전 일괄적인 사업 추진 지시를 요청함

#### ☐ 배회감지기 확대 보급

- 경찰청에서 추진하는 배회감지기 사업과는 별도 사업을 추진함
  - 도 단위 예산편성으로 각 시·군에서 일괄 사업을 추진함

#### ☐ 마을 안전 순찰관 시범 운영

- 지역 출신 마을 안전 순찰관을 지정하여 주민협력 범죄 예방 활동을 실시함
  - 도내 전담인력 배치를 위한 도비 편성을 요구함

### 나. 교통안전

#### ☐ 교통안전 공익광고 제작 및 송출

- 교통안전 공익광고를 위한 영상을 제작함
  - 과도한 예산 소요로 도에서 도경으로 예산 재배정 어려움

#### ☐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 버스 외벽 광고

- 버스 외벽 및 아파트 단지 내 엘리베이터 등 교통안전 관련 홍보 예산편성을 요청함
  - 도 교통정책과 홍보예산 미편성으로 예산 편성의 어려움이 발생함

#### 다. 사회적 약자 보호

##### ☐ 스토킹, 데이트 폭력 유관기관 협의체 운영

- 스토킹·데이트 폭력 관련 유관기관 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임
  - 여성폭력방지위원회와 함께 논의하도록 협의함

##### ☐ 가정폭력 공동대응 체계 운영

- 가정폭력 공동 대응을 위한 동행 출동 건수 및 출동 비용을 상향 책정하여 예산편성을 요청함
  - 출동 건수 및 지원비를 상향 조정함

##### ☐ 자살예방 교량시설 시범 사업

- 자살 시도가 빈번한 고위험 교량을 선정하여 적합한 예방시설 설치를 위한 재정 지원을 요청함
  - 자살 고위험 지역에 맞춤형 치안 서비스가 제공 가능함

### 3) 대전 자치경찰위원회

#### 가. 선제적 예방 경찰

- ☐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 협업 강화
- ☐ 지역공동체치안협의체 등 시민참여 범죄예방 체계
- ☐ 고위험 정신질환자 응급인원 체계 고도화
- ☐ 어린이·고령자 등 교통약자 안전 대책 추진
- ☐ 교통(사망)사고 감소 등 예방 교통활동 강화

#### 나. 따뜻한 보호 경찰

- ☐ 아동학대 대응체계 개선 및 사후관리 고도화
- ☐ 불법촬영·가정폭력 예방 등 여성 안전망 강화

- ☐ 예방·참여 중심의 위기 청소년 선도 보호 강화
- ☐ 사회적 약자 보호 활동 연계협업 확대

#### 다. 친근한 공감 경찰

- ☐ 인권 침해를 예방·근절하는 현장 중심 감사 활동 추진
- ☐ 내실있는 사기 진작책 마련으로 자치경찰제 수용성 강화
- ☐ 공정·합리적 인사 운영을 통한 공감 인사 실현

#### 라. 과학 치안 선도 경찰

- ☐ 셉티드 고도화 등 스마트 치안 환경 조성 추진
- ☐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AI 및 빅데이터 활용 강화
- ☐ 첨단 장비 도입·시범 구현 등 과학 치안 플랫폼 기반 조성

### 4) 전남 자치경찰위원회

- ☐ 위기 어르신 발굴·보호를 위한 찾아가는 현장 활동 강화
  - 위기 어르신 범죄 위기가 지속적으로 문제시됨에 따라 지역안전순찰과 연계를 통한 어르신 치안문제 대응 및 예방을 위한 활동 필요성이 대두됨
    - 전남 지역 어르신 대상 범죄피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18년 13.2% (6,465건) → '19년 15.0% (7,443건) → '20년 15.3% (7,302건))

〈표 2-2〉 60세 초과 범죄 피해자 현황(범죄통계시스템 활용)

구 분	합 계	강력	절도	폭력	지능	풍속	기타형법	특별법
'18년	6,465 (13.2%)	78	1,030	1,505	842	1	563	2,446
'19년	7,443 (15.0%)	88	1,262	1,573	1,114	2	672	2,732
'20년	7,302 (15.3%)	67	1,397	1,530	1,192	3	653	2,460

○ 지역 기관과의 협업에 기반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

- 보이스피싱·학대·치매노인 실종·고독사 등 치안문제 탐색 및 법률 지원
- 치안간담회 개최를 통해 유관기관 연계 및 협력
- 위기 어르신 지속 발굴 및 모니터링을 통한 사후관리
- 어르신 범죄 예방 교육 및 홍보 병행(성공사례 우수표창 수여 등)

〈표 2-3〉 위기 어르신 발굴·보호를 위한 찾아가는 현장활동 추진실적

구분	맞춤형 면담	문제발굴					조치사항						교육 홍보 활동
		소계	보이스 피싱	학대	고독사 위험	기타	소계	상담	법률 지원	보호 연계	수사 의뢰	기타	
7월	14	36	7	2	2	25	51	15	0	18	0	18	37
8월	11	111	11	3	7	104	127	6	1	27	2	91	43
9월	22	122	11	5	13	93	127	17	3	40	1	66	71
누계	47	269	29	10	22	222	305	38	4	85	3	175	151

□ 어르신 실종예방 및 조기발견 대응체계 확립

- 치매 어르신 실종사건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이를 성공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전예방 방문점검 및 조기 발견 체계 구축이 필요함

- 최근 2년 간('18~'19) 전남 지역 치매 어르신 실종 사건 가운데 약 2.6%가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으며 생존이 된 경우에도 위독한 상태로 나타남

- 실종 전력 치매 어르신을 중심으로 선제적 방문점검 수행, 지자체 및 유관기관 연계 필요 사안에 대한 연계 의무화, 지문사전등록률 향상을 위한 스마트장비 보급 및 지원, 실종경보 문자 서비스 교육 및 홍보를 통한 적극 활용, 기관 협조 및 예산확보 등의 내용을 담은 조례개정 수행, 선제적 방문 점검 우수사례 인센티브 제공

〈표 2-4〉 어르신 실종예방 및 조기발견 대응체계 추진실적

구분	치매 지문사전등록						실종 경보 문자 활용	배회 감지기 교부	치매 안심센터 상담· 지원	홍보 활동
	소계 (건)	보호자등록 안전 드림웹	他기관 등록 치매 센터등	경 찰		등록률				
				현장 방문	경찰 관서					
7월	144	8	46	61	29	32.0	10	13	1	22
8월	140	9	59	48	24	32.2	6	6	0	11
9월	123	10	36	58	19	32.3	5	10	1	11
누계	407	27	141	167	72	32.3	21	29	2	44

#### □ 1인 가구 어르신 보호를 위한 지역사회 협력 활동 전개

- 소외된 1인 가구 어르신들은 사회적 혜택으로부터 고립되어 있으며 안정적인 삶의 유지가 어려운 실정임
  - 실제 전남 지역 65세 이상 1인 가구의 수는 2018년 99천 가구에서 2019년 101천 가구, 2020년 105천 가구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 이를 고려하면 1인 가구 어르신들의 보호서비스 수요가 절실히 요구됨
- 지자체·민간협력단체·유관기관과의 실질적인 협업을 수행함
  - 실무협의회를 통한 예산 및 인력확보
  - 지역에서 수행되는 어르신 보호정책과의 연계 강화
  - 어르신 보호정책에 대한 관심 및 인식 개선



## 제3장

# 전남 치안 및 자치경찰 현황 검토

제1절 전남 치안 현황

제2절 자치경찰위원회 및 주민참여조직 현황





## 제1절 전남 치안 현황

## 1. 치안 여건

## 1) 관내 개황

## (1) 개요

- 행정구역은 5개 시, 17개 군, 33개 읍, 196개 면, 8,588개 통·리, 24,246개 반으로 이루어짐
- 동(洞)에 비해 읍(邑)과 면(面)이 많은 농산어촌 및 도서 지역으로 지역특화 자원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관광·에너지·물류산업 등에 주력하고 있음
- 면적은 12,348km<sup>2</sup>으로 전국의 12.3%를 차지하고 있음
- 도서는 2,165개로 유인도 272개소 중 경찰관 미배치 지역은 143개소임
  - 유인도 272개소는 경찰 배치 119개소, 미거주 10개소, 경찰 미배치 143개소로 구성되어 있음
  - 경찰 미배치 143개소에 도서 지킴이 198명이 지정되어 있음

〈표 3-1〉 도서 지킴이 현황

경찰서											유형			
총계		목포	여수	고흥	해남	무안	보성	영광	완도	진도	계	이장	어촌계장	주민
개소	143	24	25	8	5	1	2	7	36	35	198	69	20	109
인원	198	37	25	13	10	3	2	12	48	48				

출처: 전남도청 섬해양정책과 자료

- 염전업은 주로 목포(신안)에서 이루어지며 양식업은 완도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 염전 등에 장애인이 불법으로 고용되거나 임금착취, 인권침해 사례 잔존 우려가 있음
  - 특히 사회안전망 취약지역인 도서 내 사회적 범죄는 다른 지역의 범죄에 비해 심각하고 충격적인 이슈로 부각하고 있음

〈표 3-2〉 전남지역 염전·양식업 현황<sup>6)</sup>

구분	합계	목포(신안)	여수	고흥	해남	완도	진도
계	5,076	1,381	187	52	86	3,085	285
염전	795	782	0	0	10	1	2
양식업	4,281	599	187	52	76	3,084	283

출처: 전남도청 자료

<sup>1)</sup>염전 20년말 양식업 21년 6월 말 기준

- 예산 규모는 8조 1,588억원으로 19년도 대비 약 10.7%(7,897억원)가 증가하였으나 재정자립도는 2020년을 기준으로 약 20%대로 전체 광역자치단체 중 최하위권을 기록함
  - 전남의 재정자립도는 23.3%로 전국에서 최하위이며 지역 내 모든 시·군의 재정자립도가 전국 평균을 하회하고 있음(한국은행, 2021)
- 공무원 정원은 6,237명으로 이는 인구 200~300만 도(道) 지역(충남, 전북, 전남, 경북)의 평균 공무원 정원인 6,168명에 비해 다소 높음
  - 과장급 이상 정원은 총원 6,237명 가운데 147명(2.4%)이고 공무원 1인당 주민수는 297명으로 인구 200~300만 도(道) 평균인 342명에 비해 다소 적음

6) 염전·양식장 등 장애인 고용 인권침해 관련 실태조사는 신안군은 연1회 7월에 시행되고 있으며, 타 시·군은 인권침해 관련 주기적 실태조사·점검이 없음

## (2) 인구

### □ 개황

- 전남지역 인구수는 1,851,549명이며 70년대 이후로 연평균 29,000명 감소함
- 2000년 이후 인구의 자연 감소 및 타지 유출 등으로 인구감소의 폭이 전국에서 가장 큼(한국은행, 2021)
  - 전남은 인구의 자연 감소가 진행 중인 가운데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고 정주 여건도 열악하여 인구감소에 상대적으로 더 취약한 상황임
- 자치경찰의 잠재적 수요 인구인 여성·아동·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인구수는 2020년을 기준으로 여성은 920,934명, 0세~19세 아동은 299,510명, 장애인은 140,942명에 해당함

### □ 농림·어업

- 농림·어업이 지역경제에서 치하는 비중이 크지만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줄고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농·어촌 마을공동체의 안정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음(한국은행, 2021)
  - 농림·어업이 지역내총생산(GR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타 지역에 비하여 크지만 노동생산성은 타 산업에 비하여 낮은 수준임
-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인구 수는 2000년 이후 절반 이상 감소하였고 고령화율은 상승하고 있음(한국은행, 2021)
  - 인구 수는 2000년 68.7만 명에서 2020년 34.0만명으로 감소하고 고령화율은 35.7%에서 45.9%로 상승하였음

### □ 고령자

- 50세 미만 인구가 감소하는 대신에 65세 이상 인구는 증가하여 고령화율이 빠르게 상승하였음(한국은행, 2021)

- 65세 이상 어르신 비율이 23.8%(43만명)를 차지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치매 환자 수는 50,867명(2020년 기준)임
  - 어르신 비율이 높다는 것은 치매 노인 위기뿐만 아니라, 노인 대상 범죄 및 노인학대 역시 심각한 사회문제로 나타날 수 있음
  - 전남지역 노인보호전문기관 학대 신고는 410건('18년) → 518건('19년) → 503건('20년)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단절을 경험하고 있는 65세 이상 어르신 1인가구가 2020년을 기준으로 전국 총가구 대비 14.2%로 전국 1위를 기록함
  - 전남 기준 2018년 99천 가구 → 2020년 105천 가구
  - 향후 노인 1인가구의 치안수요가 증대되리라고 사료됨

〈표 3-3〉 전남지역 어르신 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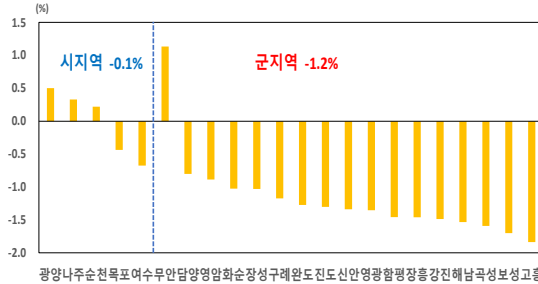
(단위: 명, 가구)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65세 이상 인구	413,132	422,548	435,880
65세 이상 1인 거주 가구	99,832	100,769	104,860
65세 이상 치매환자	47,200	48,931	50,867

출처: 통계청 및 중앙치매센터(2018~2020), '21년 도정 주요 통계

#### □ 시·군별

- 군 지역이 시 지역에 비하여 인구감소 속도가 빠르고 고령화율과 소멸위험도도 상대적으로 높은 상황임
  - 군 지역은 2000년말 104.4만명에서 2020년말 79.8만명으로 연평균 1.2% 감소하였고 시 지역은 2000년말 108.6만명에서 2020년말 105.4만명으로 연평균 0.1% 감소하였음

〈그림 3-1〉 전남 시·군별 인구 증감률<sup>1)</sup>

주: 1) 2000~2020년 연평균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한국은행 재인용

- 65세 이상의 고령인구 비율이 전남지역 평균(23.9%)보다 높은 지역은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등 16개 군임
  - 군 단위에서는 무안군의 고령인구 비율이 유일하게 전남지역 평균보다 낮음
  - 시 지역(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의 고령인구 비율은 전남지역 평균보다 낮음
- 외국인 거주비율이 전남지역 평균(1.74%)보다 높은 지역은 나주시, 담양군,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임
  - 특히, 영암군은 7.49%로 전남지역에서 외국인 거주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이며, 완도군(4.34%), 진도군(4.48%)도 높은 지역임

〈표 3-4〉 시·군별 사회적 약자 거주인구 현황(2021년 6월 기준)

시·군별	인구(수)	여성(%)	고령인구(%)	아동(%)	외국인(%)
총계	1,872,900	49.5	23.9	15.6	1.74
목포시	223,874	50.0	17.4	18.4	1.39
여수시	283,115	48.6	19.9	16.3	1.66
순천시	283,873	50.1	16.1	18.6	0.73
나주시	119,081	49.4	22.6	16.5	2.20

시·군·별	인구(수)	여성(%)	고령인구(%)	아동(%)	외국인(%)
광양시	152,078	47.9	13.6	18.9	0.99
담양군	47,395	49.2	31.2	11.2	1.88
곡성군	28,368	50.8	36.7	10.5	1.62
구례군	25,444	51.4	35.1	11.2	0.75
고흥군	64,327	51.1	41.7	9.8	1.50
보성군	40,261	51.2	39.2	10.4	1.06
화순군	62,937	50.6	27.3	14.1	1.26
장흥군	37,536	51.4	35.1	12.2	1.37
강진군	34,670	51.6	35.3	11.9	1.23
해남군	69,362	50.3	33.0	12.8	1.92
영암군	57,280	46.7	27.2	13.5	7.49
무안군	90,226	49.6	20.0	19.4	1.77
함평군	32,146	49.5	37.4	10.3	1.97
영광군	53,385	49.8	29.6	14.6	1.71
장성군	44,855	48.5	30.7	13.0	2.14
완도군	51,548	48.2	33.2	12.8	4.34
진도군	31,728	49.0	34.0	12.0	4.48
신안군	39,411	46.3	37.0	8.9	1.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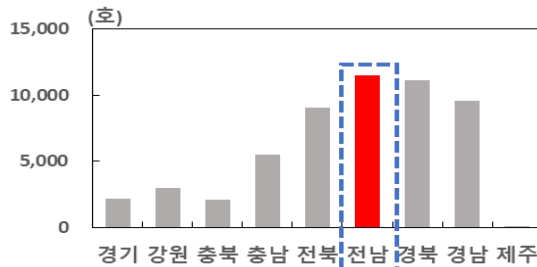
### (3) 공·폐가

- 공·폐가 지역은 범죄 악용장소로 활용될 위험성이 높으며 주민들의 불안과 지역 치안에 대한 인식을 부정적으로 형성할 소지가 있음
  - 전남 영광에서 50대 여성이 사망한 사건(19. 2. 18. 뉴시스)과 충북 청주에서 노숙인이 머물던 폐가 화재 사건(19. 1. 22. MBC) 모두 장시간 동안 방치된 공·폐가에서 발생했다는 공통점을 보임

〈표 3-5〉 전남지역 공·폐가 현황

구분	총계	목포	여수	순천	나주	광양	고흥	해남	무안	장흥	보성
개소	12,101	2,485	645	205	421	100	1,818	656	251	198	389
	영광	화순	함평	영암	장성	강진	담양	곡성	완도	진도	구례
	606	1,639	726	239	170	290	236	97	339	420	171

- 특히, 전남지역의 농촌 빈집 수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추정이 됨
- 농촌 빈집 수는 농촌빈집실태조사와 한국전력 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할 수 있음
  - 2019년 주택총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빈집 수를 추정하면 전라남도의 농촌 빈집 수는 11,485호임
  - 빈집 비율은 전체 단독주택 수를 기준으로 3.42%, 일반 단독주택 수를 기준으로 3.61%로 추정됨(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0)
  - 먼 지역을 기준으로 하면 전체 단독주택 수를 기준으로 3.98%, 일반 단독주택 수를 기준으로 3.97%로 추진됨(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0)
  - 전남 농촌지역 총 전력 계약 가구인 593,906가구 중에서 전력을 사용하지 않은 계약 가구는 27,556가구로 전체의 4.64%이며 월10kwh이하로 전력을 사용한 계약 가구는 약 41,105가구로 전체의 6.92%임(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0)

〈그림 3-2〉 광역도 농촌 지역 빈집 수<sup>1)</sup>

주: 1) 2019년 기준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촌빈집실태조사」, 한국은행 재인용



〈표 3-6〉 한전 자료 기반 시도별 농촌지역 빈집분포

순위	사·도	전체 계약 가구	월 10kwh 이하 전력 사용			전력 사용 없음네		
			계약 가구 수	비율	증가량	계약 가구 수	비율	증가량
1	전라북도	302,414	22,478	7.43	2.17	12,852	4.25	1.03
2	전라남도	593,906	41,105	6.92	1.52	27,556	4.64	1.14
3	인천광역시	50,057	3,070	6.13	1.19	1,875	3.75	0.66
4	경상북도	762,326	46,010	6.04	0.90	29,816	3.91	0.58
5	경상남도	677,005	38,137	5.63	0.83	22,882	3.38	0.62
6	충청북도	309,876	16,151	5.21	2.83	1,706	0.55	0.37
7	강원도	314,933	14,672	4.66	2.13	2,100	0.67	0.48
8	충청남도	672,884	30,515	4.53	0.79	18,376	2.73	0.37
9	세종특별자치시	61,817	2,320	3.75	1.30	1,276	2.06	0.76
10	울산광역시	117,861	3,837	3.26	1.06	2,172	1.84	0.57
11	제주특별자치도	99,778	3,244	3.25	-0.93	1,577	1.58	-0.77
12	경기도	1,104,577	34,943	3.16	0.26	18,109	1.64	-0.07
13	부산광역시	45,276	1,336	2.95	0.73	738	1.63	0.40
14	대구광역시	110,106	2,706	2.46	-0.22	1,660	1.51	-0.14
전체		5,222,816	260,524	4.99	0.93	142,695	2.73	0.40

〈표 3-7〉 농촌빈집실태조사 기반 시도별 농촌 빈집분포

순위	사·도	농촌전체			읍부			면부		
		빈집수	전체 단독주택 기준 비율	일반 단독주택 기준 비율	빈집수	전체 단독주택 기준 비율	일반 단독주택 기준 비율	빈집수	전체 단독주택 기준 비율	일반 단독주택 기준 비율
1	세종시	774	4.90	5.76	50	1.69	3.01	724	5.64	6.15
2	전라북도	9,030	4.82	5.04	1,502	4.98	5.50	7,528	4.79	4.96
3	전라남도	11,485	3.42	3.61	1,460	1.73	1.94	10,025	3.98	4.13
4	경상남도	9,588	3.38	3.72	1,196	2.12	2.60	8,392	3.69	3.97
5	경상북도	11,112	3.16	3.39	1,874	1.99	2.31	9,238	3.58	3.75
6	인천광역시	657	2.45	2.75	49	1.46	1.60	608	2.59	2.92
7	충청남도	5,501	2.11	2.28	1,190	1.78	2.05	4,311	2.23	2.36
8	강원도	3,015	1.89	2.13	939	1.95	2.28	2,076	1.86	2.07

순위	시·도	농촌전체			읍부			면부		
		빈집수	전체 단독주택 기준 비율	일반 단독주택 기준 비율	빈집수	전체 단독주택 기준 비율	일반 단독주택 기준 비율	빈집수	전체 단독주택 기준 비율	일반 단독주택 기준 비율
9	충청북도	2,066	1.40	1.52	472	1.18	1.40	1,594	1.48	1.57
10	울산광역시	291	1.34	1.76	95	0.97	1.51	196	1.64	1.90
11	경기도	2,192	0.89	1.05	651	0.78	1.02	1,541	0.95	1.07
12	대구광역시	25	0.19	0.26	22	0.26	0.38	3	0.07	0.08
13	제주특별 자치도	14	0.03	0.03	8	0.02	0.02	6	0.05	0.06
14	부산광역시	-	-	-	-	-	-	-	-	-
	합계	55,750	2.64	2.90	9,508	1.65	1.97	46,242	3.01	3.21

- 공·폐가 지역은 인적이 드물고 방범 시설 또한 부족하여 범죄 은폐 용도로 활용될 수 있으며 화재위험, 청소년 비행 등으로 인한 주민 불안 증대 및 체감 치안 악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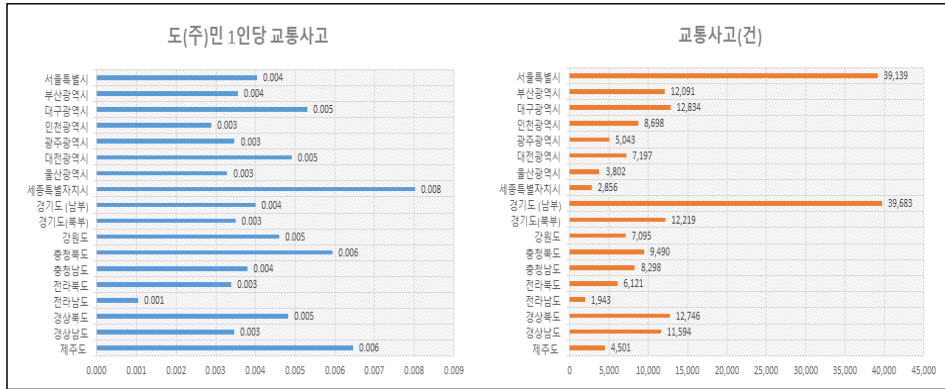
## 2) 치안 수요

### (1) 교통사고)

- 시도경찰청별 교통사고 수와 도민(주민) 1인당 교통사고 건수를 계산하여 비교한 결과, 전남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남
- 전체 교통사고 건수는 전남이 1,943 건으로 가장 적으며 수도권 지역인 경기도 남부(39,683 건)와 서울특별시(39,139 건)가 가장 높게 나타남
- 반면 도민(주민) 1인당 교통사고 건 수를 비교해볼 때 전체 사고 건수가 높았던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남부 지역은 낮은 수치를 보임(0.004 건)
-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도의 경우 전체 건수는 낮은 편이지만 도민(주민) 1인당 교통사고 건수는 각각 0.008 건과 0.006 건으로 비교적 높은 편임

7) 시·도 교통사고 건수는 2020년을 기준으로 하며,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의 교통사고 건수는 2019년 기준임

〈그림 3-3〉 교통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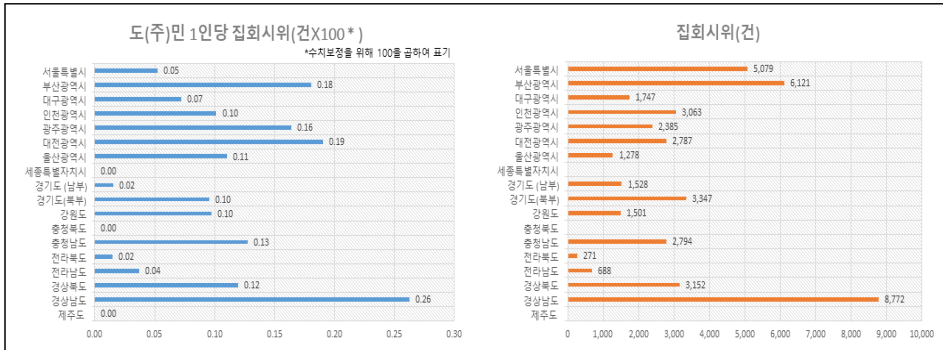


## (2) 집회 시위<sup>8)</sup>

- 전남의 집회 시위 건수는 타 시·도와 비교하여 적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전남지역의 전체 집회 시위 건수는 688건이며 도민1인당 집회시위 건수는 0.001보다 적음
- 집회 시위 건수와 도민(주민) 1인당 집회 시위 건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남으로 나타남
- 광주광역시와 대전광역시의 집회 시위 건수는 각각 2,385건, 2,787건으로 여타 시도에 비해 낮은 편이지만 도민(주민) 1인당 집회 시위 건수로 비교하면 비교적 높게 도출됨
  - 다만 집회 시위 건수는 고정된 패턴을 보이기보다는 지역의 현안 여부에 따라 달라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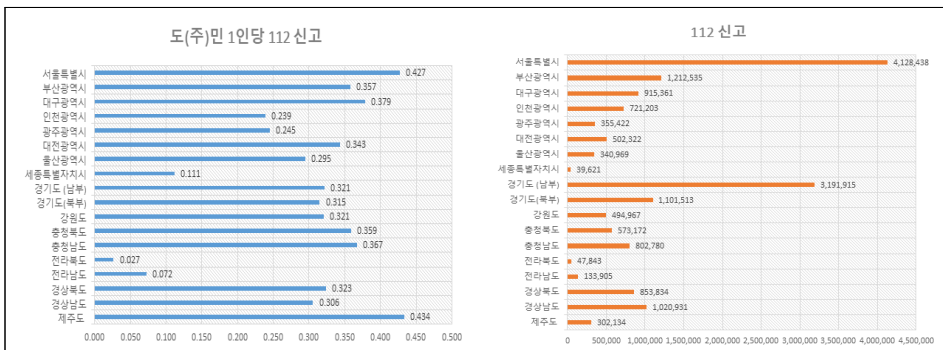
8) 시·도 집회시위 건수는 2020년을 기준으로 하며, 서울특별시는 2019년, 인천광역시는 2018년 기준임

〈그림 3-4〉 집회 시위

(3) 112신고<sup>9)</sup>

- 전남의 112신고 건수와 도민(주민) 1인당 112 신고 건수는 세종, 전북지역과 함께 타 시도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112 신고가 건수는 서울(약 413만 건)과 경기남부(약 319만 건)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 도민(주민) 1인당 112신고를 살펴보면 제주도(0.434건), 서울특별시(0.427건), 대구광역시(0.379건) 등의 순서로 나타남

〈그림 3-5〉 112 신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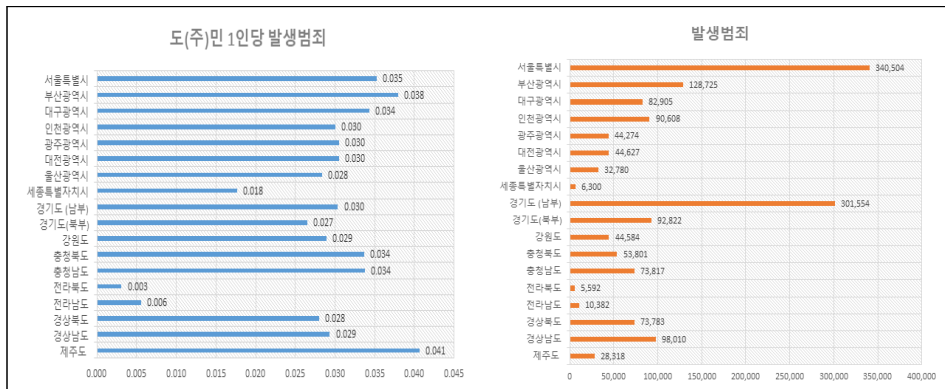


9) 시·도 112신고 건수는 2020년을 기준으로 하며, 서울특별시는 2019년 기준임

#### (4) 발생 범죄<sup>10)</sup>

- 전남지역의 경우 전체 발생 범죄 수(약 10만 건) 및 도민(주민) 1인당 발생 범죄 수(0.006 건) 모두 여타 시도에 비해 낮은 편임
  - 시도경찰청별 전체 발생 범죄 수는 서울경찰청(약 34만 건)과 경기남부경찰청(약 30만 건)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남, 전북, 세종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음
  - 도민(주민) 1인당 발생 범죄는 제주도(0.041건), 부산광역시(0.038건) 등의 순서로 나타남
- 경기 남부 지역의 경우 전체 발생 범죄 수(약 30만 건)는 전체 시·도 가운데 2순위로 높지만, 1인당 발생 범죄 수(0.030 건)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에 속함
- 반대로 제주지역의 경우 전체 발생 범죄 수(28,318 건)에 비해 1인당 발생 범죄 수가 높은 편임(0.041 건)

〈그림 3-6〉 발생 범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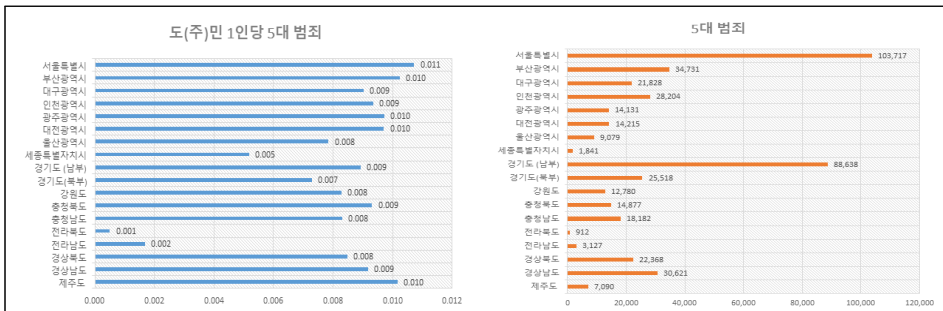


10) 시·도 발생범죄 건수는 2020년을 기준으로 하며,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대구광역시·인천광역시·울산광역시·강원도·충청북도·충청남도·제주도는 2019년 기준임

### (5) 5대 범죄

- 전남의 5대 범죄 사건 수와 도민(주민) 1인당 5대 범죄 사건 수는 전북 다음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남
  - 5대 범죄 사건 수는 서울(약 10만 건)과 경기남부(약 9만 건)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음
  - 도민(주민) 1인당 5대 범죄는 서울특별시가 0.011건으로 가장 높으며 이어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제주도(0.010건) 등의 순서로 나타남
  - 제주지역의 경우 5대 범죄 사건 수에 비하여 도민(주민) 1인당 6대 범죄 건수가 높게 도출됨

〈그림 3-7〉 5대 범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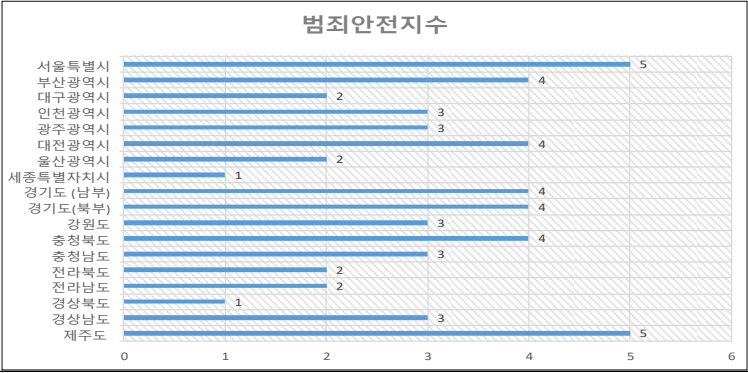


### (6) 범죄안전지수<sup>11)</sup> 및 체감안전도

- 각 시도경찰청의 범죄안전지수를 비교한 결과, 전남경찰청 관할지는 2등급으로 상대적으로 범죄의 측면에서 안전함을 확인하였음
  - 제주와 서울의 범죄안전지수는 5등급으로 나타나 해당 지역이 범죄에 다소 취약함을 확인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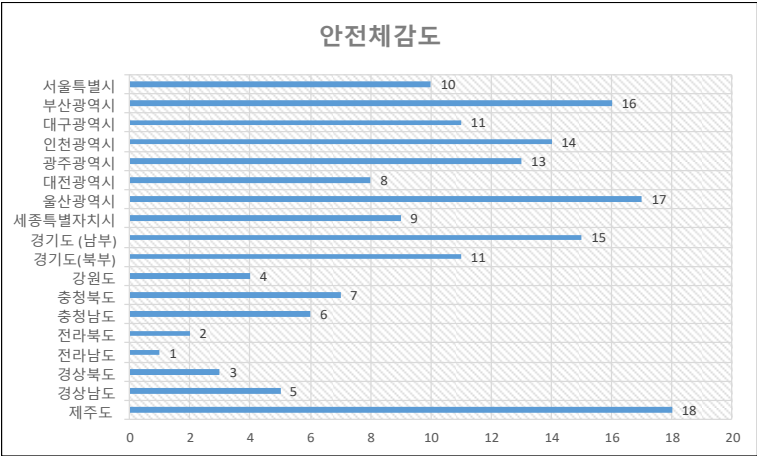
11) 지역안전지수는 안전에 관한 각종 통계를 활용하여 자치단체별 안전 수준을 1~5등급으로 계량화한 등급이다. 1등급일수록 동일 단위 행정구역 내에서 상대적으로 안전함을 의미한다. 산출분야는 7개 분야로 교통사고, 화재, 범죄, 자연재해,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등을 포함하고 있다(행정안전부, 2021)

〈그림 3-8〉 범죄안전지수



- 각 시·도경찰청의 체감안전도를 비교한 결과, 전남의 체감안전도는 1위로 나타나 범죄안전지수와 비슷한 결과를 도출하였음
- 즉 전남은 다른 광역시도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범죄에 다소 안전한 지역이며 체감안전도도 높은 지역으로 확인됨

〈그림 3-9〉 안전체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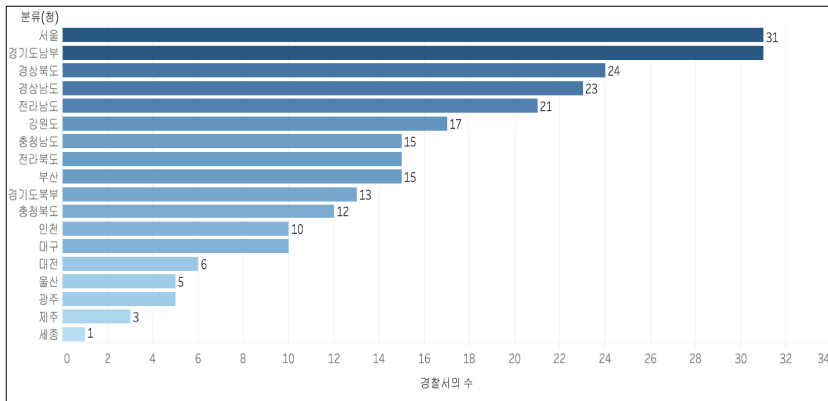


## 2. 치안 역량

### 1) 조직

- 전남경찰청은 3부 10과 3담당관 1실로 이루어져 있음
  - 3부: 공공안전부, 수사부, 자치경찰부
  - 10과: 공공안전부 소속의 경무기획 정보화장비과, 경비과, 공공안녕정보 외사과; 수사부 소속의 수사과, 형사과, 과학수사과, 안보수사과; 자치경찰부의 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과, 교통과
  - 3담당관: 청문감사 담당관, 홍보 담당관, 수사심사담당관
  - 1실: 112치안종합상황실
- 소속 기관은 경찰서 21개, 지구대 15개, 파출소 191개, 치안센터 122개임

〈그림 3-10〉 지역별(시·도) 경찰서 현황



- 경찰서(2019년도 기준)는 관할인구 20~30만명의 경우 3개, 10~20만명의 경우 2개, 10만 미만의 경우 1개로 총 21개임



〈그림 3-11〉 전남경찰청 조직도



- 경찰서별 지역관서(지구대, 파출소, 치안센터) 현황을 살펴보면 목포(48개), 여수(31개), 순천(20개)이 가장 많으며 무안(9개), 장흥(10개), 함평(10개), 구례(9개)가 가장 적음

〈표 3-8〉 전라남도 지역별 지역관서(지구대, 파출소, 치안센터) 현황

구분	계	지구대	육지파출소	도서파출소	육지치안센터	도서치안센터
목포	48	1	18	7	2	20
여수	31	1	15	2	6	7
순천	20	2	15	0	3	0
나주	16	1	10	0	5	0
광양	11	2	6	0	3	0
고흥	19	0	12	0	6	1
해남	14	1	11	0	2	0
무안	9	1	6	0	2	0
장흥	10	1	6	0	3	0
보성	15	0	8	0	6	1
영광	13	1	6	1	4	1
화순	15	1	7	0	7	0
함평	10	0	7	0	3	0
영암	12	1	5	0	6	0
장성	12	0	7	0	5	0
강진	11	1	6	0	4	0
담양	12	0	6	0	6	0
곡성	11	0	7	0	4	0
완도	19	1	4	6	0	8
진도	11	0	6	1	1	3
구례	9	0	6	0	3	0

○ 지구대 및 파출소 별 관할인구는 아래의 표와 같음

〈표 3-9〉 지구대 및 파출소 별 관할인구

구분	계	3천 이하	3~5천	5천~1만	1~2만	2~3만	3~4만	4~5만	5만 이상
지구대	15	0	0	0	3	4	2	3	3
파출소	191	36	71	48	15	16	4	1	0

- 전남경찰청 자치경찰 업무 관련 협력단체는 경찰발전위원회, 보안자문위원회, 집시자문위원회, 외사자문협의회가 있음

〈표 3-10〉 자치경찰 협력단체 현황

구분	경찰발전협의회	보안자문협의회	집시자문위원회	외사자문협의회
성별	남 22명, 여 5명	남 24명, 여 0명	남 6명, 여 1명	남 9명, 여 1명
연령	50대 이상 27명	40대 2명, 50대 이상 22명	40대 1명 50대 이상 6명	40대 2명 50대 이상 8명

## 2) 인력

- 국가경찰 인력은 6,102명으로 경찰관이 약 89.4%를 차지하고 있음

〈표 3-11〉 전체 인력('21.3월 기준)

총계	경찰관	의경	일반직	무기계약직 등
6,102	5,445	357	163	137
100%	89.4%	5.8%	2.6%	2.2%

- 계급별 인력을 살펴보면 경위가 51.6%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총경급 이상 인원은 1% 미만임
- 경찰서 및 지역경찰관서에 근무하는 인원은 약 84.7%이며 경찰청에 근무하는 인원은 약 15.3%를 차지하고 있음

〈표 3-12〉 계급별 인력

구분	계	치안감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	경사	경장	순경
정원	5,618	1	3	34	111	497	724	1,239	1,423	1,586
현원	5,445	1	3	34	115	706	2,813	692	773	308
과결	-173	0	0	0	4	209	2,089	-547	-650	-1,278
점유율	100%	0.7			2.1	13	51.6	12.7	14.2	5.7

〈표 3-13〉 관서별 인력

총계	전남청		경찰서 · 지역경찰관서	
	전남청	기동 · 의경	경찰서	지역경찰관서(지 · 파)
5,445	627	204	2,322	2,292
100%	11.5%	3.8%	42.6%	4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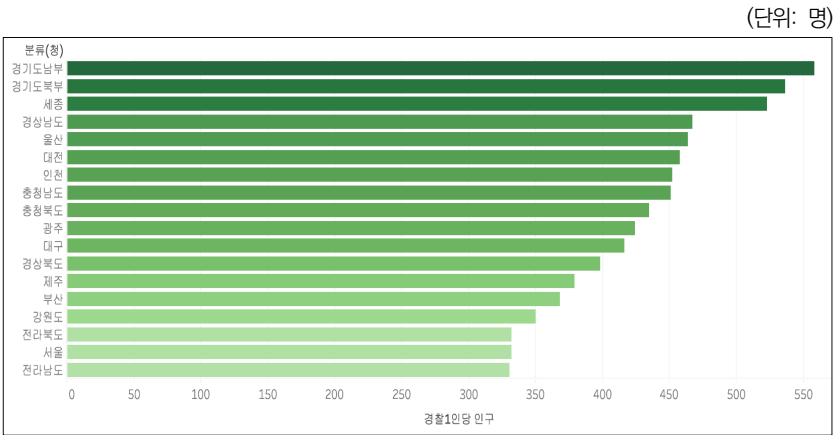
○ 경찰 1인당 담당 주민 수(2019년도 기준)는 342명으로, 다른 시·도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적음

〈표 3-14〉 경찰 1인당 인구수

(단위: 명)

연도	2017	2018	2019
주민등록인구	1,896,424	1,882,970	1,868,745
경찰공무원 정원	5,239	5,342	5,464
경찰공무원 1인당 담당 주민수	362	352	342

〈그림 3-12〉 시도별 전라남도 경찰 1인당 담당 인구수



3) 예산

- 19년도 기준 전라남도 경찰재산(단위: 천 원) 현황은 토지(127,206,919), 건물(148,629,973), 선박(168,149), 무채재산(4,652,406)으로 총 가액계는 281,151,161으로 확인됨
- 2021년 예산은 537억 36백만 원이며 2020년 예산에 비하여 80억 38백만 원이 감소되었음

〈표 3-15〉 예산

(단위: 만 원)

구분	'20년 예산	'21년 예산	증감	비고
【전남청 총예산】 ※ 인건비 미포함	617억 74백	537억 36백	감 80억 38백	감 13.0%
- 기본경비(전남)	206억 71백	170억 35백	감 36억 36백	감 17.6%
- 주요사업비	411억 3백	367억 1백	감 44억 2백	감 10.7%

## 제2절 자치경찰위원회 및 주민참여조직 현황

### 1. 자치경찰위원회

#### 1) 가구 및 정원

- 전남 자치경찰위원회는 2과 5팀 25명으로 구성되었음
  - 기구: 2과 (자치경찰총괄과, 자치경찰정책과), 5팀(운영팀, 인사관리팀, 치안기획팀, 치안협력팀, 인권감시팀)
  - 도 전보 인력 22명, 도경찰청 파견 인력 3명임

#### 2) 주요 분장 사무

- 자치경찰총괄과는 운영팀과 인사관리팀으로 구성되어 있음
  - 운영팀의 주요 사무는 자치경찰위원회 의안 및 회의록 작성 등 위원회 의사운영, 자치경찰사무국 운영 지원, 자치경찰위원장·위원 보좌, 의회관련 업무, 자치경찰담당 공무원 복무에 관한 사항, 자치경찰사무 기록물 관리, 자치경찰사무 예산, 장비, 통신 등에 대한 정책수립 및 운영, 자치경찰사무 회계, 차량, 물품, 자산 관리 등에 관한 사항, 그 밖의 위원회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 등을 포함함
  - 인사관리팀의 주요 사무는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임명,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 운영, 전남경찰청장 임용 협의, 경찰서장 평가 대응, 자치경찰 담당 공무원 승진·전보 인사관리, 자치경찰 담당 공무원 후생복지, 자치경찰 담당 공무원 교육훈련 등을 포함함
- 자치경찰정책과는 치안기획팀, 치안협력팀, 인권감사팀으로 구성되어 있음
  - 치안기획팀의 주요 사무는 자치경찰사무 종합 기획 및 조정, 자치경찰위원회 시행목표 수립 및 평가, 중요사건사고 및 현안 점검, 비상사태시 경찰청장 지휘·감독, 자치경찰운영 자치법규 관리를 포함함

- 치안협력팀의 주요 사무는 전남경찰청 등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의 협력·조정,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심의·조정 요청, 자치경찰위원회 홍보 및 타 기관 협력 등을 포함함
- 인권감사팀의 주요 사무는 자치경찰사무 관련 부패방지 대책, 자치경찰사무 관련 인권침해 방지대책, 자치경찰사무 청렴도 향상 업무, 자치경찰사무 감사, 감찰, 징계, 고충심사 관련 업무 등을 포함함

### 3) 예산

- 자치경찰위원회 예산 규모는 약 3억 5천만 원임
  - 자치경찰총괄과 예산 규모가 약 2억 5천 백만 원(약 72%)이며 자치경찰정책과 예산 규모가 약 9천 8백만 원(약 28%)임
  - 사업별 세출 예산은 정책사업비가 약 1억 2천 6백만 원(약 36%)이며 행정운영경비가 약 2억 2천 4백만 원(약 64%)임

## 2. 주민참여조직

### 1) 생활안전 협력단체

#### 자율방범대

- 전남지역의 자율방범대는 347개 조직 총 7,672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 자율방범대는 위험지역 야간순찰, 위기 어르신 발굴·지원, 지역공동체 활동 등을 수행하여 지역안전 및 주민화합을 도모함
  - 영광군 낙월면 자율방범대는 ‘안전한 낙월만들기’를 위해 치안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어려운 이웃돕기 성금 200만 원 기탁함(영광군민신문, 2021.03.08.)
  - 광양시 진상면 자율방범대는 지역공동체와 협력하여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을 통하여 지역 어르신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

하는 역할을 수행함(NSP 통신, 2021.05.07.)

- 함평군 자율방범대는 함평경찰과 협력하여 위기 어르신의 안전보호를 목적으로 ‘찾아가는 지역 안전순찰’ 및 ‘안전환경 조성’ 등의 활동을 전개함(데일리한국, 2021.09.03.)

#### □ 생활안전협의회

- 생활안전협의회는 지역사회의 치안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안전 캠페인·주민참여 안전활동 등을 수행함
  - 총 187개 조직, 총 2,841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표 3-16〉 자율방범대 및 생활안전협의회 현황

자율 방범대	인원 ('21.7월까지 누적)		생활안전 협의회	인원('21.7월까지 누적)	
	남	여		남	여
347	6,420	1,252	187	2,672	169

## 2) 교통안전 협력단체

#### □ 모범운전자회

- 모범운전자회는 선진 교통문화의 확립을 목적으로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며 지역의 교통안전을 수립함
  - 최근 전남지역 모범운전자회는 ‘전남자치경찰 파트너스’를 체결해 전남도자치경찰위원회를 포함한 여러 유관 단체와 협력을 통해 정책홍보, 도민 의견 수렴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연합뉴스, 2021.08.20.)
- 전남지역의 경우 총 637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순천, 목포, 여수가 63명, 62명, 60명으로 가장 많음



〈표 3-17〉 모범운전자회

계	목포	여수	순천	나주	광양	고흥	해남	무안	장흥	보성
637	62	60	63	34	54	29	27	25	15	34
영광	화순	함평	영암	장성	강진	담양	곡성	완도	진도	구례
21	7	16	27	40	24	28	26	19	11	15

#### □ 녹색어머니회

- 녹색어머니회는 학교·지자체·교육지원청 등의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청소년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조성하고 학교폭력예방을 도모하는 등 활동을 전개함
- 전남지역의 경우 147개 학교 14,075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여수지역 녹색어머니회가 43개 학교의 3,086명으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여수 녹색어머니회는 '2019년 으뜸 녹색어머니회' 인증패를 받는 등 대외적으로 우수한 활동을 인정받음(뉴스핌, 2020.03.12.)
  - 최근 전남녹색어머니연합회는 지자체·전라남도경찰청·모범운전자회 등 여러 관련 단체와 함께 협력하여 안전한 전남 만들기를 위해 '교통안전 캠페인'을 개최하였음(전라남도 보도자료, 2021.06.07.)

〈표 3-18〉 녹색어머니회

구분	계	목포	여수	순천	나주	광양	고흥	해남	무안	장흥	보성
학교	147	13	43	16	3	15	1	2	6	1	4
인원	14,075	978	3,086	2,377	147	3,000	16	63	1,402	70	140
	영광	화순	함평	영암	장성	강진	담양	곡성	완도	진도	구례
	2	3	11	4	2	1	14	1	2	1	2
	73	300	140	1,849	154	36	103	31	65	11	34

## 제4장

# 전남 자치경찰 치안정책 개발을 위한 기초 조사

제1절 도민 의견수렴

제2절 해외 사례 조사



## 제1절

## 도민 의견수렴

## 1. 도민 설문조사

## 1) 조사 개요

☐ 조사 기간

- 설문조사는 2021년 8월 31일부터 9월 10일까지 실시하였음

☐ 조사 대상

- 전라남도 22개 지자체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시행하였음

☐ 조사 내용

- 설문조사는 크게 인구 특성, 자치경찰에 대한 인식, 생활안전 및 범죄예방 활동, 교통안전 활동, 사회적 약자 보호 활동, 분야별 중요도로 이루어지며 구체적인 문항의 구성은 다음과 같음
  - 인구특성: 성별, 연령, 직업, 거주지역, 거주지역 유형
  - 자치경찰에 대한 인식: 인지도, 치안향상에 대한 기대
  - 생활안전 및 범죄예방 활동: 범죄 안전성, 생활안전활동 만족도, 범죄 위험요소, 생활안전 위협장소, 범죄예방 활동, 치안활동 참여, 기타 생활안전 활동
  - 교통안전 활동: 교통 안전성, 교통활동 만족도, 교통안전 위협 요소, 교통 위반 위협 요소, 교통안전 강화, 교통약자 보호, 기타 교통안전 활동
  - 사회적 약자 보호 활동: 사회적 약자 안전성, 사회적 약자 보호활동 만족도,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사회적 약자 보호활동, 범죄 피해자 지원책, 기타 사회적 약자 보호 활동

- 종합의견: 분야별 중요도, 전남 자치경찰에 바라는 점

〈표 4-1〉 ‘전남 자치경찰에 바란다’ 도민 설문조사 문항 구성

구분	문항	비고
인구 특성	Q1. 성별	
	Q2. 연령	
	Q3. 직업	
	Q4. 거주지역	
	Q5. 거주지역 유형	
자치경찰에 대한 인식	Q6. 인지도	5점 척도
	Q7. 효과성	5점 척도
생활안전 및 범죄예방 활동	Q8. 범죄 안전성	5점 척도*
	Q9. 생활안전활동 만족도	5점 척도**
	Q10. 범죄 위험요소	
	Q11. 생활안전 위협장소	2개 항목 필수 응답
	Q12. 범죄예방활동	
	Q13. 치안활동 참여	
	Q14. 기타 생활안전 활동	
교통안전 활동	Q15. 교통 안전성	5점 척도*
	Q16. 교통활동 만족도	5점 척도**
	Q17. 교통안전 위협 요소	
	Q18. 교통위반 위협 요소	
	Q19. 교통안전 강화	
	Q20. 교통약자 보호	
	Q21. 기타 교통안전 활동	
사회적 약자 보호 활동	Q22. 사회적 약자 안전성	5점 척도*
	Q23. 사회적 약자 보호활동 만족도	5점 척도**
	Q24.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2개 항목 필수 응답
	Q25. 사회적 약자 보호활동	
	Q26. 범죄 피해자 지원책	
	Q27. 기타 사회적 약자 보호 활동	
종합 의견	Q28. 분야별 중요도	
	Q29. 전남 자치경찰에 바라는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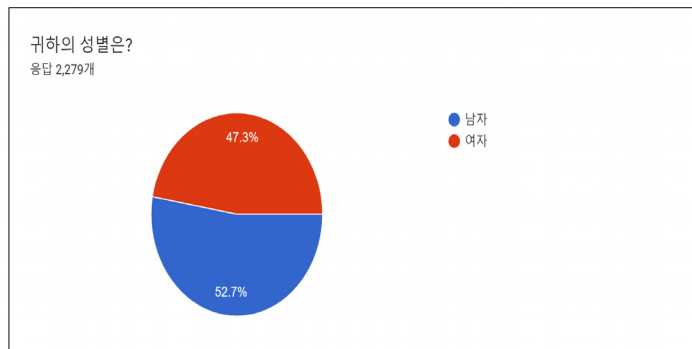
\*안전성: 매우 안전하다(1점), 안전하다(2점), 보통(3점), 불안하다(4점), 매우 불안하다(5점)

\*\*만족도: 매우 만족하다(1점), 만족하다(2점), 보통(3점), 불만족하다(4점), 매우 불만족하다(5점)

## 2) 공통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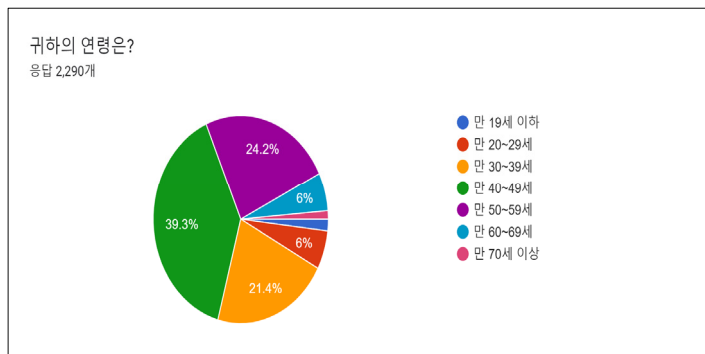
- 참여자는 총 2306명으로 남자는 1202명(52.7%)이며 여자는 1077명(47.3%)임 (미응답 27명)

〈그림 4-1〉 응답자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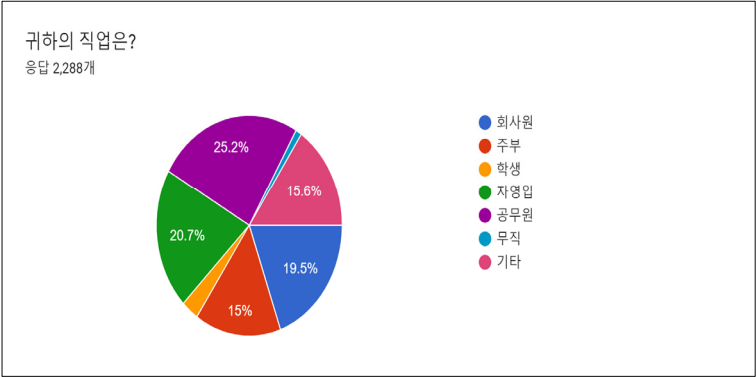
- 연령은 40~49세가 900명(39.3%), 50~59세가 554명(24.2%), 30~39세가 490명(21.4%) 참여하였음

〈그림 4-2〉 응답자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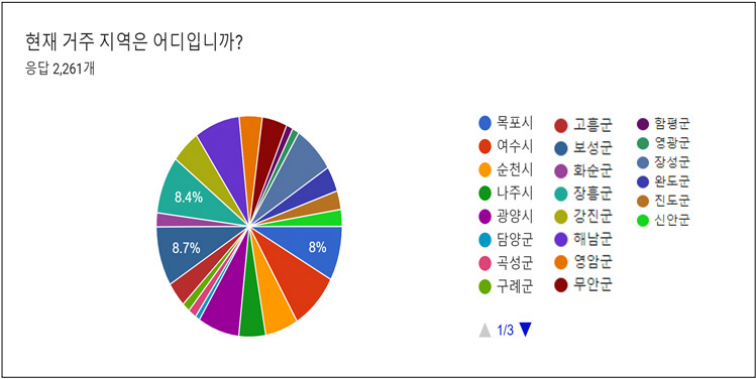
- 참여자의 직업은 공무원(25.2%), 자영업(20.7%), 회사원(19.5%), 기타(15.6%) 순임

〈그림 4-3〉 응답자 직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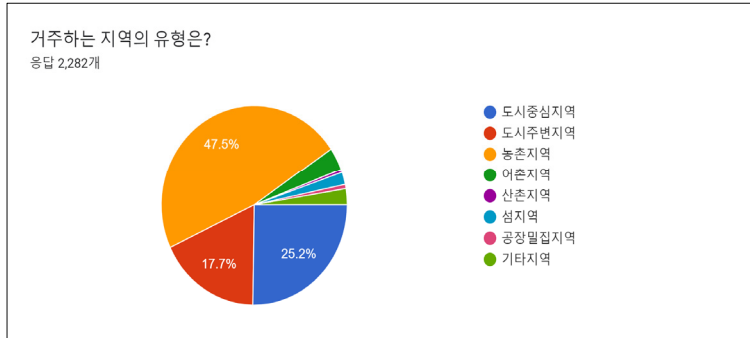
○ 참여자의 거주지역은 보성(8.7%), 장흥(8.4%), 여수(8.4%), 목포(8.0%), 해남(7.9%), 광양(7.2%), 장성군(7.1%) 지역 순임

〈그림 4-4〉 응답자 거주지역



○ 참여자 거주지역의 유형은 농촌·산촌(48.0%), 도시중심(25.2%), 도시주변(17.7%), 어촌·도서(5.7%), 공장밀집지역(0.7%) 순임

〈그림 4-5〉 응답자 거주지역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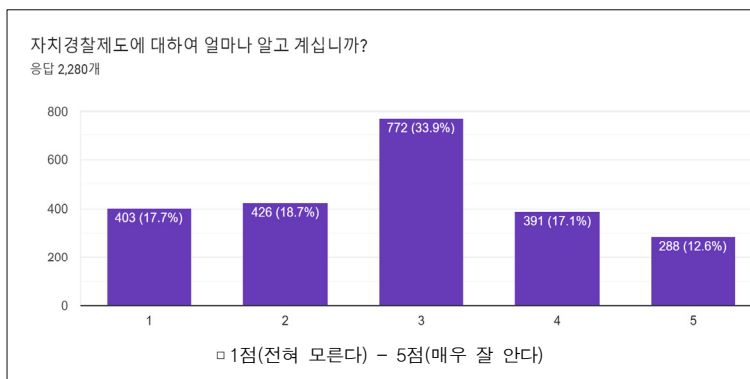


## (2) 자치경찰에 대한 인식

### □ 인지도

- 자치경찰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평균 2.88점으로 다소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자치경찰제도에 대해 모르거나(426명, 18.7%) 전혀 모른다(403명, 17.7%)는 응답자의 수가 같거나(391명, 약 17.1%) 매우 잘 안다(288명, 약 12.6%)는 응답자의 수보다 많았음

〈그림 4-6〉 자치경찰제 인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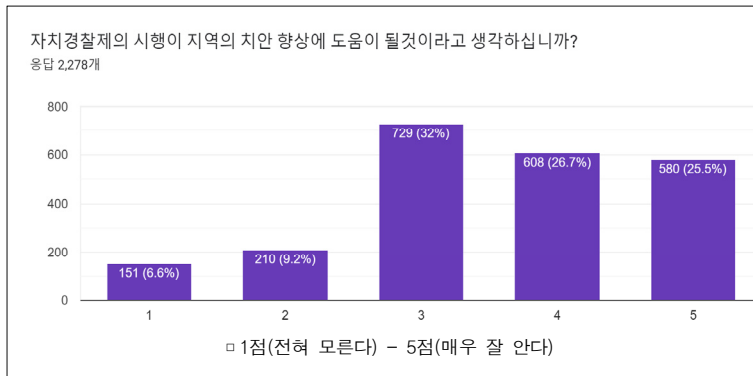




## □ 치안 향상

- 자치경찰제의 시행이 지역의 치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하여 평균 3.55점으로 효과성에 대한 인식은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효과성에 대해 그렇다가 608명(약 26.7%), 매우 그렇다가 580명(약 25.5%)으로 전체 응답자의 50%를 넘었음

〈그림 4-7〉 자치경찰제 효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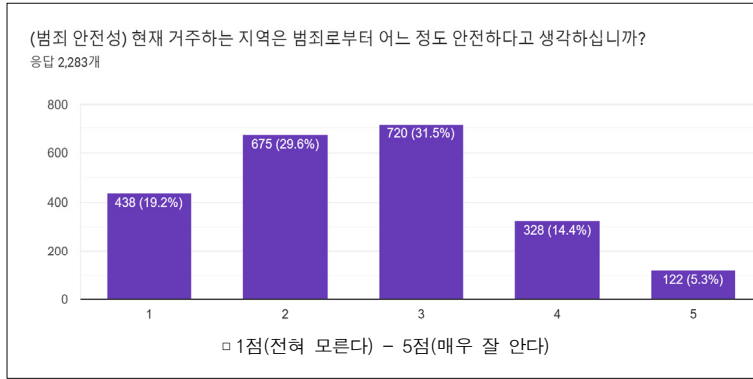


## (2) 생활안전 범죄예방 활동

### □ 범죄 안전성

- 거주하는 지역의 범죄로부터 안정성에 대한 인식은 평균 2.57점으로 비교적 안전하다는 응답이 다소 높았음
- 매우 안전(19.2%), 안전(29.6%)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불안(14.4%), 매우 불안(5.3%)하다고 응답한 비율보다 많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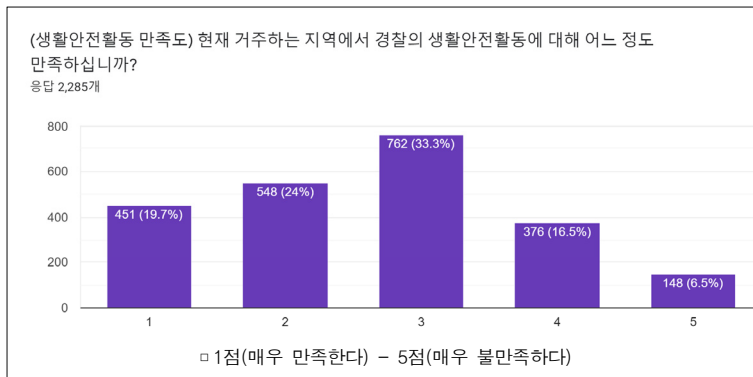
〈그림 4-8〉 범죄 안전성



#### □ 생활안전활동 만족도

- 경찰의 생활안전활동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2.65점으로 매우 만족(19.7%)하거나 만족(24.0%)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불만족(16.5%)하거나 매우 불만족(6.5%)하다고 응답한 비율보다 많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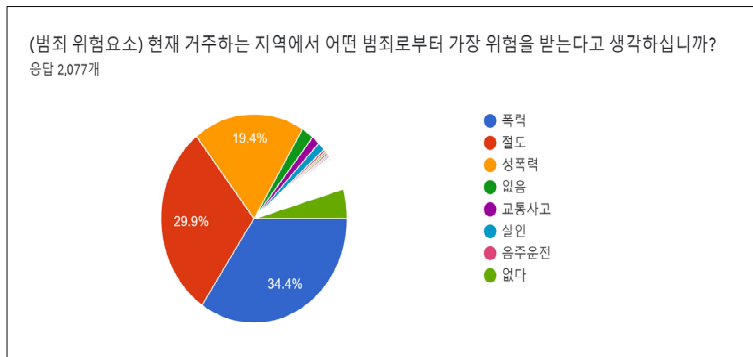
〈그림 4-9〉 생활안전활동 만족도



## □ 범죄 위험요소

- 현재 거주하는 지역에서 가장 위험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범죄는 폭력(34.3%), 절도(29.9%), 성폭력(19.4%) 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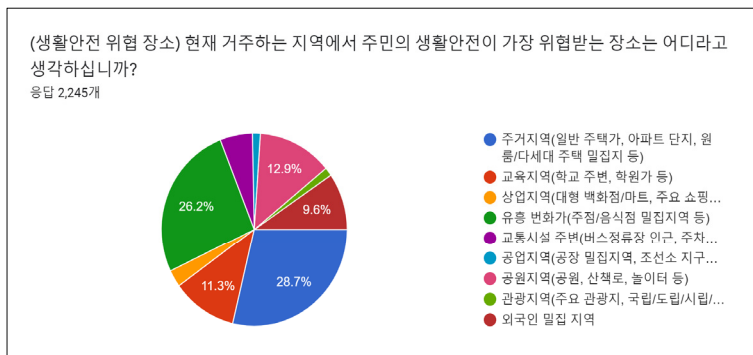
〈그림 4-10〉 범죄 위험요소



## □ 생활안전 위험장소

- 현재 거주하는 지역에서 주민의 생활안전이 가장 위협받는 장소는 주거지(28.7%), 유흥 번화가(26.2%), 공원지역(12.9%), 교육지역(11.3%), 외국인 밀집지역(9.6%) 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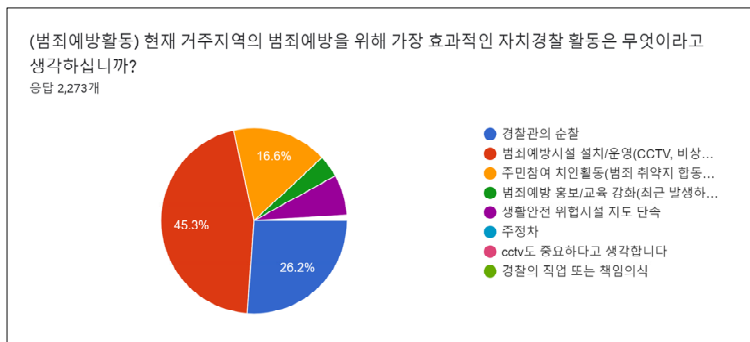
〈그림 4-11〉 생활안전 위험 장소



## □ 범죄예방활동

- 현재 거주하는 지역의 범죄예방을 위해 가장 효과적인 자치경찰 활동은 범죄예방시설 설치·운영(45.3%), 경찰관의 순찰 강화(26.2%), 주민참여 치안활동(16.6%), 생활안전 위협시설 지도 단속(7.1%)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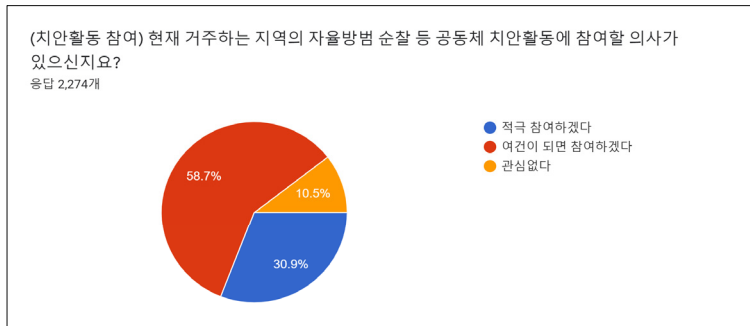
〈그림 4-12〉 범죄예방활동



## □ 치안활동 참여

- 현재 거주하는 지역의 자율방범 순찰 등 공동체 치안활동 참여에 관하여 적극 참여하겠다고 30.9%, 여건이 되면 참여하겠다고 58.7%, 관심없다가 10.5%임

〈그림 4-13〉 치안활동 참여 의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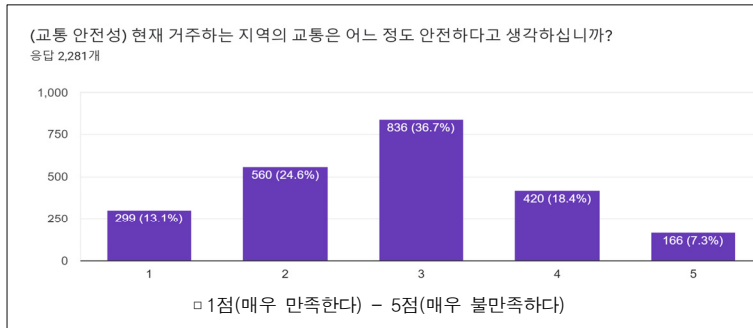


### (3) 교통안전 활동

#### □ 교통안전성

- 현재 거주하는 지역의 교통안전성에 대한 응답은 평균 2.28점으로 응답자의 약 38%가 안전하다고 인식하고 있음
- 세부적으로 안전하다는 24.6%, 매우 안전하다는 13.1%, 불안하다는 응답은 18.4%, 매우 불안하다는 응답은 7.3% 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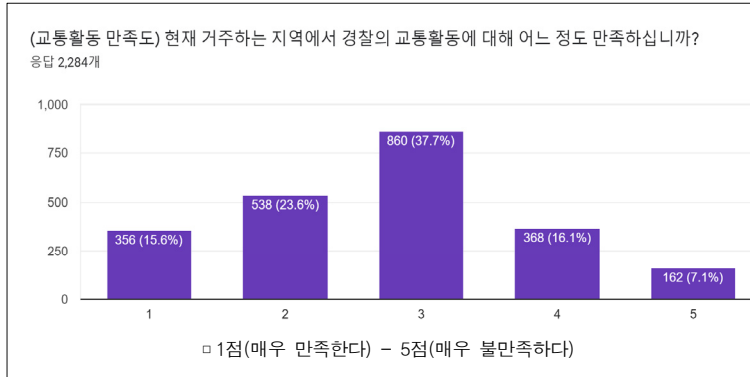
〈그림 4-14〉 교통안전성



#### □ 교통활동 만족도

- 현재 거주하는 지역의 교통활동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2.75점으로 응답자의 약 39%가 안전하다고 인식하고 있음
- 현재 거주하는 지역에서 경찰의 교통활동에 매우 만족(15.6%)하거나 만족(23.6%)한다고 응답하였음
- 현재 거주하는 지역에서 경찰의 교통활동에 불만족하거나(16.1%) 매우 불만족(7.1%)한다고 응답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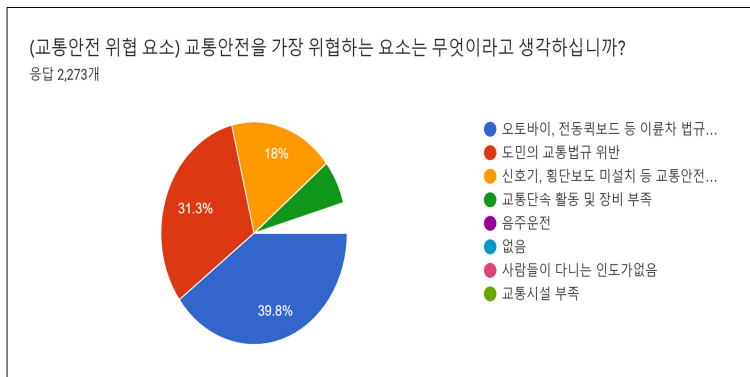
〈그림 4-15〉 교통활동 만족도



#### □ 교통안전 위협요소

- 교통안전을 가장 위협하는 요소로는 오토바이·전동 킥보드 등 이륜차 법규 위반(39.8%), 도민의 교통법규 위반(31.3%), 신호기 횡단보도 미설치 등 교통안전시설 부족(18%) 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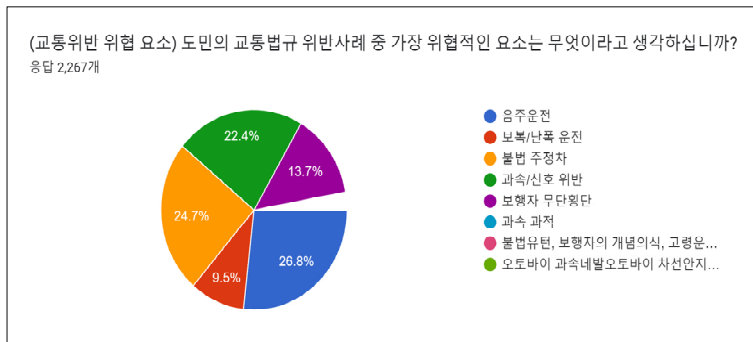
〈그림 4-16〉 교통안전 위협 요소



## □ 교통위반 위협요소

- 도민의 교통법규 위반의 위협요소는 음주운전(26.8%), 불법주정차(24.7%), 과속·신호 위반(22.4%), 보행자 무단 횡단(13.7%), 보복·난폭 운전(9.5%) 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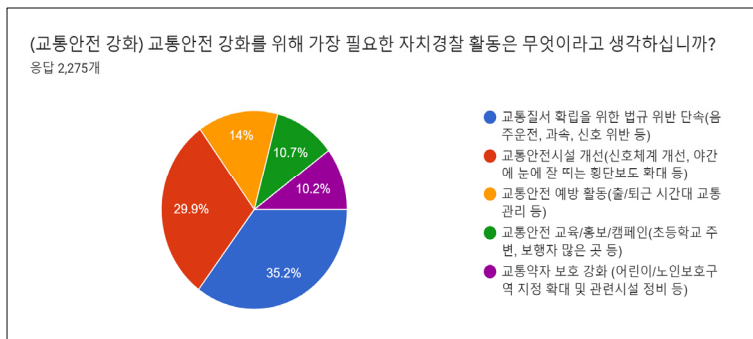
〈그림 4-17〉 교통위반 위협요소



## □ 교통안전 강화

-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자치경찰 활동은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법규위반 단속(35.2%), 교통안전시설 개선(29.9%), 교통안전 예방 활동(14%), 교통안전 교육·홍보·캠페인(10.7%), 교통약자 보호 강화(10.2%)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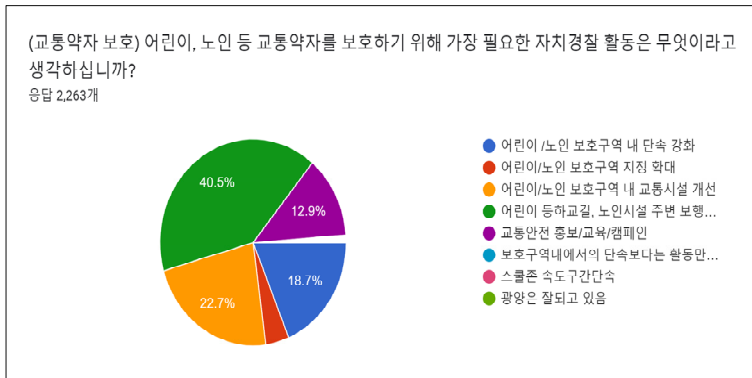
〈그림 4-18〉 교통안전 강화 활동



## □ 교통약자 보호

- 어린이, 노인 등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자치경찰 활동은 어린이 등하굣길·노인시설 주변 보행로 등 안전활동 강화(40.5%),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내 교통시설 개선(22.7%),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내 단속 강화(18.7%), 교통안전 홍보·교육·캠페인(12.9%) 순임

〈그림 4-19〉 교통약자 보호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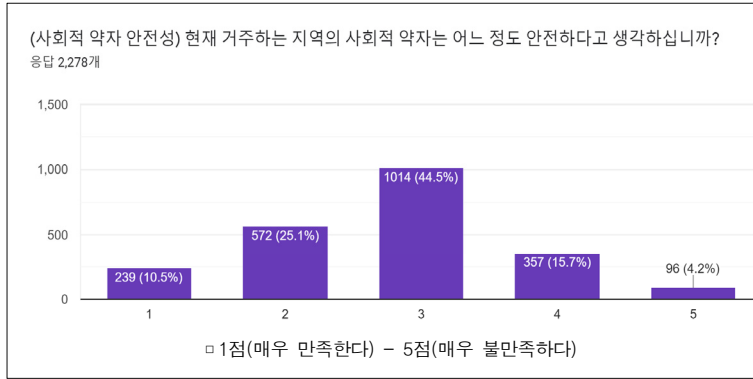
## (4) 사회적 약자 보호 활동

### □ 사회적 약자 안전성

- 현재 거주하는 지역의 사회적 약자는 어느 정도 안전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하여 응답은 평균 2.78점으로 응답자의 약 35%가 안전하다고 응답함
- 세부 응답은 매우 안전(10.5%), 안전(25.1%), 불안(15.7%), 매우 불안(4.2%)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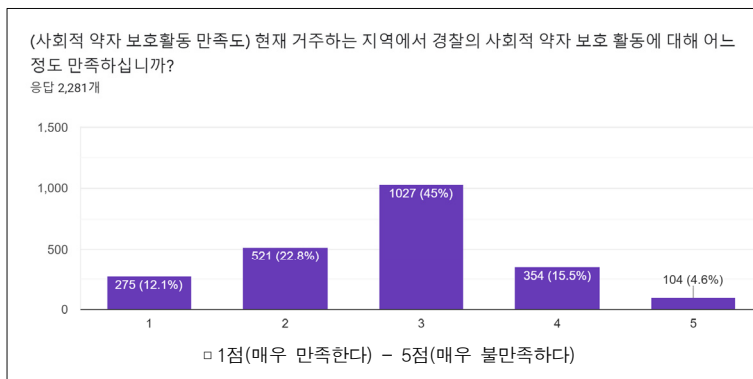
〈그림 4-20〉 사회적 약자 안전성



#### □ 사회적 약자 보호활동 만족도

- 현재 거주하는 지역에서 경찰의 사회적 약자 보호 활동에 대한 응답은 평균 2.77점으로 응답자의 약 35%가 안전하다고 응답함
- 세부 응답은 매우 만족(12.1%), 만족(22.8%), 불만족(15.5%), 매우 불만족(4.6%)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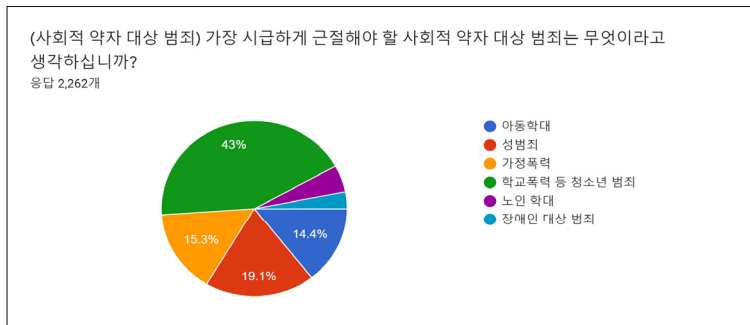
〈그림 4-21〉 사회적 약자 보호활동 만족도



## □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 가장 시급하게 근절해야 할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는 학교폭력 등 청소년 범죄(약 43%), 성범죄(약 19.1%), 가정폭력(약 15.3%) 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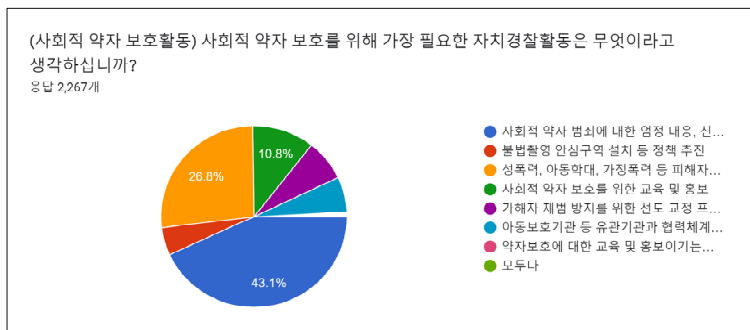
〈그림 4-22〉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 □ 사회적 약자 보호활동

-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가장 필요한 자치경찰활동은 사회적 약자 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신속한 수사(43.1%), 성폭력·아동학대·가정폭력 등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강화(26.8%),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10.8%) 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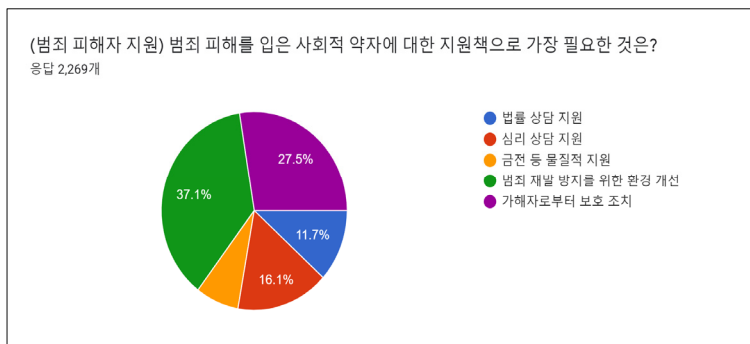
〈그림 4-23〉 사회적 약자 보호활동



## □ 범죄 피해자 지원책

- 범죄 피해를 입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책으로 가장 필요한 것은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환경개선(37.1%), 가해자로부터 보호 조치(27.5%), 심리 상담 지원(16.1%)임

〈그림 4-24〉 범죄 피해자 지원책



## □ 기타 사회적 약자 보호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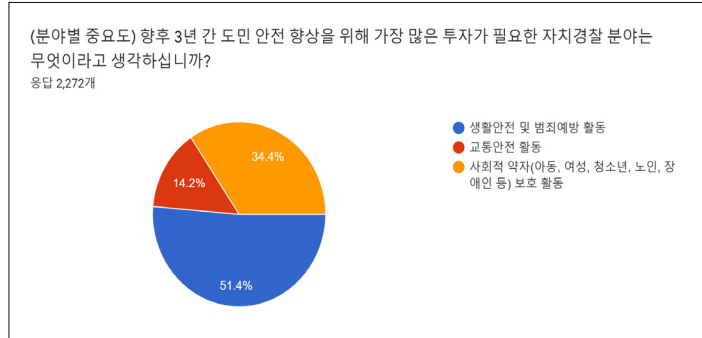
- 기타의견으로는 자치경찰활동의 신속성·정교성 확충, 신고체계 제도적 수립(ex. 신고고 제도), 사회적 약자(장애인, 다문화가정, 성폭력 피해자 등)보호, 다양한 형태의 피해자 보호 조치 확립, 가해자 처벌 수위 상향 조정, 유관 기관과의 협력, 교육 및 홍보활동 등이 제시됨

## (6) 종합 의견

### □ 분야별 중요도

- 향후 3년간 도민 안전향상을 위해 가장 많은 투자가 필요한 자치경찰 분야로 생활안전 및 범죄예방 활동을 꼽은 응답자가 1167명(51.4%)로 가장 많았으며, 사회적 약자 보호 활동(782명, 34.4%), 교통안전 활동(323명, 14.2%)순이었음

〈그림 4-25〉 분야별 중요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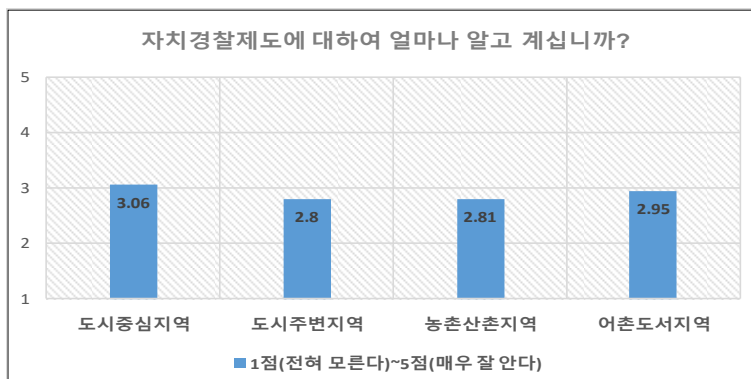
### 3) 지역별 고려 사항

#### (1) 자치경찰에 대한 인식

##### □ 인지도

- 자치경찰제도 인지도는 도시중심(평균 3.06점)이 타지역에 비해 높으며 보통(3점) 이상으로 나타남
- 이어 어촌·도서(평균 2.95점), 농촌·산촌(평균 2.81점), 도시주변(평균 2.80점) 순으로 높게 도출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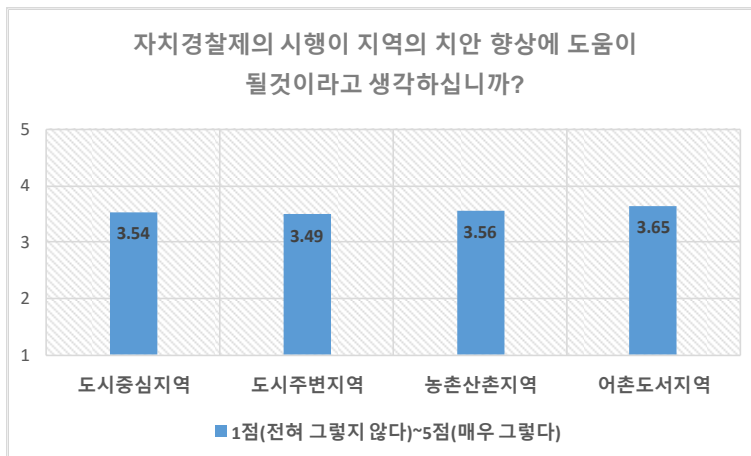
〈그림 4-26〉 지역별 자치경찰제도 인지도



## □ 치안 향상

- 자치경찰제의 시행이 지역의 치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하여 전체 지역 평균 응답은 보통(3점) 이상으로 나타남
- 어촌·도서 지역이 평균 3.65점으로 가장 높게 효과성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어 농촌·산촌(평균 3.56점), 도시중심(평균 3.54점), 도시주변(평균 3.49점)으로 나타남

〈그림 4-27〉 지역별 자치경찰제도 효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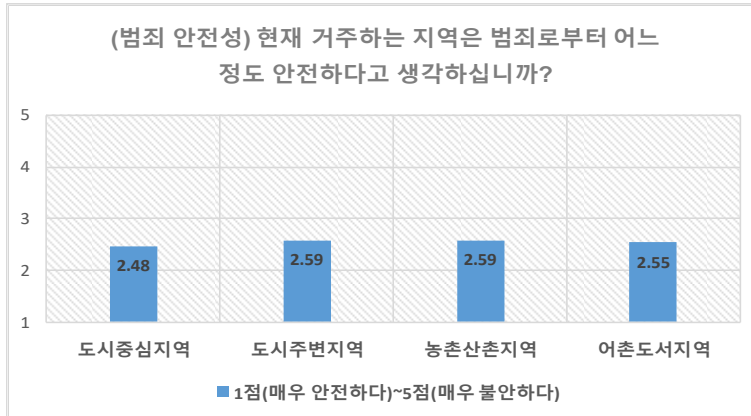


## (2) 생활안전 범죄예방 활동

### □ 범죄 안전성

- 거주지역의 범죄 안전성과 관련하여 전체 지역 평균 응답은 보통(3점)에 미치지 못해, 전반적으로 안전하게 인식하고 있음
- 안정성에 대한 긍정적 응답의 경우 도시중심 지역이 평균 2.48점으로 나타났으며 이어 어촌·도서 지역이 평균 2.55점, 그리고 도시주변과 농촌·산촌이 평균 2.59점으로 안정성에 대한 인식이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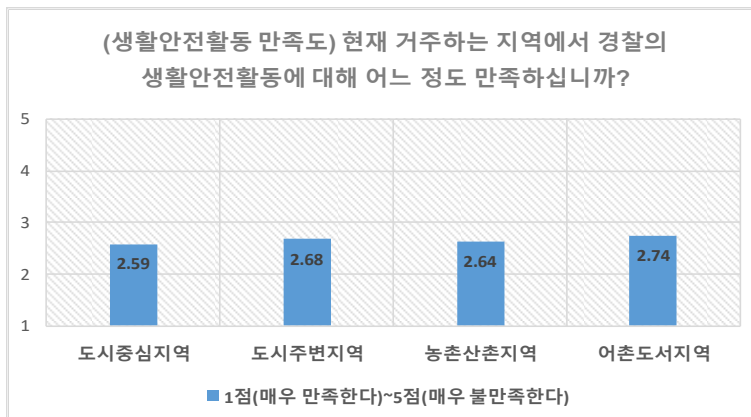
〈그림 4-28〉 지역별 범죄 안전성



#### □ 생활안전활동 만족도

- 경찰의 생활안전활동에 대하여 도시중심 지역이 평균 2.59점으로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임
- 이어 농촌·산촌(평균 2.64점), 도시주변(평균 2.68점), 그리고 여촌·도서 지역(평균 2.74점) 순으로 만족도를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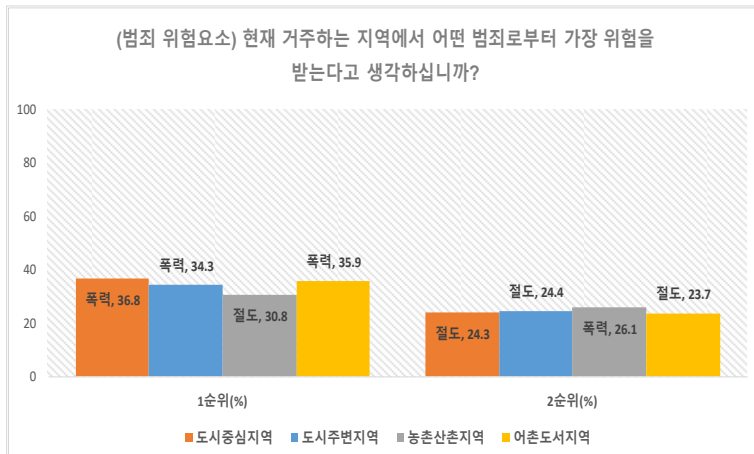
〈그림 4-29〉 지역별 생활안전활동 만족도



## □ 범죄 위험요소

- 도시중심·도시주변·어촌·도서의 경우 폭력이 1순위, 절도가 2순위로 가장 위험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범죄로서 응답함
- 응답률을 살펴보면 도시중심은 폭력(36.8%), 절도(24.3%)이며 도시주변은 폭력(34.3%), 절도(24.4%), 어촌·도서는 폭력(35.9%), 절도(23.7%)로 나타남
- 반면 농촌·산촌은 절도(30.8%)가 폭력(26.1%)보다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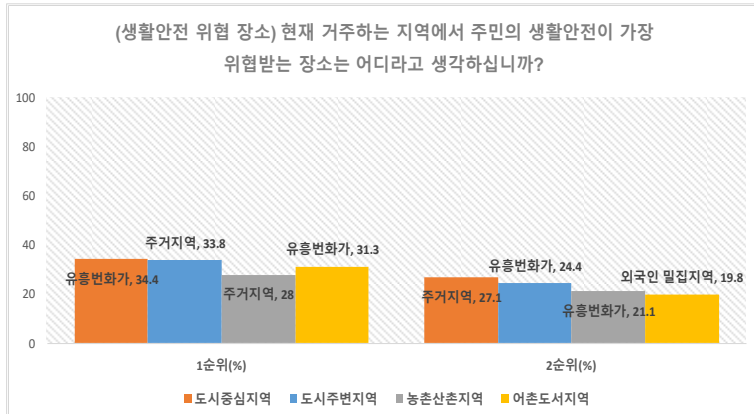
〈그림 4-30〉 지역별 범죄 위험요소



## □ 생활안전 위험장소

- 현재 거주하는 지역에서 주민의 생활안전이 가장 위협받는 장소로 도시중심지(34.4%) 및 어촌·도서(31.3%)의 경우 유흥변화가가 1순위로 나타남 반면 도시주변(33.8%) 및 농촌·산촌(28.0%)은 주거지역이 1순위로 나타남
- 2순위로 도시중심지(27.1%)는 주거지역을, 도시주변(24.4%) 및 농촌·산촌(21.1%)은 유흥변화가를, 어촌·도서(19.8%)는 외국인 밀집지역으로 응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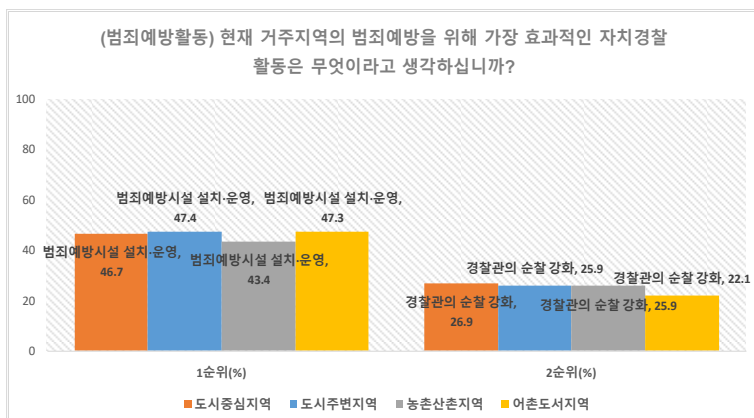
〈그림 4-31〉 지역별 생활안전 위협장소



## □ 범죄예방활동

- 전 지역 공통적으로 범죄예방시설 설치·운영(도시중심 46.7%, 도시주변 47.4%, 농촌 43.4%, 어촌·도서 47.3%)과 경찰관의 순찰 강화(도시중심 26.9%, 도시주변 25.9%, 농촌·산촌 25.9%, 어촌·도서 22.1%)를 현재 거주하는 지역의 범죄예방을 위해 가장 효과적인 자치경찰 활동으로 응답함

〈그림 4-32〉 지역별 범죄예방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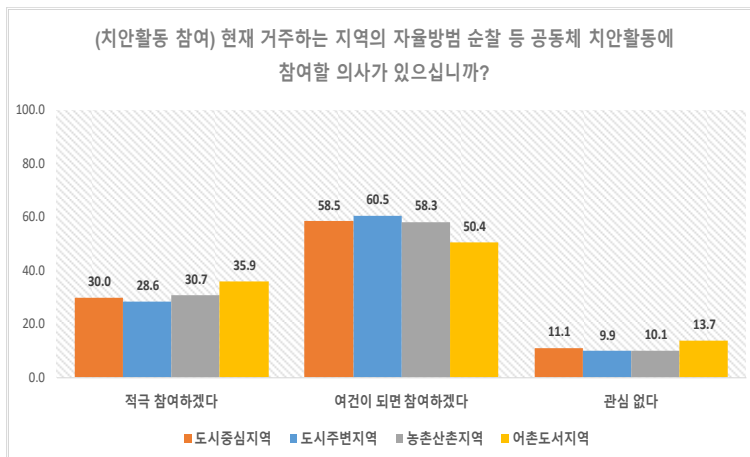




## □ 치안활동 참여

- 현재 거주하는 지역의 자율방범 순찰 등 공동체 치안활동 참여에 관하여 적극 참여하겠다고 어촌·도서(35.9%), 농촌·산촌(30.7%), 도시중심(30.0%), 도시주변(28.6%)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여건이 되면 참여하겠다고의 응답은 도시주변(60.5%), 도시중심(58.5%), 농촌·산촌(58.3%), 어촌·도서(50.4%) 순임
- 반면 관심 없다는 응답은 어촌·도서(13.7%), 도시중심(11.1%), 농촌·산촌(10.1%), 도시주변(9.9%) 순임

〈그림 4-33〉 지역별 치안활동 참여 의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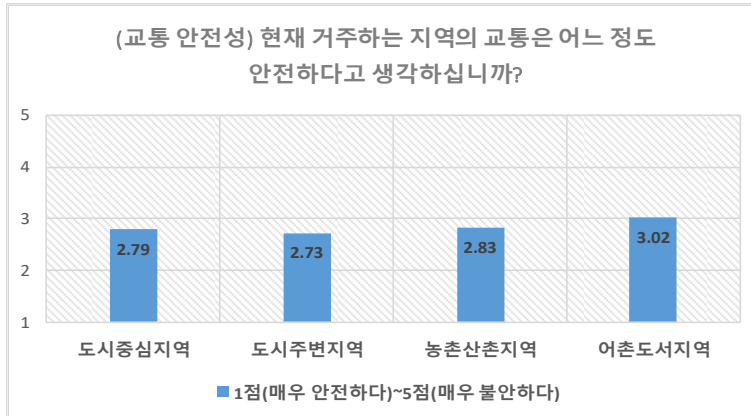


## (3) 교통안전 활동

### □ 교통안전성

- 현재 거주하는 지역의 교통에 대해 안전하다는 응답은 도시주변이 평균 2.73점으로 제일 높았으며 이어 도시중심(평균 2.79점), 농촌·산촌(평균 2.83점), 어촌·도서(평균 3.02점) 순으로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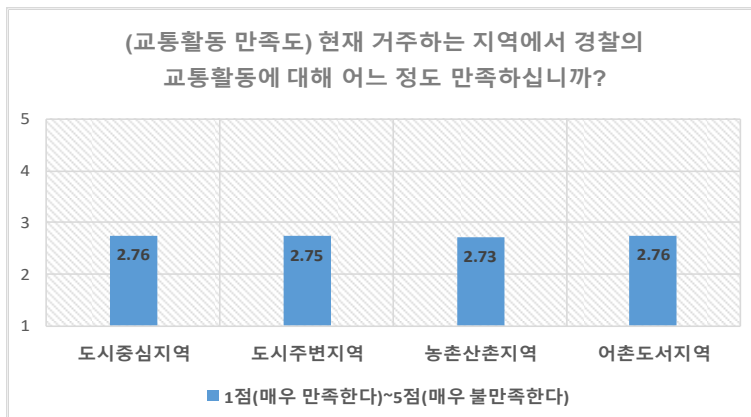
〈그림 4-34〉 지역별 교통 안전성



## □ 교통활동 만족도

- 현재 거주하는 지역에서 경찰의 교통활동에 대한 만족도는 농촌·산촌 지역이 평균 2.73점으로 가장 높게 도출됨
- 이어 도시주변(평균 2.75점), 도시중심 및 어촌·도서 지역은 평균 2.76점으로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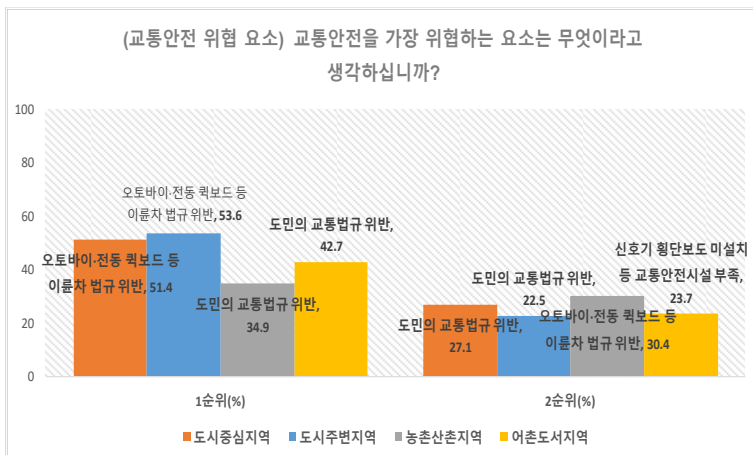
〈그림 4-35〉 지역별 교통활동 만족도



## □ 교통안전 위협요소

- 교통안전을 가장 위협하는 요소로 도시지역의 경우, 오토바이·전동 킥보드 등 이륜차 법규 위반에 대해 절반 이상이 응답하여 가장 위협적인 요소로 나타남
  - 구체적으로 도시중심 지역의 경우 51.4%, 도시주변 지역의 경우 53.6% 응답함
- 이어 도시지역은 공통적으로 2순위 위협요소로서 도민의 교통법규 위반을 나타냄(도시중심지역 27.1%(156명), 도시주변지역 22.5%(91명))
- 반면 농촌·산촌(382명, 34.9%) 지역과 어촌·도서(56명, 42.7%) 지역의 경우, 도민의 교통법규 위반을 교통안전을 가장 위협하는 요소로 응답함
- 이어 농촌·산촌 지역은 2순위로 오토바이·전동 킥보드 등 이륜차 법규 위반(333명, 30.4%)을 응답했으며 어촌·도서 지역의 경우 신호기 횡단보도 미설치 등 교통안전시설 부족(31명, 23.7%)을 응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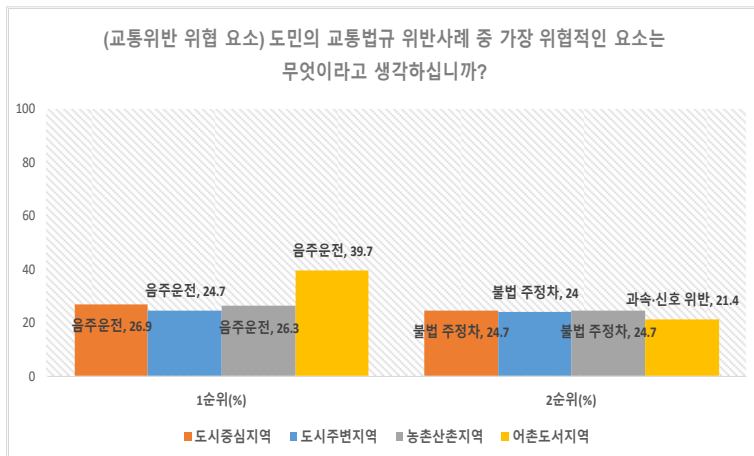
〈그림 4-36〉 지역별 교통안전 위협요소



## □ 교통위반 위협요소

- 전체 지역은 공통적으로 도민의 교통법규 위반의 위협요소로서 음주운전이 1순위로 응답됨(도시중심 지역 26.9%, 도시주변 지역 24.7%, 농촌·산촌 지역 26.3%, 어촌·도서 지역 39.7%)
- 도시지역 및 농촌·산촌은 이어 2순위로 불법 주정차(도시중심 지역 24.7%, 도시주변 지역 24.0%, 농촌·산촌 지역 24.7%)로 응답했지만 어촌·도서의 경우, 2순위는 과속·신호 위반(21.4%)임

〈그림 4-37〉 지역별 교통위반 위협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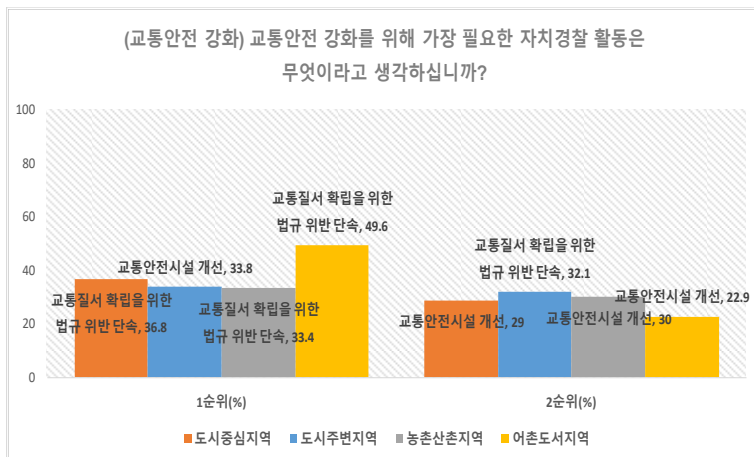
## □ 교통안전 강화

- 도시중심, 농촌·산촌, 어촌·도서 지역은 공통적으로 교통안전 강화 요인으로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법규 위반 단속을 1순위로 응답함(도시중심 지역 36.8%, 농촌·산촌 지역 33.4%, 어촌·도서 지역 49.6%) 반면 도시주변 지역의 경우, 교통안전시설 개선(33.8%)이 1순위로 응답됨
- 구체적으로 도시중심 지역의 경우,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법규 위반 단속(36.8%) 교통안전시설 개선(29.0%) 교통안전 예방 활동(16.7%), 교통안전

교육·홍보·캠페인(8.3%), 교통약자 보호 강화(8.0%) 순임

- 도시주변 지역의 경우, 교통안전시설 개선(33.8%)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법규 위반 단속(32.1%) 교통안전 예방 활동(15.1%), 교통안전 교육·홍보·캠페인(9.9%), 교통약자 보호 강화(8.9%) 순임
- 농촌·산촌 지역의 경우,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법규 위반 단속(33.4%), 교통안전시설 개선(30.0%), 교통안전 예방 활동(12.8%), 교통약자 보호 강화(12.0%), 교통안전 교육·홍보·캠페인(11.3%) 순임
- 어촌·도서 지역의 경우,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법규 위반 단속(49.6%) 교통안전시설 개선(22.9%) 교통안전 교육·홍보·캠페인(10.7%), 교통약자 보호 강화(9.9%) 교통안전 예방 활동(6.1%) 순임

〈그림 4-38〉 지역별 교통안전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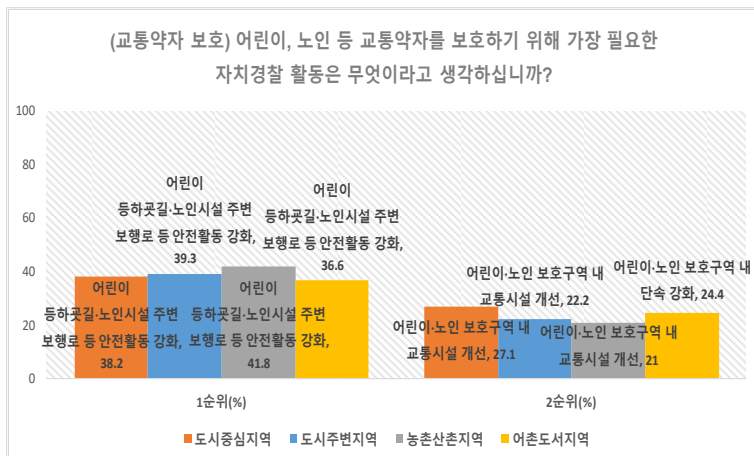


## □ 교통약자 보호

- 어린이, 노인 등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자치경찰 활동의 1 순위로 어린이 등하굣길·노인시설 주변 보행로 등 안전활동 강화(도시중심 38.2%, 도시주변 39.3%, 농촌·산촌 41.8%, 어촌·도서 36.6%)를 응답함

- 이어 2순위로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내 교통시설 개선(도시중심 27.1%, 도시주변 22.2%, 농촌·산촌 21.0%)로 나타났지만 여촌·도서 지역의 경우 2순위로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내 단속 강화(24.4%)를 응답함

〈그림 4-39〉 지역별 교통약자 보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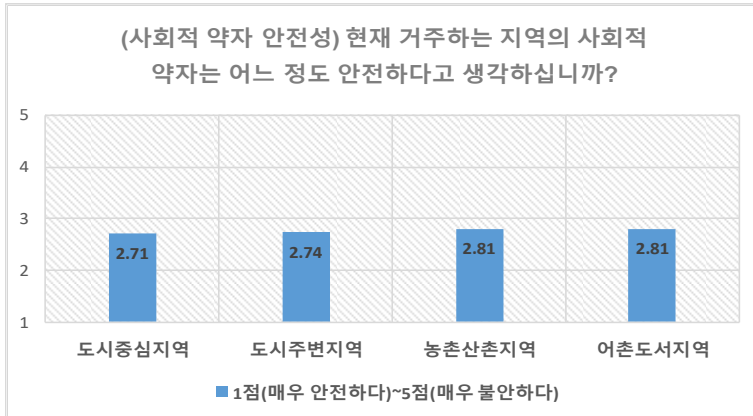


#### (4) 사회적 약자 보호 활동

##### □ 사회적 약자 안전성

- 현재 거주하는 지역의 사회적 약자는 어느 정도 안전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하여 도시중심 지역이 평균 2.71점으로 가장 높은 안전성 인식수준을 보임
- 이어 도시주변 지역(평균 2.74점), 농촌·산촌(평균 2.81점), 여촌·도서(평균 2.81점) 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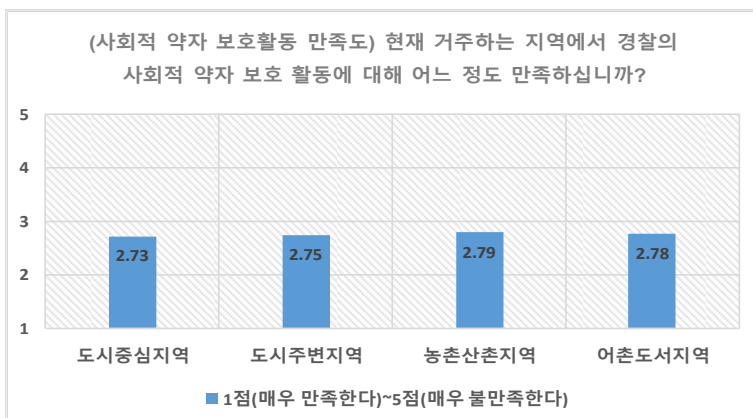
〈그림 4-40〉 지역별 사회적 약자 안전성



#### □ 사회적 약자 보호활동 만족도

- 현재 거주하는 지역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활동에 대해 도시중심 지역이 평균 2.73점으로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임
- 이어 도시주변 지역(평균 2.75점), 어촌·도서(평균 2.78점), 농촌·산촌(평균 2.79점) 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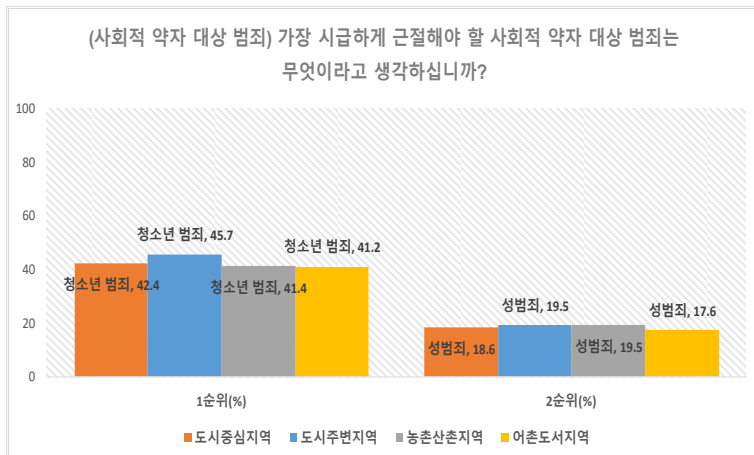
〈그림 4-41〉 지역별 사회적 약자 보호활동 만족도



## □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 전체지역을 살펴볼 때, 가장 시급하게 근절해야 할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1 순위는 청소년 범죄(도시중심 42.4%, 도시주변 45.7%, 농촌·산촌 41.4%, 어촌·도서 41.2%)로 응답됨
- 또한 공통적으로 2순위는 성범죄(도시중심 18.6%, 도시주변 19.5%, 농촌·산촌 19.5%, 어촌·도서 17.6%)로 나타남
- 반면 3순위의 경우, 도시지역 및 어촌·도서 지역은 가정폭력(도시중심 지역 17.4%, 도시주변 지역 16.5% 어촌·도서 지역 17.6%)으로 나타났으나 농촌·산촌 지역은 아동학대(14.1%)로 응답됨

〈그림 4-42〉 지역별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 □ 사회적 약자 보호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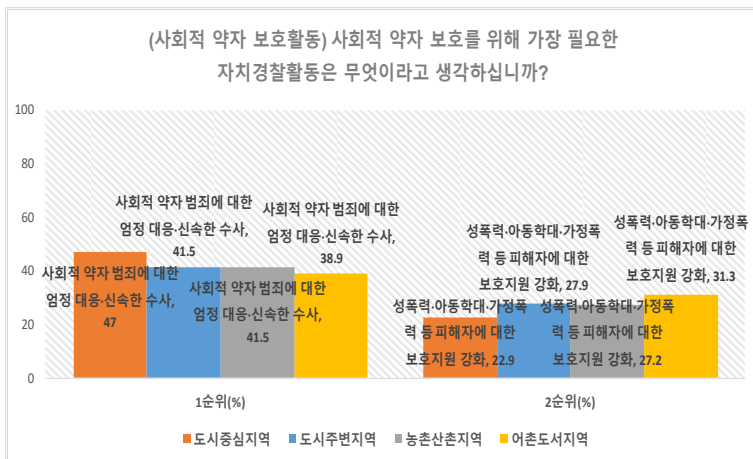
- 전체 지역을 살펴볼 때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가장 필요한 자치경찰활동으로 1순위는 사회적 약자 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신속한 수사(도시중심 47.0%, 도시주변 41.5%, 농촌·산촌 41.5%, 어촌·도서 38.9%), 2순위는 성폭력·아동학대·가정폭력 등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강화(도시중심 22.9%,



도시주변 27.9%, 농촌 27.2%, 어촌·도서 31.3%)로 나타남

- 3순위의 경우 도시중심·도시주변·농촌지역은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각각 9.7%, 10.1%, 11.6%)인 반면 어촌·도서 지역의 경우 아동보호기관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10.7%)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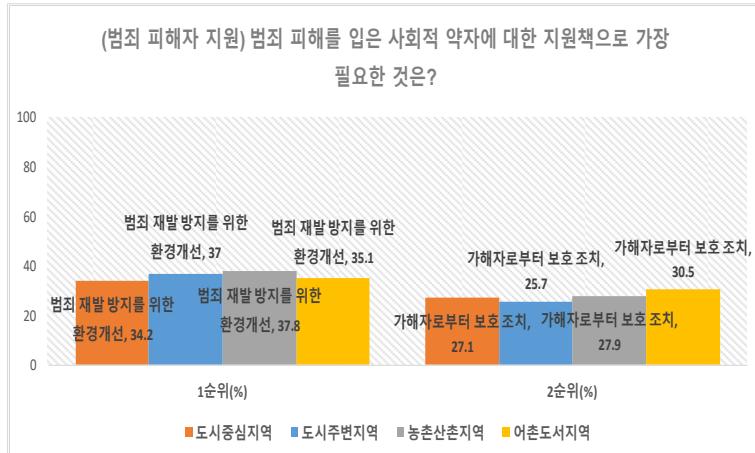
〈그림 4-43〉 지역별 사회적 약자 보호활동



□ 범죄 피해자 지원책

- 전체지역은 공통적으로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책으로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환경개선을 1순위로 응답함(도시중심 34.2%, 도시주변 37.0%, 농촌·산촌 37.8%, 어촌·도서 35.1%)
- 2순위는 가해자로부터 보호 조치(도시중심 27.1%, 도시주변 25.7%, 농촌·산촌 27.9%, 어촌·도서 30.5%), 3순위는 심리 상담 지원(도시중심 16.7%, 도시주변 17.8%, 농촌·산촌 15.0%, 어촌·도서 17.6%)으로 나타남

〈그림 4-44〉 지역별 범죄 피해자 지원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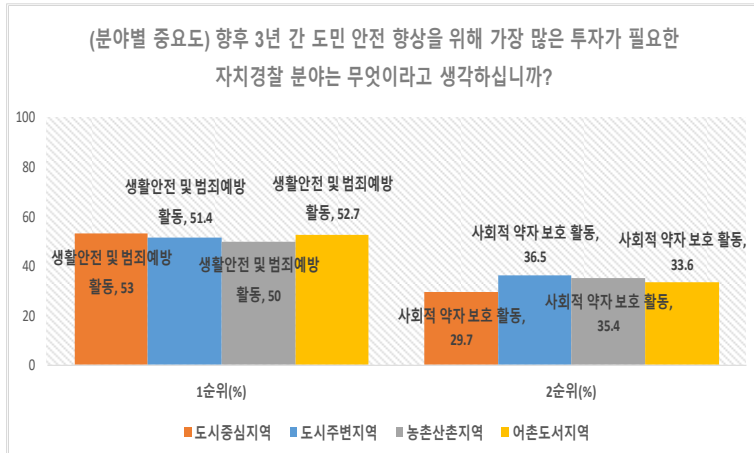


## (5) 종합 의견

### □ 분야별 중요도

- 전체지역은 공통적으로 향후 3년간 도민 안전향상을 위해 가장 많은 투자가 필요한 자치경찰 분야로 응답자의 절반이 생활안전 및 범죄예방 활동을 꼽음
- 구체적으로 도시중심 지역 305명(53.0%), 도시주변 지역 208명(51.4%), 농촌·산촌 지역 546명(약 50.0%), 어촌·도서 지역 69명(52.7%)으로 나타남
- 2순위는 공통적으로 사회적 약자 보호 활동(도시중심 지역 171명 29.7%, 도시주변 지역 148명 36.5%, 농촌·산촌 지역 388명, 35.4%, 어촌·도서 지역 44명, 33.6%)으로 응답됨
- 3순위는 공통적으로 교통안전 활동(도시중심 지역 97명 16.8%, 도시주변 지역 48명 11.9%, 농촌·산촌 지역 149명 13.6%, 어촌·도서 지역 17명, 13.0%)으로 응답됨

〈그림 4-45〉 지역별 분야별 중요도



## 2. 현장 면담 조사

### 1) 조사 개요

#### □ 목적

- 도민 설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남 지역 경찰서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 파출소·지구대 경찰공무원, 생활안전협의회, 자율방범대, 모범운전자회를 대상으로 면담하여 치안정책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함

#### □ 조사 지역

- 전남지역을 4개 권역별(도시권, 농촌권(2급지/3급지), 어촌(섬 지역 포함)으로 나누어 각 지역의 대표 경찰서 및 지구대·파출소를 방문함
  - 도시권: 순천 (1급지)
  - 농촌권: 해남 (2급지), 구례(3급지)
  - 어촌·도서권: 완도 (3급지)

〈표 4-2〉 경찰서 등급구분

1급지	2급지	3급지
목포, 여수, 순천	나주, 광양, 고흥, 해남, 무안	장흥, 보성, 영광, 화순, 함평, 영암, 장성, 강진, 담양, 곡성, 완도, 진도, 구례

## □ 조사 기간

- 2021년 9월 13일부터 9월 15일까지 현지 조사를 시행함
  - Day 1: 구례경찰서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 및 모범운전자회장/자율방범대장 면담, 읍내파출소 현장 경찰 공무원 면담
  - Day 2: 순천경찰서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 및 동 자율방범대 지대장 면담, 왕조지구대 현장경찰 면담, 해남경찰서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 면담
  - Day 3: 완도경찰서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 면담

## 2) 면담 결과

### (1) 순천

#### □ 생활안전 활동

- (지구대) 호수 공원/ 서민 아파트의 주취자 단속 활동

#### □ 사회적 약자 보호 활동

- 학교 폭력: 시청 아동 청소년과, 교육지원청, 함께 캠페인 활동
- 치매 노인 실종: 보건소 치매안심센터로 안내 (손목 배치 감지 밴드)
- 가정폭력예방: 피해자 모니터링. 시 여성 상담센터 및 쉼터와 연계
- 아동학대: 3월부터 아동(안전팀(시청)에 신고하며 이후 사례관리
  - 〈여청수사, 지역경찰, 안전팀〉 합동 출동이 이루어지고 있음

## □ 교통안전 활동

- 대형 교통사고 예방 시설개선 활동
  - 고속도로 분기점에서의 교통사고 발생(순천 왕조 지구대)
- 농촌지역 수확철 교통사고 예방 활동
  - 농로 운전 사고 예방/ 무단횡단 방지 활동
- 개학기 학생 교통사고 예방 활동

## □ 지방행정 연계

- 독거노인, 생활보호 대상자, 장애인은 지자체에서 현황 파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동사무소와 연계 및 협력이 필요함
- 어르신 범죄예방 활동은 아파트 관리사무소, 이장님 마을 방문을 통해 홍보 활동을 전개함
- 각 면사무소와의 연계를 통한 교통안전 활동이 필요함 (지자체와의 협력 필요)
- 정기적인 미팅 (도경 - 지자체)을 위한 제도적 공간 및 기회 가 마련되어야 함
  - 시청-경찰서 실무 담당자 미팅을 제도화/정례화하도록 함 (지구대/파출소- 치안정책 협의회)
  - 순천시 교통과와 순천경찰서 교통안전활동계 담당자 간 연계가 필요함
  - 지자체 시책과 자치경찰의 시책 조율이 필요함
  - 여·청(여성관련 부서), 교통(교통안전 부서)과 달리 생활안전 분야는 시청에 단일한 소통 창구가 없음
  - 교통 분야에서는 신호등 서치 및 차선 협의 등이 교통심의 위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 경찰서 소속 공무원의 시 위원회 참여를 강제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음
  - CCTV 운영 위원회에 경찰서 소속 생활안전계 팀장 참여

## □ 주민참여 연계

- 자치경찰 정책 공모 제안은 지역주민에서 실행부서로 의견이 수렴되는 bottom-up과정이 되어야 함
  - 제안서를 내려보내는 방식이 아닌 지역주민의 자발성에 의한 시책 개발이 되어 시청 부서나 경찰서에서 실행할 수 있어야 함
- 주민자치위원회를 활용하여 자치경찰에 대한 홍보·발표 및 공유가 이루어져야 함
  - 주민총회/주민자치위원회의 사례에서는 동사무소-지자체 간 예산편성으로 공동체 사업을 추진하는 등 주민 자치가 잘 이루어지고 있음
  - 주민자치회에 자율방법대장 당연직 참석/ 동 연계
- 파출소장이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여함으로써 동에서 시로, 주민들의 의견이 지역경찰에 잘 전달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음
- 생활안전협의회/자율방법대 등은 자율성을 기반으로 하는 봉사활동이므로 소속감과 보람을 가질 수 있는 협력단체 유지 및 지원 활동이 있어야 함

## (2) 해남 및 구례

### □ 생활안전 활동

- ‘함께 어우름’ : 마을 독거 노인 방문을 통해 파출소 직원 안부 묻기, 애로사항을 청취함
- 농촌형 찾아가는 서비스 : 지역 안전 순찰 요원이 적정시간 도보 순찰을 통해 마을마다 안전 취약지를 발굴하고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함
- 탄력 순찰을 통한 마을 주민 의견을 수렴함
  - 지역안전 순찰(도보, 주민 밀착) 주민 접촉 증가. 예: 시설물, 관계기관 협의를 통한 환경 개선
  - 산간벽지 탄력 순찰: 지리산 마을 구석구석(외딴 곳, 1인 가구) 순찰을 시행함

○ 보이스 피싱 범죄예방 활동을 전개함

- 보이스 피싱 범죄예방을 위해 농협 구례군지부 등 금융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주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방법을 통해 범죄예방 활동을 전개함

○ 주취자 응급의료 체계 서비스 개발이 필요함

- 정신질환자, 주취자가 농촌지역 특성상 5일장 때 읍내로 오게 됨
- 군 단위 보건의료 전문가가 없음 (도 단위에는 전문 상담사가 있어 연계가 가능함)

□ 사회적 약자 보호 활동

○ 지역사회 ‘초심회’ 협약으로 불우한 학생 보호 활동을 전개함

- 아동학생 가해자와 분리 조치, 도청 협력을 통해 담당 병원으로 이송 및 치료비 지원, 장학금 지급.

○ “독거노인” 찾아가는 방문 서비스를 시행함

○ “100원 택시” 안전 귀가 서비스를 제공함

- 오후 8시 이후 시골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구례군 예산 20억이 30~40억원으로 증액되어야 함

○ 가정폭력예방: 피해자 모니터링, 시 여성 상담센터 및 쉼터와 연계를 강화함

○ 아동학대예방: 금년 3월부터 아동안전팀(시청)에 신고하여 사례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

- 〈여청수사, 지역경찰, 안전팀〉 합동 출동이 이루어지고 있음

□ 교통안전 활동

○ 모범운전자회·녹색어머니회 등을 활용한 교통안전 캠페인을 시행함

○ 대형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개선 활동, 농촌 지역 수확철 교통안전 예방

활동, 개학기 학생사고 예방 활동 등을 시행함

□ 지방행정 연계

- 경찰서 교통과와 도로관리청과의 의사소통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지자체와의 연계와 함께 행정응원체계의 개선이 필요함

□ 주민참여 연계

- 예산편성 단계에서 주민참여가 필요함

(3) 완도

□ 생활안전 활동

- 도서지킴이: 지구대·파출소, 완도군, 완도의료원, 해경/이장, 어촌계장 등이 네이버 밴드를 통해 20 여명 활동
- 여름 휴가철 치안 수요가 많음
  - 외부인들의 무단 낚시, 쓰레기 투기 등에 대한 조치 방안 필요

□交通安全 활동

- 경찰서-군청 간 공식적인 채널 구축이 필요함

□ 사회적 약자 보호 활동

- 완도지역 내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완도경찰서와 완도군청과의 협조체계 구축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어린이 보육시설 및 보호시설이 없어 아동학대 발생시 해남으로 보내는 실정임
  - 최근에 완도군과 정보 연계 협의체를 구성하였음



□ 주민참여 연계

- 지역경찰과 주민 간 유대감을 형성하고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는 경찰의 순환보직도 개선될 필요가 있음
-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자치경찰이 되기 위해서는 지역경찰 인력의 충원이 이루어져야 함
  - 한정된 인력에서 교통사고 예방 및 처리, 절도, 선박 관련 사고 등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동시에 주민들을 위한 치안 예방 활동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 제2절 해외 사례 조사

### 1. 프랑스 자치경찰 사례<sup>12)</sup>

#### 1) 자치경찰 운영체계

##### (1) 자치경찰제의 발전

- 프랑스의 자치경찰은 국가경찰보다 역사가 오래되었으며 주로 기초정부의 시장이 지휘하는 지방공무원 신분으로 관할구역 내에서 활동하는 행정경찰 기능 중심의 자치경찰(police municipale)임
- 1999년 자치경찰법<sup>13)</sup> 통과 후 각 지방정부의 자치경찰 수가 해마다 증가하였음
- 자치경찰 종류로는 기초정부에서 자치경찰을 수행하는 경우, 국가경찰로써 자치경찰의 기능을 대행하는 경우, 농촌지역에서 활동하는 자치경찰 등이 있음

##### (2) 도-지역정부의 부분적인 자치경찰권

- 1982년 전까지 국가가 임명한 도지사가 단독으로 행정경찰권을 소지하였으며 1982년 지방자치 실시 후 도 단위에서 행정경찰권이 이분화됨
- 도 수준에서는 임명 도지사가 국가를 대신하여 총괄적인 경찰권을 행사함
  - 국가의 지방경찰청장과도 같은 임명 도지사가 도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행정경찰권자(autorité de police)의 지위를 가짐

12) 안영훈(2005) 유럽형 자치경찰제도 모델분석 -프랑스·스페인·이탈리아 자치경찰제도를 중심으로- 참조함

13) 프랑스의 '자치경찰법'(법제 99-291호 15 avril 1999 relative aux polices municipales) 제정 내용은 과거 코뮌법과 새 지방자치법 제정 이후 1996년 법전화 된 통합지방자치법전(CGCT)에 기존의 자치경찰권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이에 관한 재조정, 시장의 자치경찰권 재정의 등을 규정하였다.

- 중요성이 인정되는 몇몇 도 단위에서는 경찰권을 지휘하는 치안 담당 임명 부지사(préfet adjoint pour la sécurité)<sup>14)</sup> 두고 있음
- 기초정부의 자치경찰 감독자인 임명 도지사는 대집행권을 행사할 수 있음
  - 예를 들면, 어떤 기초정부 관할구역 내에 질서유지에 필요한 조치들에 대하여 시장이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았을 경우, 국가대표인 임명 도지사가 이를 독촉한 후에도 다시 어떤 결과도 취하지 않으면, 임명 도지사는 법에 의한 직권으로 시장을 대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함(통합지방자치법전 제 L.2215-1조)
  - 이때 기초정부의 이름으로 시장을 대신하여 조치를 취하고, 도 자치정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절차를 취함
- 도 자치정부의 민선지사는 1982년 지방자치법 제25조에 근거해서, 도 법인격체의 행정경찰 집행권자의 자격(qualité d'autorité exécutive du département-personne morale)으로 도 관할 행정구역 내에서 교통 문제, 도 관할영역의 경영에 관련되는 경찰권을 가짐(통합지방자치법전 제 L.3221-4조)
  - 이외에도, 기초정부 행정구역과 국가의 행정구역을 제외한 데파르트망도 자치정부의 관할 행정구역에서의 자치경찰권을 가지며, 도 자치정부의 장으로서 필요 시 국가의 지방행정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3) 기초정부의 자치경찰권

#### □ 기초정부 시장의 자치경찰권

- 시장은 코뮌법 제L.131-2조에 의거하여 사회질서와 안전, 시민보호, 공중

14) 1972년 정부시행령에 의해 임명도지사를 보좌하기 위하여 경찰업무를 전담하는 경찰권대리지사(préfet délégué pour la police)의 직위를 창설하여 도행정기관에서 경찰업무를 전담할 수 있도록 임명도지사의 경찰권을 위임받아 경찰행정을 총괄하는 도지사 보좌직을 만들었다. 1989년 9월 정부령 제89-666호에 의해서 경찰조직을 책임지는 치안담당 부지사(préfet adjoint pour la sécurité)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치안담당 부지사는 도 단위에서 경찰기관을 지휘, 통제, 조정하는 임무를 담당하고 있다.

위생 등을 확보·유지할 예방적 수단으로 총괄적인 행정경찰권과 도로교통, 관광 보호 등 특별경찰행정권도 소지함

- 상기의 자치경찰 관련 권한과 임무를 해태한 단체장의 경우에는 단체장으로서 행정적 책임이 발생되며 임무 불이행 시 국가의 임명 도지사가 대리권을 행사함
- 시장 등 단체장이 이러한 자치경찰권을 남용하면 행정법원의 판사 관할 하에 판결하여 시장의 권력남용 또는 경찰권의 과도한 유용을 통제하고 있음
  - 시장은 자치경찰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최종 책임자이나, 선출직 부시장에게 권한위임으로 자치경찰권 행사도 가능함
  - 단체장의 판단에 따라서 단독으로 자치경찰권의 일부 위임에 관한 기간, 대상 등을 결정하여 시의원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에게 위임이 가능함
  - 이때 시장의 경찰권 위임 범위와 대상 등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법에서 요구하고 있음(코뮌법 제L.122-9조)
  - 위임받은 부시장 또는 시의원은 경찰권을 담당하는 공무수행 자격을 갖고 특별사법경찰권도 인정받음(코뮌법 제L.122-23조와 122-24조)

#### □ 일반자치경찰(Agent de police municipale)

- 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지방공무원으로서 자치경찰 직군인 자치경찰은 시장의 경찰 명령권 하에 주민의 공중위생, 안전, 질서유지 확보를 책임지고 감시함
- 기초정부 관할구역 내에서 시장령을 준수하며 시장의 경찰명령권 내에서 부여된 지시사항(directives)을 수행함

#### □ 전원자치경찰(Garde-champêtre) 및 농촌자치경찰

- 농촌지역에는 특별히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자치경찰관으로서 농촌 경찰(police rurale)이 활동하는데 전원 감시경찰(Garde-champêtre)이라고 함
  - 농촌 지역의 자치경찰관 임무는 도심지 자치경찰관과 동일한 임무를 수행함

○ 본래 1791년 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경찰공무원으로 모든 농촌지역에서 근무하는 농촌 경찰공무원(police rurale)으로 사법경찰의 자격을 갖고 있으며, 새 지방자치법 시행과 함께 1994년부터 지방공무원 자치경찰 직군의 C 직급에 속하게 되었음

- 예를 들면, 알사스 지방의 녹색경찰(brigades vertes)은 농촌지역 기초 자치정부들이 연합해서 만든 지방정부연합 전원자치경찰(groupes de gardes champêtres intercommunaux)로 마치 캐나다 자치경찰과 동일한 복장을 한 기마경찰대를 조직해서 관할지역의 숲 화재예방, 자연환경 보전뿐만 아니라 동식물의 보호도 함께 담당<sup>15)</sup>

#### □ 행정경찰 기능 중심의 자치경찰 임무

○ 시장의 경찰령에 따른 행정경찰 기능을 중심으로 한 자치경찰의 주요 임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sup>16)</sup>

- 군중집회장소에서의 질서유지
- 주변의 소음과 소란 제거
- 인명과 재산의 안전과 보호, 주민의 보건, 청결 유지, 장례식, 묘지 정비, 음식물 쓰레기 처리 등 기초질서 확립
- 건축허가 위반사항에 대한 감시, 검사에게 위반사항 보고
- 통학로 안전 확보, 주차위반단속
- 순찰, 경계활동, 범죄사실 인지의 경우 국가경찰에 즉시 보고
- 거동 수상자에 직무질문, 임의동행, 신체수색
- 기초정부 축제 감시 관리, 기초정부 시설 및 건물 경비
- 도로법 규칙상 나열된 도로법 위반에 대한 조서 작성권 및 국가경찰 보고
- 수렵과 낚시 감시 등 동식물 보호와 환경보호 업무

15) Jean-Luc Varin, Le Conseil municipal, le Maire et ses Adjoints, Paris, Les ditions de l'Atelier, 1994, 26-27.

16) 자세한 내용은 강선주(2012)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자치경찰제에 관한 연구를 참조함

## □ 도로교통업무에 관한 자치경찰 임무

- 기초정부가 제정한 자치법규 집행 및 이를 위반한 경범행위를 조서로 작성하며, 도로교통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조서를 작성함(통합지방자치법전 제2212-5조)
- 프랑스 형소법 제 21조 2항 규정에 근거하여 자치경찰관이 사법경찰리, 사법경찰리 보조의 자격으로 행정처분을 할 경우 운전자의 음주 상태 또는 음주 측정 거부 시는 관할 국가경찰 또는 군 경찰 소속 사법경찰관에게 즉시 보고하고 이때 사법경찰관은 자치경찰로 하여금 해당 운전자를 즉시 연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음<sup>17)</sup>
- 교통법규와 관련한 자치경찰 권한은 교통법규가 규정하고 있는 모든 범죄와 경범죄 등 대해서 초동 조치와 보고(constatation)할 의무가 있음
- 교통법규 제250조와 제250-1조의 규정에 따라 위반시 벌금조서를 작성하며, 다만 현행범죄자에 한정하여 신분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검거할 수 있도록 하였음(형사소송법 제73조)

## 2) 파리 근교 뇌이(Neuilly sur-Seine) 기초자치경찰

### (1) 관할구역

- 뇌이시는 파리시로부터 8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파리 주변의 기초정부가 관할구역 면적은 375ha이고 녹지면적이 상당하여 28ha를 구성함
- 뇌이시는 오드센드 도 지역에 속하며 가장 최근 통계인 2020년에 의하면 약 7만명의 주민이 거주함

### (2) 자치경찰 활동

- 뇌이시의 관할구역을 담당하는 국가경찰은 약 200명이고, 뇌이시 자체적으

17) 자세한 내용은 강선주(2012)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자치경찰제에 관한 연구를 참조함

로 조직·운영하는 자치경찰은 40여명임

- 자치경찰의 주요 활동으로는, 공공건물 및 학교건물 경비를 담당하는 안전 보조원(agent de sécurité)들이 있음
- 행정조직 상 뇌이시 국가경찰서와는 독립적인 위치이지만 기초정부가 자치 경찰관을 임명함에 있어서 관할지역 내 검찰로부터 검증을 받고 있음
- 뇌이시 자치경찰의 근무시간은 보통 월요일부터 금요일 7시30분~오후 9시, 토요일은 10시~오후 8시, 일요일은 9시~오후 7시까지 근무시간임
- 뇌이시 자치경찰의 주 임무는 국가경찰과 협력하여 인명과 재산의 보호뿐만 아니라 프랑스 형사소송법 제21조2에 근거한 사범 경찰임무로써 경죄, 중죄 등 모든 범죄에 대한 보고 수행임
- 자전거, 스쿠터, 자동차 등 기동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비를 활용하여 관할지역 순찰, 주차장 감시, 교통통제, 공공도로 상의 장애물 제거, 노약자 보호활동 등 다양함
- 자치경찰이 보다 자유롭게 현장에서 경찰 활동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치경찰장의 지휘를 받는 안전 보조원으로 하여금 학교, 공원, 시청사 등 공공시설물 보호임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 2002년 3월 18일 안전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에는 이 법에 근거해서 자치경찰 권한이 확대되었기 때문에 교통 관련 모든 위반사항 및 속도위반 통제, 음주운전 측정, 불법주차 견인 등에 대한 조사와 처벌권을 행사함. 또한 운전면허증과 자동차 등록서류 관련 정보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2. 이탈리아 자치경찰 사례<sup>18)</sup>

### 1) 자치경찰 운영체계

#### (1) 지역 정부 자치경찰

##### □ 1986년 자치경찰법<sup>19)</sup>

- 자치경찰 기본법으로서 각 지방정부는 자치경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함
- 자치경찰법은 모든 기초정부는 자치경찰 조직과 운영에 관해서는 지역 정부가 제정한 자치경찰 법규를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하였음
- 중앙정부의 내무부 시행령(n.145, 1987. 3. 4)으로 자치경찰법을 보완하였고, 자치경찰의 무장에 관해서도 규정하였음
- 자치경찰법 제1조에서 "기초자치정부는 지방(자치)경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 목적을 위해 자치경찰을 조직할 수 있다"고 규정함
  - 동법에서 전문직 지방공무원으로 자치경찰을 인정하였고, 1986년 이전에 존재하였던 기초정부의 공안요원(vigili urbani)들을 자치경찰로 재편입하면서 직업 안정성을 보장하여 자치경찰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였음
- 1990년 지방자치법 제2조2항에서 지방정부는 지역정부-도정부-기초정부 간 자치법규 체계상으로 자치경찰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자치법규 제정이 의무로 되어 있음

18) 안영훈·강기홍(2008). 자치경찰제 확대 및 강화 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보고서 참조

19) (기초정부 자치경찰법) LEGGE 7 marzo 1986, n. 65, Legge quadro sull'ordinamento della Polizia Municipale.



## (2) 도 자치경찰(Polizia Provinciale)

### □ 도 자치경찰의 임무

- 도 행정구역 수준에서 설치, 운영된 도 자치경찰은 관할지역 내의 대기, 동물, 산림, 하천, 호수 등 환경보호 업무를 수행하고, 고속도로 순찰업무, 범죄 예방 및 운전면허 관리, 관광객 보호 등의 업무도 함께 수행함
- 도 자치경찰은 상급자치단체인 지역정부 관할 내에서 법령준수 및 집행, 비상사태나 재해에 따른 구호, 기타 지역경찰로서의 사법경찰, 교통경찰, 행정경찰 등 임무를 수행함
- 도로법(Codice della Strada, Legge n.214 '03. 8. 1) 등의 개정으로 도 자치정부가 관할하는 고속도로 순찰업무가 도 자치경찰 기능으로 이양되기도 하였음

## (3) 기초정부 자치경찰

### □ 자치경찰의 지휘권

- 자치경찰은 기초정부 시장이 책임자이며,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자치경찰 조직에 관한 시장령을 제정하고, 7명 이상의 자치경찰 인력이 있는 경우는 자치경찰단(Corpo di polizia municipale)을 설치 운영할 수 있음

### □ 자치경찰의 재정

- 자치경찰의 재정은 기본적으로 국가 예산의 부담 없이 각 자치정부 자체 예산에서 충당하며, 지역 정부가 도와 기초단위 자치경찰에 재정 지원을 하기도 함

### □ 자치경찰활동에 따른 다양한 운영 유형

- 지역에 따라 자치경찰은 다양한 경찰 활동을 수행하고 있음
  - ① 도시자치경찰(Polizia Urbana)은 도심지 내 시민의 안전과 일상생활

의 안전보호 등 주 임무를 수행

- ② 상업위생 자치경찰(Polizia delle Attivit Commerciali e P.E.)은 상행위에 관한 질서유지, 위생 상태 검사 등 임무를 수행
- ③ 도시건설 자치경찰(Polizia Edilizia ed Urbanistica)은 기초정부 내 도심지의 건축 관련 규정의 준수 여부에 대한 검사, 건축물에 대한 주민 보호 등 임무를 수행
- ④ 농촌경찰(Polizia Rurale)은 농수산 및 산림보호 등 기초정부의 농지 자원 운영과 보호 및 활용 등 다양한 경찰 임무를 수행
- ⑤ 환경감시 자치경찰(Polizia di Tutela Ambientale)은 자연환경, 동·식물 보호 등에 관한 임무를 수행
- ⑥ 관광자치경찰(Polizia Turistica)은 관광지와 캠핑지역, 해변가 등에서 주민안전과 보호임무를 수행<sup>20)</sup>

## 2) 피렌체 지역의 자치경찰

### (1) 관할구역

- 피렌체시는 로마 북서부에서 233km 떨어진 토스카네 지역(Toscane regione)의 10개 도(province) 중의 하나인 피렌체 도(Firenze Provincia)로써 42개 기초정부 가운데 하나임
- 시장 지휘 하에 5개 자치구경찰(Polizia di Quartiere)로 이루어져 있으며 약 900명의 자치경찰(Corpo di polizia municipale)과 80명의 행정직원이 11개 소구역으로 관할하며 근무하고 있음 <sup>21)</sup>

### (2) 자치경찰 활동

- 시 자치경찰의 주임무는 교통관리, 위생유지, 공해방지, 탈세방지, 불법건축

20) 이탈리아 로이아노(Comune di Loiano) 기초정부 자치경찰 사례.

21) [https://poliziamunicipale.comune.fi.it/chi\\_siamo/direzione.html](https://poliziamunicipale.comune.fi.it/chi_siamo/direzione.html) (2021년 8월 검색).

및 광고관리, 불법체류 통제 등임

- 범인체포 등의 경찰활동은 국가경찰과 공동협력으로 수행하고 있음<sup>22)</sup>

### 3. 벨기에 자치경찰 사례<sup>23)</sup>

#### 1) 자치경찰 운영체계

##### (1)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이원체제 및 통합체제

- 벨기에는 연방 국가로서 과거 3가지 형태의 경찰조직이 1998년 12월 7일 2원 구조의 통합경찰 조직법에<sup>24)</sup> 의하여 2원 조직으로 개편되었음
- 2001년 8월 24일 국가군경찰, 기초자치경찰 및 사법경찰에 관한 관련 법령 폐지에 관한 왕령을<sup>25)</sup> 통해서 과거의 경찰조직과 기능에 관한 법령들을 폐지함<sup>26)</sup>
  - 연방헌법에서 관련 조항인 제184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 : 2원 조직의 통합 경찰공무원의 조직과 권한 등에 관해서는 법률로 규정하고, 통합 경찰공무원의 인사관리체계도 법률로 정함
- 따라서 후속적으로 관련 법률과 왕령들을 제정함으로써, 과거 지방에서 활동하던 국가군경찰(brigades territoriales de la Police Fédérale)과 기초자치경찰(corps de police communale)은 지방경찰(Police Locale)

22) 1990년 행정절차에 관한 법, Legge 241/90(Nuove norme in materia di procedimento amministrativo e di diritto di accesso ai documenti amministrativi), 제24조 자치경찰의 임무.

23) 행정자치부 자치경찰제실무추진단(2007). 자치경찰 표준운영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 참조

24) la loi du 07/12/1998 organisant un service de police intégré, structuré à deux niveaux.

25) ARRETE ROYAL DU 24 AOUT 2001 portant abrogation de divers arrêtés relatifs à la gendarmerie, la police communale et la police judiciaire.

26) 자세한 내용은 행정자치부 자치경찰제실무추진단(2007). 자치경찰 표준운영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를 참조

로, 검찰 소속 사법경찰과 (지방의 국가군경찰을 제외한) 국가군경찰은 연방 경찰(Police Fédérale)로 재편되어 새로운 권한과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음

## (2) 지방경찰

- 벨기에 전국을 196개 경찰관할 지역(zones de police)으로 나누어 배치되어 있으며, 매 경찰관할 지역은 1개 또는 여러 개의 기초정부의 행정구역을 포함함
- 지방경찰은 관할지역을 중심으로 주민 생활안전을 위한 치안경찰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공공질서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일상적인 활동을 수행함
- 관할지역을 책임지는 지방경찰 책임자(chef de zone)는 경찰서장(Commissaire Divisionnaire)이고, 경찰서장의 지휘하에 최소한 1개 경찰서, 또는 그 이상의 경찰서가 있음

## 2) 기초자치단체의 자치경찰

### (1) 자치경찰권

- 시장은 새 기초정부법 제172조에 근거하여 행정경찰의 임무를 수행하는 기초자치경찰의 책임자임
  - 기초자치정부법 제119조는 "기초정부의회는 행정조례(règlements communaux d'administration intérieure)와 기초정부 경찰규정(ordonnances de police communale)을 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러한 조례는 도정부와 주정부 및 연방정부의 법령과 시행령 등에 위반할 수 없다고도 규정하고 있음
- 동법 제129조~제130조에서 시장과 집행부의 기초자치정부 지역 내에서의 기본질서 유지를 위한 자치경찰권 행사를 규정하고 있음

## (2) 자치경찰 활동

### □ 주민접촉 경찰 활동

- 지역 경찰이 주민 생활과 가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주민과의 대화, 의견교환 등 주민과의 개별 접촉을 통해 법규 내용을 상기시킴
- 법규를 위반하지 않도록 권고하거나 일상적인 활동을 보조해 줌
- 이 활동을 위하여 약 4천 명의 주민당 구역 내 1명 이상의 담당 지방경찰을 두는 규정이 있음

### □ 주민민원접수 및 처리

- 주민의 경찰서비스 요청(전화, 우편, 방문 등)에 대한 대응 기능으로써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나 다른 지역경찰, 국가경찰 등에 대리 요청을 통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음
- 이러한 활동을 위하여 지역 경찰은 24시간 주민이 접촉할 수 있도록 상시체제를 갖추고 있음
- 자치경찰의 관할지역이 여러 기초자치정부의 행정구역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각 기초자치정부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파출소(postes de police) 등을 설치하여 상시적으로 주민들을 접촉하고, 방문할 수 있도록 경찰공무원을 배치하여 운영함
- 주민이 현장에서 경찰서비스를 요청할 때 긴급성의 정도에 따라서 즉각적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면서 경찰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이런 조치를 위한 상시체제를 갖추고 주 임무는 행정경찰관과 사법경찰관이 상황에 따라서 현장 출동하거나 또는 항상 연락과 응대가 가능하도록 지방경찰을 조직·운영하고 있음

#### □ 피해자 지원 경찰 활동

- 피해자를 위한 정보제공 등 적절한 지원체계를 갖추기 위해 경찰공무원에 대한 교육과정에서도 이러한 경찰지원 서비스를 적절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음
- 여러 분야의 경찰 전문가가 필요한 점을 고려한 서비스 지원체제를 갖추고 있음

#### □ 공공질서 유지 활동

- 지역 생활의 안전 및 공중위생을 보장하고, 복원시키는 것이 목적임
- 공공질서 유지 활동의 개념은 다소 넓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바 데모, 축구 시합, 지방 축제 등 큰 규모의 이벤트가 발생할 때 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목적을 포함함
- 뿐만 아니라 지역의 교통질서와 환경문제에 대한 경찰 활동도 포함하고 있음

### 4. 스페인 자치경찰 사례<sup>27)</sup>

#### □ 지역 정부 자치경찰의 권한과 임무

- 스페인 1986년 경찰조직법 제5권에서 규정한 자치경찰에 관한 기본임무는 다음과 같음
  - 지방정부의 기관, 시설과 건물의 보호, 관할지역 내 교통통제 및 신호체계 관리, 교통사고의 처리 및 보고(국가경찰에 보고), 자치정부 관할 내 행정경찰사무 수행 및 자치정부 조례 및 시장령 집행
  - 동법 제29-2조에서는 사법경찰활동에 참여 지원, 천재지변 및 재난활동과 민방위 활동에 관여, 안전사고 등의 예방조치(국가경찰에 보고), 집회 및 시위의 경우 공공장소의 감시와 국가경찰 및 지역경찰 활동에 협력, 접

27) 안영훈·강기홍(2008). 자치경찰제 확대 및 강화 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보고서 참조

수된 사건의 경우 사인 간 갈등 해결에 협력 등을 규정

- 지역 정부의 자치경찰 주요 기능은 지역 정부가 제정한 법령 및 규칙 위반행위 감시와 법령에 따른 강제집행, 지역 정부의 주요 정치인 및 시설물 보호 등을 수행함
  - 국가경찰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기능으로는 천재지변 등 시민안전보호법에 따른 활동과 자연환경 보호와 관련한 법령준수 여부 등의 감시, 중앙정부 제정 법령의 이행 여부 감시, 그리고 중요 공공 서비스 시설보호, 사법경찰에 대한 협력, 공공장소 감시, 시위 보호, 다중 운집 장소의 질서유지 등을 수행

#### □ 기초정부의 자치경찰 주요 권한과 임무

- 스페인 지방자치법에 규정하고 있는 자치경찰의 주요 권한과 임무는 다음과 같음
  - 동법 제10조는 "행정 및 기타 공공 행정조직은 당해 권한 행사 범위에 있어 상호 정보 공유·협력, 조정 및 존중하여야 한다." 그리고 제21조는 "① 시장은 협의체의 의장이 되며 아래 임무들을 수행한다. i 시 경찰본부의 운영", 또한 제25조는 "② 기초자치정부(시)는 국가와 자치주가 정한 법령의 범위 내에서 다음 사안들에 대한 권한을 가진다. a. 공공장소의 치안유지, b. 도시지역에서의 차량과 주민에 대한 교통질서 유지"에 있다고 규정
- 따라서 자치경찰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음
  - 기초정부의 공공시설 보호 및 감시와 도심지 내 교통질서, 관할구역의 공공질서유지, 교통사고 보고
  - 기초정부의 행정경찰업무, 재난 및 사고 시 지역주민 지원, 범죄활동 예방, 민간의 사법적 갈등해결
  - 더 세분화하면, 공공장소에서의 안전 유지를 위한 중요 인사의 신변보호 및 자치정부 소유물(자산) 보호, 범죄예방 활동 및 집회·시위 시 질서유지를 위해 국가경찰과 협력

- 도로상의 안전 유지 활동을 위해서 도심지와 농어촌 지역의 교통관리, 관할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사범 처리 등임

#### □ 사법경찰 기능

- 국가경찰과 협력하면서 사법경찰 업무수행에 협력하고, 기타 법에서 위임하는 모든 경찰 기능을 수행함
- 기본적으로 행정경찰 기능이 자치경찰의 주 임무이고, 사법경찰기능은 보조적 역할을 수행함
  - 스페인 형사소송법 제282조와 283조에 근거한 자치경찰의 사법경찰 기능들은 범인을 체포하고 중범죄의 범행도구 및 증거를 수집할 수 있으나, 국가경찰과의 협약에 근거해서 체포한 범죄자 또는 관련 증거물 등을 즉시 국가경찰에 보고하고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음
- 일부 빌바오 자치시의 경우, 이러한 보조적 역할을 거부하고 자치시 자체의 마약퇴치 특수경찰을 창설하여 국가경찰과 직접 선의의 경쟁을 수행하고 있음

### 5. 해외사례 시사점

#### 1) 지방정부의 자치경찰권 보장

- 지자체의 장은 자치경찰을 책임지는 최종 책임자이자 결정권자로 운영하고 있음
- 지역적 통일성을 유지하면서 주민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기초정부로 하여금 자치경찰권을 행사하도록 함
-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자치경찰 조직에 관한 시장령을 제정하면서 자치경찰활동의 범위를 넓히도록 하였음
- 이탈리아 국가 헌법 제117조는 지역정부의 자치경찰권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음



- “(h) 지방의 행정경찰권을 제외하고, 국가 권한으로 법률, 공공질서, 공공 안전의 권한을 행사한다고 규정하여 국가의 경찰권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자치경찰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음

## 2) 자치경찰 활동

### □ 행정경찰

- 지방정부의 제정법령 준수를 위한 자치법규, 명령 등에서 명시하고 있는 지방정부 법규명령권에 관련된 행정 경찰업무, 지방정부를 대표하는 행사의 협력 등을 수행하고 있음
- 군중 집회 장소에서의 질서유지, 주위의 소란 제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 및 보호, 주민 보건과 청결 유지, 장례 장묘 관련 질서 및 보건 확보, 건축허가 위반감시, 통학로 안전 확보, 주차위반단속, 순찰, 경계 활동임
- 지방정부 축제 감시 관리, 지방정부 시설 및 건물 경비, 도로법 위반에 대한 조치(조서작성 및 국가경찰에 보고와 협력 활동), 수렵과 낚시 감시 등 동식물 보호와 환경보호 임무 등임

### □ 교통안전

- 교통안전 관련 업무는 도로교통정리, 교통사고 및 신고에 의한 사고조사와 예방, 속도위반단속, 음주운전단속 등임
- 일반도로 이외에도 지방정부가 관할하는 도로상 안전유지 활동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심지 내 및 농어촌 산간지역의 교통관리, 관할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 사법처리 등 교통경찰기능 등에 대해서도 대부분 자체적으로 수행하고 있음
- 자치경찰이 주차위반, 도로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행정벌 등 자치경찰권을 발동할 수 있는 사항들은 다음과 같음
  - 위험, 사고를 초래할 수 있는 주차위반

- 교통신호 위반(정지신호위반, 방향지시등 위반 등)
- 제한속도위반
- 눈, 비, 안개 시 규정신호표시 위반
- 차선위반, 추월금지 위반 등

□ 국가경찰 및 유관기관들과의 협력

- 범죄를 인지하는 경우 국가경찰에 통보하고 상호협력하며 거동 수상자에 대한 직무질문, 임의동행, 신체수색 등도 가능함
- 지방정부 소유물(자산) 보호, 마약퇴치, 범죄예방활동뿐만 아니라 집회시위의 질서유지를 위한 국가경찰과의 협력도 수행 가능함
- 소방서 등 유관기관들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주민 보호를 위한 긴급구호, 재난구조 등의 임무도 수행하고 있음



## 제5장

# 전남형 자치경찰 치안정책 개발

● 제1절 기본 방향

● 제2절 정책의 유형 구분 및 시책 리스트 구성

● 제3절 분야별 시책

● 제4절 지역맞춤형 주민체감 시책



## 제1절 기본 방향

## 1. 생활안전

## 1) 공통사항

- 지역순찰 강화에 대한 요구가 빈번한 가운데 특히 야간시간대와 어두운 골목, 학교주변, 유흥업소 주변 등 범죄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에 대한 수시순찰의 필요성이 제시됨
- 더불어 자치경찰 서비스 대상 그룹별 탄력적인 활동이 필요함
  - 경찰활동 협조에 있어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보다 큰 관심과 활동이 요청됨 (예: 무면허운전 단속 활동)
- 효과적인 범죄예방 활동은 범죄예방시설 설치·운영 및 경찰관의 순찰 강화 활동임
- 생활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으로 골목길 조명시설 및 가로등, 방범용 CCTV 및 비상벨, 방범대 순찰차, 안전한 인도 조성, 쉼터드 구역 확대 등을 갖추어야 함
- 기타 범죄예방 및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개선과제로 범죄자 신원 공개, 성범죄자 알림, 범죄자 형량 개선, 청소년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엄격한 처벌 및 교육 진행 등이 요청됨

## 2) 지역별 고려사항

- 생활안전 범죄위험 요소는 폭력과 절도 순이며 농촌·산촌 지역은 절도 폭력 순임

〈표 5-1〉 범죄 위험 요소

	1순위	2순위
도시 중심	폭력	절도
도시 주변	폭력	절도
농촌 · 산촌	절도	폭력
어촌 · 도서	폭력	절도

- 생활안전을 가장 위협받는 장소는 유흥변화가와 주거지역인데 도시 중심지역과 어촌·도서 지역은 유흥변화가가 가장 생활안전을 위협하는 장소이며 도시 주변지역과 농촌·산촌 지역은 주거지역이 가장 생활안전을 위협하는 장소임
  - 어촌·도서 지역의 경우 유흥변화가와 함께 외국인 밀집지역도 생활안전을 위협하는 장소로 나타났음

〈표 5-2〉 생활안전을 위협받는 장소

	1순위	2순위
도시 중심	유흥변화가	주거지역
도시 주변	주거지역	유흥변화가
농촌 · 산촌	주거지역	유흥변화가
어촌 · 도서	유흥변화가	외국인 밀집지역

## 2. 교통안전

### 1) 공통사항

- 교통안전을 가장 위협하는 요소는 교통법규 위반과 이륜차 법규위반임
- 학교 주변 지역의 치안 강화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면서 학교주변 불법주정차 및 보행자 무단횡단 단속, 단속카메라 설치, 학교 앞 교통캠페인 등 교통지도의 필요성이 나타남
- 최근 배달 서비스 증가와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많아지면서, 이륜차에 대한 단속이 중요하게 나타남
  - 세부적으로 배달오토바이의 인도주행·신호위반 뿐만 아니라 헬멧 등 보호장구 착용도 철저히 단속해야함
- 또한 교통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위반, 이륜차 법규위반에 대한 단속 강화와 안전한 인도 조성 및 확장, 사고다발지역의 도로정비, 교통안전구간 확보, 인프라 확보(교통안전 표시물 추가 설치 및 홍보, 안전시설 등) 등이 요청됨
- 효과적인 교통약자 보호활동은 어린이 등하굣길, 노인시설 주변 보행로 등에 대한 안전활동 강화와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내 교통시설 개선 활동으로 나타났음
- 특히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교통환경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제시되며 구체적으로 노인·장애인·임산부·미취학아동 등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교통안전 장치를 지역에 확보해야 함
  - 더불어 교통약자 대상의 교통안전 교육이 단발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함



## 2) 지역별 고려사항

- 도시 중심지역은 이륜차 법규위반을 가장 위협하는 요소로 나타났음
- 어촌·도서 지역은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안전 시설 부족을 위협 요소로 꼽았음

〈표 5-3〉 교통안전을 가장 위협하는 요소

	1순위	2순위
도시 중심	이륜차 법규 위반	교통법규 위반
도시 주변	교통법규 위반	이륜차 법규 위반
농촌·산촌	교통법규 위반	이륜차 법규 위반
어촌·도서	교통법규 위반	교통안전시설 부족

- 도민의 교통법규 위반을 위협하는 요소는 음주운전과 불법주정차로 나타났음
  - 어촌·도서의 경우 음주운전과 과속신호 위반으로 나타났음

〈표 5-4〉 교통법규 위반 위협 요소

	1순위	2순위
도시 중심	음주 운전	불법 주정차
도시 주변	음주 운전	불법 주정차
농촌·산촌	음주 운전	불법 주정차
어촌·도서	음주 운전	과속 신호 위반

- 효과적인 교통안전 강화활동으로 법규위반단속과 교통안전 시설개선이 제시되었음
  - 도시주변부는 교통안전시설개선이 가장 효과적인 교통안전 강화활동으로 제시되었음

〈표 5-5〉 교통안전 강화 활동

	1순위	2순위
도시 중심	법규위반단속	교통안전 시설개선
도시 주변	교통안전시설 개선	법규위반단속
농촌·산촌	법규위반단속	교통안전 시설개선
어촌·도서	법규위반단속	교통안전 시설개선

### 3. 사회적 약자 보호

#### 1) 공통사항

- 사회적 약자 보호 시책으로 신속한 수사에 기반한 빠른 대응성 확보와 신고를 위한 복지체계 및 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신문고 제도 등 다양한 제도적 지원이 요구됨
- 가장 필요한 사회적 약자 보호 활동은 신속한 수사를 통한 엄정대응 및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강화로 나타났음
- 특히 가해자 엄중처벌에 대한 요구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음
  - 미미한 처벌을 지양하고 정당하고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발판이 마련되어야 함
- 범죄 피해자 지원책은 범죄 재발방지를 위한 환경개선과 가해자로부터 보호 조치 활동으로 나타났음
- 범죄 피해자들의 복지 제공으로서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법률 지원(법률상담), 심리 상담 지원(상담센터 확충·홍보, 프로그램 활성화, 전문인력 투입), 보호 체계 확보(사회적 약자 보호 시설 구축, 모니터링) 등이 다양하게 진행되어야 함

- 마지막으로 최근 학교폭력이 중요한 사회문제로 주목받으면서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응이 필수적임
- 학교폭력에 대한 지역과 학교의 적극적인 대응 및 학교 치안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학교 주변에 안전시설 확충과 순찰 강화가 요구됨

## 2) 지역별 고려사항

- 도시중심·도시주변부가 농촌·산촌·어촌·도서 지역보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안전성 및 사회적약자 보호활동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표 5-6〉 사회적 약자 안전성 및 만족도

순위	사회적 약자 안전성	사회적 약자 만족도
1	도시 중심	도시 중심
2	도시 주변	도시 주변
3	농촌·산촌	어촌·도서
4	어촌·도서	농촌·산촌

- 가장 시급하게 근절해야 할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는 청소년범죄, 성범죄, 가정폭력 순으로 나타났음
  - 다만, 농촌·산촌 지역은 청소년 범죄, 성범죄, 아동학대 순임

〈표 5-7〉 시급하게 근절해야 할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1순위	2순위	3순위
도시 중심	청소년 범죄	성범죄	가정폭력
도시 주변	청소년 범죄	성범죄	가정폭력
농촌·산촌	청소년 범죄	성범죄	아동학대
어촌·도서	청소년 범죄	성범죄	가정폭력

## 4. 소통 및 참여

### 1) 공통사항

- 자치경찰제에서는 현장 중심의 경찰 서비스가 강조되면서 경찰과 주민과의 주기적인 소통과 더불어 자치경찰사무 수행시 담당 공무원의 적극성 및 투명성이 요청됨
- 이들의 치안 활동과 범죄예방 활동 등에 대한 대시민 홍보 및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
- 특히, 지역주민들이 사회적 약자 보호 활동을 위한 정책들을 잘 알지 못하여 혜택을 보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주민들과의 지속적인 네트워크 구축 및 홍보가 이루어져야 함
- 제도적 차원에서는 자치경찰 활동에 필요한 예산확보와 더불어 유관기관(자율방범대원, 생활안전협의회, 공공기관, 지자체, 학교 등) 들과의 협업 및 정보공유가 진행되어야 함
- 주민참여와 관련하여 주민 제안 순찰제 등과 같은 여러 참여제도를 통해 주민들의 자치경찰활동 참여방안을 다각화해야 함
- 그 과정에서 주민들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가능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해야 함

### 2) 지역별 고려사항

- 도시지역에 거주하더라도 주변부에 살고있는 도민들은 자치경찰제에 대하여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반면에 자치경찰의 효과성에 대한 농촌·산촌, 어촌·도서 지역 거주자들의 기대가 도시 중심·주변지역 거주자들의 기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사회적약자 보호 활동 및 생활안전 활동에 대한 안전성 및 만족도는 도시중심 거주자들이 도시주변 거주자들보다 높음

- 생활안전활동에 대한 안전성은 도시주변 과 농촌·산촌 지역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 반면에 교통안전 활동에 대한 안전성 및 만족도는 도시 주변 거주자가 도시 중심 거주자보다 높음
  - 교통안전활동 만족도는 농촌·산촌 지역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제2절 정책의 유형 구분 및 시책 리스트 구성

### 1. 정책의 유형 구분

#### 1) 정책의 대상 지역 및 그룹 특성

##### 가. 대상 지역

- 시책에 따라 범죄 다발지역, 도서 지역의 공·폐가, 여성 안심 귀갓길, 농산물 보관장소, 자연부락 및 아파트 밀집지역, 골목길, 원룸촌 일대, 청소년 운집 구역(오락실, 피시방, 공원 등), 공중화장실, 관광지 및 전통시장, 버스 정류장 등 시책의 대상 지역을 구체적으로 구분함

##### 나. 대상 그룹

-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시책의 경우 어르신, 여성, 아동·청소년 등 시책 대상 그룹을 구분함

#### 2) 타 기관과의 연계

- 자치경찰 서비스 시행시 주민참여, 지방행정 및 유관기관과의 연계 사항을 고려함
  - ① 주민참여 연계형
  - ② 지방행정 연계형
  - ③ 유관기관 연계형

#### 3) 정책 효력의 시간적 범위

- 단기, 중기, 장기로 정책 효력의 시간적 범위를 설정할 수 있음
  - ① 단기: 1년 이내
  - ② 중기: 2~3년 자치경찰위원회 임기 이내

- ③ 장기: 3년 이상

## 2. 시책 리스트의 구성

- 자치경찰 시책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분야별로 각 시책에 대한 리스트를 작성함
- 분야별 지원시책 - 대상지역 - 대상그룹 - 연계형 - 정책 효력의 시간적 범위 관점을 포함하여 구성함

〈표 5-8〉 시책 리스트 구성

시책	대상지역	대상그룹	연계형	효력의 시간적 범위

## 제3절 분야별 시책

### 1. 생활안전

#### 1) 생활안전을 위한 순찰 및 시설 운영

##### 가. 지역 주민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 시설 설치 및 운영

##### □ 위험방지 및 범죄예방 시설 구축<sup>28)</sup> (고흥)

○ 범죄예방진단팀(Crime Prevention Officer, CPO)은 범죄취약요소를 전문적으로 진단하고 범죄환경을 개선해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 환경을 만드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각 지역의 범죄 발생분석과 범죄 발생요인에 대하여 지역적, 인적 요소를 면밀하게 분석 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범죄예방 활동에 활용 중임

○ 고흥지역은 18개소 36대의 CCTV(회전형 18대, 고정식 18대), 편의점에 비상벨, 바닥 조명(로고젝트), 공중화장실 15곳을 선정해 비상벨, 안심 거울 등의 장치를 추진하고 있음

- 그 밖에도 CCTV 광케이블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올해 4월부터 515개 마을 총 985대 CCTV를 설치하여 범죄나 실종 발생시 범인 검거, 실종자 수색, 위험방지·예방 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 범죄예방 시설물 설치 및 환경개선<sup>29)</sup> (영암)

○ 영암경찰서는 여성·사회적 약자 보호와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영암군과 합동으로 기찬뫼길 6km 구간 합동 방법진단을 실시하였음

○ 방법용 CCTV 3개소, 안심거울 50개소, 범죄예방 벽화 조성 3개소, 쏘라표

28) 전남매일(2021.08.19.) 자치경찰제와 범죄예방진단제도를 통한 참여치안 기대.

29) 광주·매일신문(2021.08.22.). 주민 밀착형 치안정책, 자치경찰제



지병 100개, 안심귀갓길 표지판, 위치표시안내판 60개, 안심비상벨 3개 등 범죄 예방 시설물을 추가 설치하며 환경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관내 일체형 방범시설 설치<sup>30)</sup> (무안)

- 무안경찰서는 전남 최초 ‘일체형 방범시설’ 특수 시책을 추진함으로써 읍·면 별 범죄취약지 5개소를 선정하여 일체형 방범시설을 설치하였음
- 일체형 방범시설은 범죄 다발지역에 방범용 CCTV, 안심비상벨, 로고라이트를 한 장소에 설치함으로써 방범시설 설치 효율성을 증대하여 주민 체감 안전도를 향상시키는 특수시책임
  - 특히, 범죄취약지에 로고라이트를 설치하여 CCTV, 비상벨 설치장소임을 알리는 범죄예방 문구를 송출해 주민에게 방범시설 홍보 효과를 거둘 수 있어 주민 만족도가 매우 높음

나. 지역 주민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 진단

□ 안전한 섬 만들기 위한 범죄예방진단 실시<sup>31)</sup> (신안)

- 목포경찰서는 신안군과 안전한 섬을 만들기 위해 CCTV를 추가 설치하고, 주민 스스로가 참여하는 자체 방범활동을 강화하였음
  - 특히, 목포경찰은 생활안전과장 등 경찰관 4명으로 구성된 범죄예방진단팀(CPO)을 최근 발족, 향후 도서 지역학교(61개교)나 보건진료소(23개소),우체국(8개소) 등을 찾아 범죄 안전 진단을 실시할 예정

□ 유인도서 범죄예방진단팀과 현장 치안점검<sup>32)</sup>(진도)

- 진도경찰서는 관내 경찰력이 배치되지 않은 유인도서 중 고군면 소재 금호

30) BIGDATAnews(2020.11.02.). 무안경찰, 일체형 방범시설 설치로 범죄예방 기여.

31) 전남일보(2016.06.23.). 신안군·경찰, 안전한 섬 만들기 ‘안간힘’

32) 전남매일(2021.09.02.). 진도경찰서 유인도서 주민과 치안간담회

도와 조도면 소재 성남도, 옥도 등 6개 섬을 방문해 치안활동을 펼침

-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해 매년 시행되는 도서 수색작전과 병행하였으며 진도경찰서장이 직접 정보보안·여성청소년·생활안전 등 부서별 진단팀을 구성하여 치안서비스가 미치기 어려운 지역을 살핌
  - 특히, 범죄예방진단팀을 투입해 공·폐가 등 범죄 취약요인을 점검하고 도서지역 주민 신고 향상을 위해 밀입국 사례를 알림

#### 다. 지역주민 안전을 위한 순찰과 범죄예방활동 시행 및 관리

##### □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 활동<sup>33)</sup>(구례)

- 구례읍내파출소는 최근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많은 주민이 이용하는 금융기관을 찾아 범죄예방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음
- 구례읍내파출소는 자체 제작한 홍보용 머그컵을 각 금융기관에 전달, 경찰이 펼치고 있는 보이스피싱 예방 대책을 설명하고 금융기관에서도 피해 예방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였음

##### □ 도서지역 범죄예방 교육 실시<sup>34)</sup>(해남)

- 해남경찰서는 관내 도서지역 유인도서를 방문하여 안전사고 위험요소 발굴과 주민불안요소 해결을 위한 주민 간담회를 통해 범죄예방활동을 펼쳤음
- 지리적 여건상 범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도서지역에 선제적·예방적 경찰활동으로 주민불안요소 발굴·해소하는 등 도서주민과 공동체 치안 및 유기적 협력관계를 통해 치안 인프라를 구축하여 도서 주민들이 치안 공백으로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환경개선을 진행할 계획임

33) 광주매일신문(2021.07.11.). 구례읍내파출소, 보이스피싱 예방 홍보 활동

34) 스포츠서울(2021.08.13.). 해남경찰서 '도서지역 범죄예방' 교육 실시

□ 범죄예방 취약장소 집중 순찰 신청기간 운영<sup>35)</sup>(담양)

- 담양경찰서는 주민들로부터 직접 탄력순찰 취약장소 신청을 받기로 하였음
  - 탄력순찰대상으로 지정된 취약장소는 순찰차가 5분간 머물면서 도보순찰을 병행하고 또한 그 장소에 범죄 예방 시설이 필요할 경우 방법시설개선도 추진함

□ 부착식 경광등을 이용한 범죄예방 및 순찰 강화<sup>36)</sup>(화순)

- 화순경찰서가 부족한 근무인력에 비해 늘어나는 치안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부착 가능한 LED 경광등인 ‘고인돌 등댓불’을 이용한 탄력순찰 및 범죄예방 활동을 실시함
- 화순경찰은 ‘등댓불’을 신고접수가 많은 곳, 여성안심 귀갓길, 농산물 보관창고 또는 농가 등지에 우선적으로 설치 중이며 범죄 취약시간대와 우범지역 주변에 일시 부착해 순찰활동 및 주민들의 체감 안전도를 높이는 효과를 거두는 중임
  - 경찰은 근무 때마다 이동하며 ‘등댓불’을 부착하고 10분여 간 주변을 순찰하고 다음날 오전 앞선 근무자가 부착한 ‘등댓불’을 수거하며 낮 시간 때 방법 순찰 활동을 펼침

□ 보이스피싱 및 금융범죄 예방을 위한 ‘모닝나인’ 활동 실시<sup>37)</sup>(해남)

- 해남경찰서는 금융기관 종사자의 보이스피싱 범죄 신고를 한층 강화하고자 ‘Morning Nine(모닝나인)’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였음
  - ‘Morning Nine’ 활동은 지구대·파출소 지역안전경찰관이 금융기관 개장 5분전 방문해 금융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심리적으로 불안해 보이는 고객에게 고액을 인출 하는 등 의심 행동을 보이면 즉시 신고하도록 홍보하였음

35) 무등일보(2019.01.16.). 담양경찰, 범죄예방순찰 취약장소 집중 신청기간 운영

36) NEWSIS(2019.09.24.). 화순경찰 ‘고인돌 등댓불’이용 탄력 순찰로 방법활동 나서

37) news1(2021.03.24.). 해남경찰서 “은행 종사자 역할 중”... 보이스피싱 예방 활동

## 2) 주민참여방범활동의 지원 및 지도

### 가. 범죄예방을 위한 주민참여 지역 협의체 구성·운영

#### □ 주민공감 치안협력단체 활동사항 점검 및 간담회<sup>38)</sup>(영광)

- 영광경찰서는 주민밀착형 자치경찰제의 조기 정착을 위해 자치경찰사무 관련 협력단체인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자율방범연합회와 간담회를 개최함
- 전남자치경찰위원회의 주요 시책인 대형교통사고 예방, 학교폭력 및 어르신 범죄피해 예방 등에 대해 설명하고, 협력단체의 활동 사항 점검과 지역치안의 의견수렴을 통해 주민 공감 협력치안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음

#### □ 지역안전순찰 시행 및 지역공동체치안협의체 운영<sup>39)</sup>(고흥)

- 고흥경찰서가 ‘지역안전순찰’을 전면시행하며 주민 안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
  - 지역안전순찰이란 지역안전 전담경찰관이 순찰활동 중 지역주민들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범죄예방 전담팀의 정밀진단을 통해 주민과 경찰, 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지역공동체치안협의체’를 가동해 지역사회의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는 제도
- 고흥경찰서는 지역 안전순찰 및 지역공동체치안협의체를 통해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 고흥군과 협조하며 치안 문제를 해결해 오고 있음
  - 지난해에는 지역주민과 경찰의 의견을 반영한 ‘학교 가는 안전한 골목길’을 조성해 낙후된 환경을 개선했으며, 마을 방범 CCTV 985대를 고흥군청 통합 관제실에서 관제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였으며 가로등, 여성·아동안심귀갓길 로고젝터, 여성안심지킴이집 안심벨,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 등 안전을 위한 시설들을 개선하고 있음

38) 전남매일(2021.08.26.). 영광경찰서, 주민 공감 치안 협력단체 간담회 개최

39) 전남매일(2021.04.26.). 고흥경찰서, ‘지역안전순찰’ 치안 문제 해결

## 나. 주민참여형 범죄예방활동 시행·관리

### □ 경찰관 미배치 도서 30개소 대상 도서 지킴이 위촉<sup>40)</sup>(완도)

- 완도경찰은 주민·관계기관 등 지역사회와 함께 치안 인프라를 구축, 안전한 섬 조성을 위해 경찰관 미배치 도서 30개소를 대상으로 43명의 ‘도서 지킴이’를 위촉하였음
- 도서 지킴이 선정은 지역안전순찰 확대시행에 따른 주민 참여형 ‘지역공동체 치안 협의체’ 구성과 민(民)-경(警)협력을 바탕으로 경찰 활동 정착을 위해 추진되었음
  - 완도는 유인도서 54개소 중 경찰관 미배치 도서가 30개소에 달하고 있어 주민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해 지역 실정을 잘 이해하고 있는 이장단과 어촌계장 중심으로 선정하였음

### □ 농산물 절도예방 자율방범대 합동순찰<sup>41)</sup>(순천)

- 순천경찰서는 자율방범대와 합동으로 심야 자연부락 및 아파트 밀집지역 일대 취약지 합동 방범순찰을 실시하였음
- 수확기 농축산물 절도 예방, 보이스피싱 예방 전단지 등 배부, 교통사고 및 금융기관 주변 일대 범죄예방을 위한 합동 순찰임
  - 파출소에서 자체 구입한 방범조끼, 손전등 등 각종 장비를 자율방범대에 전달하였음

### □ 자율방범대와 우리 동네 탄력순찰 활동 전개<sup>42)</sup>(담양)

- 담양경찰서는 협력치안을 통한 선제적 범죄예방활동을 위해 중앙파출소 여성자율방범대와 함께 우리 동네 탄력순찰 활동을 전개하였음

40) 광남일보(2021.03.28.). 완도경찰, 지역공동체 치안 활성화 사회안전망 구축

41) 전남일보(2020.11.04.). 순천경찰, 농산물 절도예방 자율방범대 합동 순찰

42) 무등일보(2020.06.04.). 담양경찰, 자율방범대와 우리 동네 탄력순찰

- 재난지원금을 노리는 범죄 예상지역 및 폭력 발생이 우려되는 골목길, 여성 범죄가 우려되는 원룸촌 일대를 살펴보고 지역주민들을 만나 치안의견을 수렴하였음

### 3) 주민의 일상생활 관련 사회질서 유지 및 그 위반행위의 지도·단속

#### □ 방역수칙 위반 업소 불법 영업 단속<sup>43)</sup>(여수)

- 여수경찰서는 여수시 여서동 홀덤펍에서 방역수칙을 어기고 카드 게임을 즐기던 업주·종업원·손님 등을 감염병 예방법위반 혐의로 적발하였음
- 경찰은 기존 불법 영업 신고가 몇 차례 있던 점을 고려 강제로 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 방과 별실 등에 숨어 있던 업주와 손님 9명을 단속하였음

### 4) 그 외 지역주민의 생활안전에 관한 사무

#### □ 코로나19 확진자동선 분석 및 확산방지 업무 지원<sup>44)</sup>(순천)

- 순천지역의 코로나 확산 추세가 심해짐에 따라 순천경찰서는 수사관 12명을 지원하여 관계기관과 협력해 순천 보건당국의 방역활동을 적극대응 및 지원하였음
  - 지역경찰관들은 역학 조사관들과 동행, 확진자 동선 CCTV 분석, 접촉자 분류와 역학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조사관 신변 보호와 돌발 상황 대비 등의 업무 활동을 수행 중임

#### □ 휴가철 안전을 위한 해수욕장 방역 점검<sup>45)</sup>(완도)

- 완도 경찰서는 휴가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역 내 해수욕장 6개소를 방역점검 하였음

43) NEWSIS(2021.08.20.). 코로나 방역수칙 위반, 심야영업 여수 홀덤펍 업주·손님 무더기 적발

44) 아시아경제(2020.08.27.). 전남경찰'순천시 코로나19'확산 방지 적극 지원

45) 프레시안(2021.08.12.). 완도경찰서, 여름 휴가철 해수욕장 6개소 방역 점검

- 완도경찰서장은 해수욕장 현장을 찾아 코로나19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관광객들에게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하였음

□ 침수 피해주민 복구 지원 활동<sup>46)</sup>(진도)

- 진도경찰서는 폭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시장과 주변 상가의 피해 물품 정리·배수 작업 등 수해 쓰레기를 처리하며 마을 정비 작업에 지원하였음

## 2. 교통안전

### 1)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지도·단속

#### 가. 교통법규 위반 지도·단속, 공익신고 처리 등

□ 휴가철 음주운전 집중단속 실시<sup>47)</sup>(나주)

- 나주경찰서는 휴가철을 맞아 교통사고 예방,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 조성을 위한 휴가철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진행하였음
- 야외활동 및 교통량이 증가하고 있는 유원지 및 유흥가 주변 자동차전용도로 연결도로 등에서 집중 실시하였으며 주요도로 뿐 아니라 마을 입구 앞 도로까지 단속을 진행하였음
  - 단속과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주요 교차로 플래카드 게첨, SNS홍보 등 음주운전 추방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활동도 병행하고 있음

### 2) 교통안전시설 및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심의·설치·관리

#### 가. 교통사고 예방, 교통 소통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운영

□ 활주로형 횡단보도 설치를 통한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활동<sup>48)</sup>(강진)

46) 광주매일신문(2021.07.11.). 진도경찰, 폭우 피해 주민 돕기 구슬땀

47) 전남일보(2021.08.04.). 나주경찰, 유원지·유흥가 주변 음주운전 집중단속

48) 이뉴스투데이(2021.05.24.). 강진군, 활주로형 횡단보도 설치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 나서

- 강진경찰서와 강진군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사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보행자가 많은 횡단보도와 교통사고가 잦은 곳을 선정해 25개 횡단보도에 LED유도등 394개를 설치하였음
  - 활주로형 횡단보도란 횡단보도 양 옆을 따라 일정한 간격으로 매립한 LED유도등을 점멸해 건널목임을 인지시키는 교통안전시설물임

####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선제적 보완공사 실시<sup>49)</sup>(함평)

- 함평경찰서는 매년 태풍으로 인해 상습적으로 토사가 유출된 지방도로에 대해 전남도로관리사업소와 협업하여 선제적 보완공사를 실시하였음
- 위험지역 보완공사와 함께 태풍 등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경광등·플래쉬 링카·발광형 텔리네이터 등 빔길 운전자들에게 시인성을 제고할 수 있는 시설물들을 확충할 예정임

#### □ 대형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진단 및 현장시설 점검<sup>50)</sup>(광양)

- 광양경찰서는 관내 국도2호선, 지방도, 시도 등을 대상으로 현장 안전진단을 실시하였음
- 사망사고 발생 및 상습 교통법규 위반 장소 주요 교차로 등 교통안전 시설을 점검하였으며 점검을 토대로 교통안전 홍보 및 시설물 개선, 법규위반 단속 등 3단계 정책을 추진할 예정임
  - 대형차량 운송업체에 법규준수 서한문을 발송하고, 전단지 등을 활용해 고령운전자 및 보행자 맞춤형 홍보를 실시할 계획, 또한 교통시설물을 가리는 가로수 제거, 노후·퇴색된 교통안전시설물을 일제 정비하여 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방침임

49) 데일리한국(2021.08.18.). 전남 함평경찰, 상습 토사 유출지 보완공사 실시

50) news1(2021.08.30.). 광양경찰, 대형교통사고 예방 위한 도로 안전진단 실시



□ 교통단속기 확대 설치 운영으로 사고 예방 효과<sup>51)</sup>(보성)

- 보성경찰서는 농산물 수확철을 맞아 고령주민들의 농기계 운행 증가로 인한 교통사고 증가를 대비해 고정식 과속·신호위반 단속기기 및 이동식 단속함을 상습과속구간 및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설치하였음
- 51개소에 확대 설치해 본격적 단속 활동 강화로 동년 대비 인적 피해 교통사고가 약 20% 감소하는 등 사고 예방 효과를 거두고 있음
  - 또한 이동식 단속함과 비대면 장비 등 ‘차량 규정 속도 준수’ 캠페인을 펼치고 있어 교통사고가 감소하는 효과를 보고 있음

3)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 및 홍보

가.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

□ 사회적 교통약자 보호 교육<sup>52)</sup>(함평)

- 함평경찰은 이륜차 및 사발이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대한노인회함평군지회 노인대학생 50명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였음
  - 군 전체 인구 3만1526명 중 65세 이상 노령인구가 1만 1778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37%를 차지하고 있으며 고령자들의 주 이동 수단인 이륜차·사발이·전동차 및 농기계 사고가 대부분을 차지함
- 함평경찰은 횡단보도 및 육교 이용, 녹색불 횡단, 이륜차 안전모 착용, 야간 외출 시 밝은 옷 착용, 음주운전 안하기 등 실천을 집중적으로 교육하였음

□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 교통안전 교육<sup>53)</sup>(나주)

- 나주경찰서는 개학기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나주교육지원청 협업,

51) 뉴스핌(2020.10.13.) 보성경찰서“교통단속기 확대 설치로 사고 감소 추세”

52) 아시아투데이(2021.07.20.). 함평경찰, 사회적 교통약자 보호 교육 호응

53) 전남일보(2021.09.01.). 나주경찰,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였음

- 교육은 최근 개정 시행된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수칙 및 교통사고 사례 자료를 활용해 사고원인 분석을 통한 효과적 예방교육을 진행하였음

#### 나. 교통안전에 대한 홍보

##### □ 안전속도 5030 정책 홍보 활동<sup>54)</sup>(곡성)

- 곡성경찰서는 4월부터 전면 시행된 안전속도 5030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곡성군 관내 군내버스에 홍보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실시하였음
- 안전속도 5030의 시행에 앞서 곡성읍·오곡면·옥과면·석곡면의 주택, 상가 지역에 교통안전표지판과 노면표시 등 511개소에 설치 완료하였음

#####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전동 킥보드 이용수칙 홍보 활동<sup>55)</sup>(진도)

- 진도경찰서는 최근 관내 공유 킥보드 업체 개업으로 교통사고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선제 대응책으로 진도군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과 각 학교에 이용수칙 안내문을 제작해 배부하고 업주와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교육활동을 진행하였음

##### □ 대형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화물업체 교통안전 홍보 활동<sup>56)</sup>(영광)

- 영광경찰서는 전남자치경찰위원회의 “대형교통사고 예방 긴급대책 마련” 지휘와 관련 최근 전남지역 대형교통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유사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화물차량 업체를 방문하여 교통안전 홍보 활동을 실시하였음
- 운전자들에게 최근 교통사고 사례를 알리며 교통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교통법규 준수와 안전운행 실천을 당부하였음

54) 내외뉴스통신(2021.05.18.). 곡성경찰서, 안전속도 5030 홍보활동 실시

55) 광주매일신문(2021.04.04.). 진도경찰서, 전동킥보드 이용수칙 홍보 활동

56) 시사매거진(2021.08.26.). 영광경찰서, 대형교통사고 예방 활동 총력 전개

□ 대형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위험구간 점검 및 시설개선(영광)

- 지자체 등 도로관리청과 협업하여 급경사·급커브 등 위험구간 점검 및 시설 개선을 할 예정

4) 통행 허가, 어린이 통학버스의 신고, 긴급 자동차의 지정 신청 등 각종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무

가.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신고접수·관리 및 관계 기관 합동 점검

□ 어린이 통학버스 일제 점검<sup>57)</sup>(함평)

- 함평경찰서는 교통안전공단, 지자체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어린이 통학버스 일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음
- 점검은 통학버스 현행파악 및 미흡 사항 개선을 통한 관리·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고를 선제적 예방하기 위함이며 통학버스 운영자에게 안전 운행 준수 당부와 함께 안전과 교통사고 감소를 목표로 하는 안전속도 5030 교통 정책에 동참을 당부하였음

5) 그 밖에 지역 내 교통안전 및 소통에 관한 사무

가. 지역주민의 교통안전 관련 112신고 처리

□ 도로 방제 작업<sup>58)</sup>(목포)

- 목포경찰은 목포과학대 앞 교차로에 락스 추정 물질 누출신고를 접수하여 소방당국과 함께 도로를 통제하고 방제작업을 실시하였음

나. 지역 내 교통안전대책 수립·시행

□ 사고 다발지역 화물·건설기계 통행 제한<sup>59)</sup>(여수)

57) 데일리한국(2021.08.02.). 전남 함평경찰, 어린이 통학버스 일제점검

58) 목포MBC(2021.08.10.). 목포 도로에 락스 추정 물질 누출.. 방제작업 실시

- 여수경찰서는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한재로터리-한재사 거리에 이른 1.9km의 도로에 4.5t이상 화물차량과 건설기계에 대한 통행 제한을 시행할 예정임

□ 농촌 인력시장 교통안전을 위한 활동 지원<sup>60)</sup>(무안)

- 무안군·무안경찰은 합동으로 승달문화예술회관에 인력시장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경찰은 새벽 인력시장에 나온 노동자들의 안전한 구직활동을 위한 교통지원을 병행하였음

### 3. 사회적 약자 보호

#### 1)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보호 업무 및 가정·학교·성폭력 등의 예방

가. 아동·노인·장애인 학대 예방과 피해 아동·노인·장애인에 대한 보호 활동

□ 위기 어르신 보호 발굴<sup>61)</sup>(여수)

- 여수경찰서는 자치경찰제 정착과 지역민의 치안 요구에 부응하고자 지역안전순찰 활성화를 위한 회의를 개최하여 관내 치안문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해결하는 ‘지역안전순찰’을 활성화 하고 자치경찰위원회의 1호 시책인 ‘위기 어르신 보호·발굴’ 방안을 논의하였음
  - 여수경찰서는 주민과 접촉하여 치안문제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 치안서비스가 필요한 위기 어르신을 적극 발굴하여, 지자체와 협력하여 선제적으로 지역 치안문제를 해결할 예정임

59) 뉴스핌(2021.08.26.). 여수 ‘한재로’ 9월1일부터 4.5t이상 화물차·건설기계 통행 제한

60) e대한경제(2021.06.18.). 무안군-경찰서, 농촌 인력시장 안전 인프라 지원

61) 경찰가독신문(2021.08.09.). 전남 여수서, 자치경찰제 정착 위한 ‘지역안전순찰’ 강화

#### □ 아동학대 예방 활동<sup>62)</sup>(광양)

- 광양경찰서가 광양시, 광양교육지원청, (주)SNCC 3개의 기관·기업 대표와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한 기반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음
  - 협약의 주요 내용은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신속출동, 수사, 보호기관 연계, 피해아동 보호 및 지원에 대한 협력체계 구축, 학생·학부모 대상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시, 각 기관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과 학대피해 아동 신고 정책 적극 협조 등
- 협약 진행 후 관내 주요 관공서와 다중이용시설 10개소를 방문 배너 설치, 홍보물 등을 전달하였음

#### □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대상 확대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sup>63)</sup>(곡성)

- 곡성경찰서는 가정 내 범죄에 엄정 대응하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인복지시설 25개소 500여명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노인 학대 관련 법률과 실제 사례를 내용으로 신고 의무자 학대 예방 교육을 실시하였음

#### □ 아동학대 예방 지자체 합동 점검<sup>64)</sup>(장흥)

- 장흥경찰서 여성·청소년계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 장흥군, 장흥교육청 등 유관 기관과 함께 합동 점검을 실시하였음
- 합동 점검반은 관내 아동학대 재발 우려 가정 방문 및 공부방, 그룹 홈 등을 점검하였으며 학대 의심 가정을 세부적으로 분류 관찰할 방침임

62) 국민일보(2021.08.19.). 광양경찰서, 아동학대 예방 적극 나서

63) 전남일보(2021.03.22.). 곡성경찰, 맞춤형 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64) 광주매일신문(2020.06.30.). 장흥경찰, 아동학대 예방 지자체 합동 점검

### 나. 아동·청소년·노인·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의 실종 예방·대응 활동

#### □ 온 동네 한바퀴 순찰을 통한 애로사항 접수 및 치매노인 실종예방<sup>65)</sup>(화순)

- 화순경찰서 읍내지구대는 2월부터 각 마을을 2주에 1회 방문하는 것을 목표로 탄력순찰을 전개하였음
- 현장경찰관들은 2주 주기로 마을을 모두 순찰하는 형식으로 순찰 중 주민들을 만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듣고 치매를 앓고 있는 노인에게 대해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배회감지기를 착용토록 홍보하였음
  - 기존 보급된 배회감지기에 대해서 작동 여부를 점검하므로 실종 시 신속하게 위치정보를 확인해 찾을 수 있도록 하였음

#### □ 아동 실종 방지를 위한 예방 활동<sup>66)</sup>(장흥)

- 장흥경찰서는 최근 아동·청소년 실종 예방을 위해 장흥읍 소재 어린이집을 방문해 70여명에 아동에 대한 지문 등록, 사진 등록 등 찾아가는 사전 등록을 실시하였음
  - 최근 아동·노인 실종사건이 빈발하고 있는 가운데 지문 등 사전 등록은 조기발견에 큰 도움이 되고 있음

#### □ 어르신 범죄피해 예방 ‘안전한 귀갓길’ 조성 사업<sup>67)</sup>(광양)

- 광양경찰서는 전남 자치경찰위원회 1호 시책인 ‘어르신 범죄피해 예방’에 발 맞춰 광영동 일대 어르신 안전한 귀갓길 조성 사업을 완료하였음
- 확보된 예산을 통해 광영동 일대 마을회관 및 귀갓길 진단 후 취약한 마을회관 6개소와 귀갓길 2개소에 대해 태양광 안심등 32대를 설치, 어르신의 야

65) 광남일보(2020.02.17.). 화순경찰 읍내지구대, ‘온 동네 한 바퀴 순찰’ 실시

66) 광주매일신문(2021.07.18.). 장흥경찰, 찾아가는 지문 등 사전등록

67) 아시아경제(2021.08.25.). 광양경찰, 주민 제안사업 어르신 안전한 귀갓길 조성

간보행환경을 개선하였음

#### 다. 아동 대상 범죄예방 및 아동안전 보호 활동

##### □ 아동 범죄 예방을 위한 아동지킴이집 지정 및 점검<sup>68)</sup>(구례)

- 구례경찰서는 아동 범죄예방을 위해 문구점, 편의점 등 아동안전지킴이집으로 지정하여 활동하고 있는 업주를 대상으로 점검활동 및 재위촉을 실시하였음

#### 라. 청소년 비행방지 등 선도·보호 활동

##### □ 청소년 선도 및 보호 활동<sup>69)</sup>(영광)

- 영광경찰서는 여름방학을 맞아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 선도·보호를 위한 맞춤형 현장 활동을 전개하였음
  -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다중이용시설 및 청소년 유해업소 대상 방역수칙 준수, 청소년 술·담배 판매 금지 등 청소년 보호법 준수 여부 등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였음

##### □ 학교폭력 예방 청소년 선도 활동 전개<sup>70)</sup>(장성)

- 장성경찰서는 신학기에 들어 학교폭력과 청소년 탈선을 사전 예방하고자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학교폭력예방 등 청소년 선도 활동을 전개하였음
- 선도 활동에는 장성교육지원청, 장성군청, 장성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이 참여하였으며 심야 취약시간대 장성읍과 삼계면 소재 피시방, 오락실, 공원 등 청소년 출입 장소에 대한 점검과 순찰 활동을 실시하였으며 담배·주류 판매업소를 방문하여 청소년 대상 유해 약물 판매행위 성인 을 이용한 대리구매 행위 예방 홍보도 진행하였음

68) 무등일보(2020.04.05.). 구례경찰, 아동안전지킴이집 점검 및 재위촉

69) 광주매일신문(2021.08.04.). 영광경찰, 여름방학 청소년 선도 앞장

70) 광남일보(2021.04.01.). 장성경찰, 학교폭력예방·청소년 선도 활동 전개

#### □ 청소년 선도 및 보호를 위한 거리 홍보<sup>71)</sup>(목포)

- 목포경찰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청소년 대상 목포교육지원청과 함께 거리홍보를 진행하였음
- 활동은 청소년 운집구역을 중심으로 PC방, 노래방, 편의점, 청소년 출입 제한 업소를 방문해 주류와 담배 구입 시 신분증 확인을 당부하고 위기 청소년의 비행 예방과 학교 밖 청소년 발굴, 학교폭력신고 117홍보 등으로 이루어졌음
  - 목포경찰은 청소년 범죄예방을 위한 특별 예방교육 및 위기청소년 면담 활동 등 집중추진으로 올해 소년범 발생 건수는 전년대비 37%감소했으며 여성청소년과는 소년범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

#### 마. 가정폭력범죄 예방과 피해자 등 보호 활동

#### □ 가정폭력 등 피해자를 위한 긴급생활 물품지원으로 심리적 안정 도모 및 피해 재발 방지<sup>72)</sup>(목포)

- 목포경찰서가 올해 초부터 특수시책으로 추진 중인 가정폭력 등 피해자를 위한 긴급생활 물품 지원으로 심리적 안전 도모 및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해 힘쓰고 있음
- 목포경찰서 여성청소년과는 코로나19로 가정 내 구성원 간 갈등과 경제난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정폭력, 노인, 아동학대 피해자들을 가정에서 적극적 분리 조치하거나 재발 우려 가정을 방문하고 있음
  - 목포경찰은 피해자들의 사후 안전을 위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추가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자치단체 및 비영리단체 등과 치안 인프라 확충을 위한 협약 추진으로 피해자 지원을 확대해 가정폭력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

71) 전남일보(2021.09.05.). 목포경찰, 학교 밖 청소년 선도·보호 거리홍보

72) 내외뉴스통신(2021.08.10.). 목포경찰, 가정폭력 재발방지 위한 분리조치 및 피해자 긴급생활물품 지원



## 바. 학교폭력의 근절·예방과 가해 학생 선도 및 피해 학생 보호 활동

### □ 개학기 맞아 학교폭력 근절 및 예방 홍보 캠페인<sup>73)</sup>(고흥)

- 고흥경찰서는 개학기를 맞아 등교시간 어린이보호구역, 고흥동초에서 관계 기관과 함께 학교폭력 근절 홍보 안내문 배부 및 학교폭력예방 및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하였음

## 사. 성폭력 예방과 성폭력 피해자 등 보호 활동

### □ 학교 내 불법 촬영 카메라 점검<sup>74)</sup>(목포)

- 목포경찰서는 관내 학교의 여름방학을 전후로 목포교육지원청, 경비업체와 함께 학교 내 화장실 불법 촬영 카메라 설치 점검을 실시하였음
  - 불법 촬영 카메라 점검과 관련, 정기적으로 경비업체에서 전문가가 장비를 갖춰 점검을 해주어 학교 측의 부담을 덜 수 있음

### □ 지역 내 교내 화장실 불법 카메라 점검<sup>75)</sup>(영암)

- 영암경찰서는 영암 청소년정책자문단과 함께 카메라 불법촬영 예방과 근절을 위해 삼호중 등 8개 학교 화장실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하였음
  - 청소년정책자문단은 중·고등학교 학생들로 구성된 경찰의 청소년 정책 자문기구로서, 영암경찰서 여성청소년계는 각 학교를 방문해 카메라 탐지기 작동 방법을 알려주고 교내 화장실을 함께 점검하였음

### □ 휴가철 불법 촬영 합동점검반 구성 및 점검<sup>76)</sup>(보성)

- 보성경찰서는 휴가철을 맞아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교묘한 방법으로 불

73) 전국매일신문(2021.09.02.), 고흥경찰서, 학교폭력 없는 즐거운 학교 만들기 앞장선다

74) 광주매일신문(2021.07.22.), 목포경찰, 학교 불법 촬영 카메라 점검

75) 전남매일(2021.07.25.), 영암경찰서, 교내 화장실 불법촬영카메라 점검

76) 문화일보(2021.08.06.), 옷차림 가벼운 여름에 '불법 촬영' 기승... 주저말고 신고를

법 촬영 범죄가 늘어남에 따라 보성군청과 불법카메라 합동점검반을 구성 5주간에 걸쳐 관내 주요 관광지 및 전통시장 등 다중이용시설과 공중화장실 등 30개소를 수시 점검하였음

□ 도서지역 노인 성폭력 예방을 위한 ‘찾아가는 아동 상담소’ 운영<sup>77)</sup>(신안)

- 목포경찰서는 신안군 도서지역 치안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노인 성폭력 예방활동을 위한 ‘찾아가는 이동상담소’를 운영하였음
- 목포경찰은 신안군의 도서지역 특성상 교통 불편으로 생긴 교육기회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맞춤형 치안시책으로 찾아가는 이동상담소를 마련하였으며 다중집합 장소를 찾아 노인성범죄 예방 O.X, 위급상황 대처요령, 윈터치 긴급경보장치를 배부하였음

아. 그 밖에 관련 법령에 경찰 사무로 규정된 사회적 약자 보호 및 가정폭력·학교폭력·성폭력 등 예방 업무

□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예방 활동<sup>78)</sup>(나주)

- 나주경찰서는 나주시여성단체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지역 여성·어르신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예방을 위한 민생치안활동을 펼칠 것을 약속하며 업무협력 방안도 논의하였음

□ 교육기관 종사자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통한 보호 및 적극적 신고 당부<sup>79)</sup>(장성)

- 장성경찰서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가 있는 교육기관 종사자들을 관내 고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음
  - 장성경찰서장은 아동들이 가정 외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 학교

77) 내외뉴스통신(2021.09.01.), 목포경찰, 노인성폭력 예방위해‘찾아가는 이동상담소’운영

78) 전남일보(2021.08.23.), 나주경찰,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예방 위한 협력 구축

79) 광남일보(2021.07.08.), 장성경찰, 교육기관 종사자 아동학대 예방 교육 실시

이기 때문에 교육종사자들에게는 보호자의 책임과 신고 의무자로서의 책임이 동시에 부여 된다며 교직원들에게 아동 보호와 적극적 신고 의무를 당부하였음

□ 범죄피해 위기 아동 발굴 및 긴급지원<sup>80)</sup>(강진)

- 강진경찰서는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전남지역본부와 ‘범죄피해 위기아동 긴급지원 후원금 전달식’을 진행하였음
- 강진경찰이 위기 아동을 발굴해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지원 요청하였으며 경찰의 위기 아동 발굴과 맞춤형 지원체계가 이뤄졌음

□ 피해아동 보호지원으로 사각지대 해소<sup>81)</sup>(신안)

- 목포경찰서와 목포·신안교육지원청은 아동학대 등 각종 사건의 피해를 받은 학생을 대상으로 경제적 지원과 1대1 멘토링을 통해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등 피해자 보호에 힘을 기울이고 있음
  - 목포경찰서 여성청소년과는 ‘미취학’아동을 발굴하고 신안군과 협업, 의무교육과정인 중학교에 입학시킴으로 학습권을 보장하고 후에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사후 재발 방지를 위해 학교전담경찰관을 멘토로 지정하였음

□ 나주경찰-동신대 지역 어르신 범죄피해 예방 업무 협약<sup>82)</sup>(나주)

- 나주경찰서는 동신대학교 산학협력단 노인맞춤돌봄 서비스센터와 어르신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공동체 치안 활성화를 통한 나주 지역 어르신범죄 피해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임
  - 협약은 어르신 대상 범죄예방 정보교류 등 협력체계 구축, 생활지원사 대상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 교육, 생화지원사 안전 확보 등

80) 광주매일신문(2021.08.17.). 강진경찰서, 범죄피해 위기아동 긴급지원

81) 중도일보(2021.04.05.). 목포경찰, 피해아동 보호 지원 ‘사각지대 해소’

82) 전남일보(2021.08.29.). 나주경찰-동신대 산학협력단, 어르신범죄 피해 예방 업무 협약

#### □ 학교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및 근절을 위한 공모전 개최<sup>83)</sup>(광양)

- 광양경찰서는 광양시청, 광양시교육지원청, 청소년비행대책협의회와 공동으로 학교폭력·아동학대·청소년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청사진’(청소년들이 사회에 외치는 진짜 이야기)공모전을 진행하였음
  - 공모전에서 수상하는 작품은 추후 범죄예방 홍보 활동 전반에 활용될 예정

#### □ 어르신 범죄피해 예방 및 적극적 대응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약<sup>84)</sup>(여수)

- 여수경찰서는 고령층의 1인 가구화가 급속히 진행되며 범죄로부터 쉽게 노출되는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노인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어르신 범죄피해 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음
- 주요 내용은 어르신 안전과 행복이 보장되는 치안 여건 마련을 목표로 각 유관기관이 협력하여 선제적, 적극적 범죄 예방활동과 현장대응 및 회복적 지원활동으로 이루어져있음
  - 지원방안으로 어르신 대상 범죄 신고 및 정보공유 강화와 어르신 범죄피해 예방 홍보 및 맞춤형 교육 활동 지원, 범죄피해 어르신에 대한 일상생활 복귀 지원 연계, 치매어르신 실종 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한 지역네트워크 구축

#### □ 지역안전순찰 연계, 어르신 치안문제의 선제적 발굴·해결<sup>85)</sup>(함평)

- 함평경찰서는 어르신 범죄 피해예방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위기어르신’발굴 보호를 위한 찾아가는 지역 안전순찰을 실시하였음
- 자율방범대와 협력해 태양광 LED 벽부등 30개를 안전에 취약한 어두운 골목길 및 버스정류장에 설치, 파출소 탄력순찰 노선 반영 등 지역안전순찰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

83) 아시아경제(2021.09.01.). 광양경찰, 학교폭력·아동학대 예방 공모전 개최

84) 프레시안(2021.09.02.). 여수경찰 “어르신 범죄피해 예방 적극 대응 나섰다”

85) 데일리한국(2021.09.03.). 전남 함평경찰, ‘위기 어르신’범죄예방 환경조성에 앞장

□ 찾아가는 장애인 성폭력 예방 교육 실시<sup>86)</sup>(광양)

- 광양경찰서는 장애인 성폭력 예방을 위해 광양시 장애인 복지관 이용 여성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성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였음
- 성폭력 피해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장애인에 대한 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성폭력 피해 예방요령과 발생 시 대응방법’등을 다양한 사례로 설명하며 신고절차 등을 안내하였음

#### 4. 소통 및 참여

□ 지자체 등과의 연계·협력 강화

- (생활안전) 어르신 범죄예방 활동은 아파트 관리사무소, 마을 이장님 방문을 통해 홍보 활동을 전개함
- (교통안전) 각 면사무소와 연계를 통한 교통안전 활동이 필요함
- (사회적 약자보호) 독거노인, 생활보호 대상자, 장애인 등은 지자체에서 현황 파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동사무소와 연계 및 협력이 필요함
- 도 경찰서와 지자체 간 정기적인 미팅을 위한 제도적인 공간 및 소통 기회가 마련되어야 함
  - 지자체 시책과 자치경찰 시책의 조율이 필요함
  - 여청, 교통과 달리 생활안전 분야는 시청에 단일한 소통창구가 없음

□ 지역주민과의 협력적 치안파트너십 형성

- 자치경찰 시책 공모 제안 등은 지역 주민으로부터 자치경찰 실행부서로 의견이 수렴되는 bottom-up 과정이어야 함
  - 제안서를 위에서 아래로 내려보내는 방식이 아닌 지역주민의 자율성에

86) NSP통신(2021.09.03.). 광양경찰, ‘찾아가는 장애인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기반한 자치경찰시책이 제안되어 자치경찰 또는 시청 부서에서 실행될 수 있어야 함

- 동 주민센터를 통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보조, 아동안전지킴이·녹색어머니 회의의 보조를 통해 노인, 1인가구, 아동·청소년 보호활동을 전개함
- 주민자치위원회 또는 주민자치회 등과의 간담회 등을 정례화하여 마을에서 발생하는 안전위협 요소에 대해 공동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함
  - 파출소장이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여함으로써 동에서 시로 주민들의 의견이 지역경찰에 잘 전달 될 수 있는 소통 창구가 되어야 함

#### □ 지역 봉사활동 점수 부여 및 표창 수여

- 지역사회 자치경찰 활동에 기여한 청소년에게 봉사활동 점수를 가점하거나 표창을 수여하여 주민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자치경찰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함
- 자율방범대 및 생활안전협의회 활동은 자발성을 기반으로 하는 봉사활동이므로 소속감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

#### □ 자치경찰 인사 및 평가 시스템 개선

- 지역경찰과 주민 간 유대감을 형성하고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경찰의 순환보직 시스템이 개선되어야 함
-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자치경찰이 되기 위해서는 지역경찰 인력의 충분한 충원이 이루어져야 함
  - 한정된 인력에서 교통사고 예방 및 처리, 절도, 선박 관련 사고 등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동시에 주민들을 위한 치안 예방 활동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 자치경찰시책의 성과는 중·장기적으로 살펴 보아야 하나, 현재는 경찰서 성과를 단기적으로 측정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 개선이 요구됨

〈표 5-9〉 생활안전 분야 시책 리스트

시책	대상지역	대상그룹	연계형
위험방지 및 범죄예방 시설물 설치 및 환경 개선		여성·사회적 약자	
관내 일체형 방범시설 설치	범죄 다발지역		
안전한 섬 만들기 위한 범죄예방 진단 실시	도서 지역 학교, 보건진료소, 우체국		
유인도서 범죄예방진단팀과 현장 치안점검	도서지역 공·폐가		주민 참여
보이스피싱 범죄예방 활동			주민참여(금융기관 종사자)
도서지역 범죄예방 교육 실시	도서지역		주민 간담회
범죄예방 취약장소 집중 순찰 신청 기간 운영	범죄 취약 장소		주민 참여
부착식 경광등을 이용한 범죄예방 및 순찰 강화	여성안심 귀갓길, 농산물 보관창소 등 우범지역		
보이스피싱 및 금융범죄 예방을 위한 ‘모닝나인’ 활동 실시			주민참여(금융기관 종사자)
주민공감 치안협력 단체 활동사항 점검 및 간담회			주민참여(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자율방범연합회)
지역안전순찰 시행 및 지역공동체 치안협의체 운영			주민참여(지역공동체 치안협의체) 군청(통합관제실)
경찰관 미배치 도서 30개소 대상 도서 지킴이 위촉			주민참여(이장단, 어촌계장)
농산물 절도예방 자율방범대 합동순찰	자연부락 및 아파트 밀집지역		주민참여(자율방범대)
우리동네 단력순찰	골목길, 원룸촌 일대		주민참여 (여성자율방범대)
방역수칙 위반 업소 불법 영업 단속	방역수칙 위반업소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분석 및 확산방지 업무 지원			관계기관, 보건당국
휴가철 안전을 위한 해수욕장 방역 점검	해수욕장		

〈표 5-10〉 교통안전 분야 시책 리스트

시책	대상지역	대상그룹	연계형
휴가철 음주운전 집중 단속 실시	유원지 및 유흥가 주변 자동차전용도로 연결도로		
활주로형 횡단보도 설치를 통한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 활동	어린이보호구역, 보행자가 많은 횡단보도, 교통사고가 잦은 곳		군청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선제적 보완공사 실시	안전사고 위험지역(상습적으로 토사가 유출된 지방도로)		도로관리사업소
대형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진단 및 현장시설 점검	사망사고 발생 및 상습 교통법규 위반 장소 주요 교차로	고령운전자 및 보행자	대형차량 운송업체
교통단속기 확대 설치 운영	상습과속구간 및 교통사고 다발지역	고령운전자	
사회적 교통약자 보호 교육		어르신	대한노인회지회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 교통안전 교육		어린이	교육지원청,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
안전속도 5030 정책 홍보 활동	주택·상가지역		버스 회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전동 킥보드 이용 수칙 홍보 활동	학교		교육지원청, 킥보드 업체 및 이용자
대형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화물업체 교통안전 홍보 활동	화물차량 업체		화물차량 업체, 도로관리청
대형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위험구간 점검 및 시설개선	급경사·급커브 등 위험구간		지자체 도로관리청
어린이 통학버스 일제점검			교통안전공단, 지자체
도로 방제 작업	학교 앞 교차로		소방서
화물 건설기계 통행 제한	사고다발지역 도로		
농촌 인력시장 교통안전을 위한 활동 지원	인력시장 주변	인력시장 노동자	군청



〈표 5-11〉 사회적 약자 보호 분야 시책 리스트

시책	대상지역	대상그룹	연계형
위기 어르신 보호 발굴		노인	유관기관(지자체)
아동학대 예방 활동		여성·사회적 약자	유관기관(시청, 교육지원청, SNCC)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대상 확대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유관기관 (노인복지시설)
아동학대 예방 지자체 합동 점검		아동학대 재발 우려 가정 및 공부방 그룹 홈	유관기관(아동보호전 문기관, 장흥군, 장흥교육청)
온 동네 한바퀴 순찰 예방을 통한 치매노인 실종예방		어르신	주민참여
아동실종 방지 예방 활동		아동·청소년	유관기관(어린이집)
어르신 범죄 피해 예방 안전한 귀갓길 조성 사업	마을회관 및 귀갓길	어르신	
아동지킴이집 지정 및 점검		아동	주민참여(문구점, 편의점)
청소년 선도 및 보호 활동	다중이용시설 및 청소년 유해업소	청소년	유관기관
학교폭력 예방 청소년 선도 활동 전개	청소년 운집구역(피시방, 오락실, 공원), 담배·주류 판매업소	청소년	유관기관(교육지원청, 군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 선도 및 보호를 위한 거리 홍보	청소년 운집구역(피시방, 오락실, 공원)	청소년	유관기관(교육지원청)
긴급생활물품지원		가정폭력 피해자(노인, 아동학대 등)	유관기관(자치단체, 비영리단체)
학교폭력 근절 및 예방 홍보 캠페인	어린이보호구역		관계기관
학교 내 불법 촬영 카메라 점검	학교		교육지원청, 경비업체
지역 내 교내 화장실 불법 카메라 점검	학교화장실		청소년 정책자문단

시책	대상지역	대상그룹	연계형
휴가철 불법 촬영 합동점검반 구성 및 점검	관광지 및 전통시장 등 다중이용시설· 공중화장실		군청
찾아가는 이동 상담소 운영	도시지역 다중집합장소	어르신	유관기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예방 활동		여성·어르신 등 사회적 약자	여성단체협의회
교육기관 종사자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통한 보호 및 적극 신고 당부	학교	아동	교육기관
범죄피해 위기 아동 발굴 및 긴급 지원		위기 아동	어린이재단
피해 아동보호지원으로 사각지대 해소		아동	시·군청, 교육지원청
경찰-대학 지역 어르신 범죄피해 예방업무 협약		어르신	대학교 산학협력단 노인맞춤돌봄 서비스센터
학교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및 근절을 위한 공모전 개최		아동, 청소년	시청, 교육지원청, 청소년비행대책협의회
어르신 범죄 피해 예방 및 적극 대응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약		어르신, 1인 가구	유관기관 (대한노인회)
지역안전순찰 연계, 어르신 치안문제 선제적 발굴 해결	골목길 및 버스정류장	어르신	자율방범대
찾아가는 장애인 성폭력 예방 교육 실시	복지관	장애인, 여성	장애인 복지관

## 제4절 지역 맞춤형 주민 체감 시책

### 1. 추진전략

#### □ 지역 맞춤형 단계별 대응 전략 마련

- 전남은 인구감소지역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곳으로 노인인구, 공·폐가 비율 등 지역 치안 여건에 맞는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지역맞춤형 단계별 대응 전략 마련이 필요함
  - 전남의 인구감소지역은 경북과 함께 16곳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음<sup>87)</sup>
  - 초고령화 사회인 전남 특성상 어르신 범죄피해 예방은 지역 치안 안정화에 필수 불가결한 요소임
  - 범죄 대응 및 문제해결 능력이 부족한 어르신에 대한 맞춤형 시책이 필요함
  - 지역 안전 순찰 활용 치안 문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함

#### □ 국가안전대진단과 연계한 범죄취약지역 및 시설개선 추진

- 범죄예방 및 대응력 확보를 위해 국가안전대진단과 연계하여 안전한 지역사회 기반을 구축함
  - 유관기관(지자체, 시설관리 주체, 소방·한전 등)과의 협업을 통해 공·폐가 지역에 대한 범죄취약점 일제 점검 및 진단 후 시설개선 추진
- 지속적인 현황 점검 및 취약요소 집중 순찰을 통해 범죄·무질서 예방, 범죄 발생 요소 제거 등 지역 불안 요인 개선

#### □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

- 지역 내 고용된 외국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침해·불법고용·임금착취 등 피해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사회안전망 구축 필요성이 나타남

87) 전남일보(2021). 정부, 전남 지자체 인구소멸 막는다.

- 대표적으로 2014년 2월 지적장애인을 속여 염전 등에서 강제노역·임금 착취·폭행 등 인권을 유린한 사건이 주목됨
- 특히 도서 지역 내 인권침해와 관련된 전면 조사를 수행한 지 오랜 시간이 경과하였으며, 여전히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불법 고용과 인권침해 등 사회적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이에 따라 피해사례에 대응하고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 □ 지자체·유관기관과 협업체계 강화

- 경찰청과 지자체와의 연계를 통한 선제적 조치를 시행함
  - 경찰청 수사부서와의 연계를 통한 지문 사전등록률 향상 제고
  - 실종 고위험 치매 노인 방문 점검
  - 실종경보 문자 활용 추진
  - 노인학대 집중 신고 기간 운영
  - 범죄피해 예방법 등 홍보 교육 추진
- 지역공동체 치안 협의체 구성을 통해 어르신 보호에 공동으로 대응함
  - 노인 체감안전도 향상을 위한 정책 지속 발굴
  - 치안 간담회·지역사회 회의 참석 등 대민 소통 활성화
  - 스마트 실종 예방 장비 보급 추진
  - 실종자 조기 발견 지원조례 개정
  - 노인 관련 시설 방문·홍보
  - 학대 우려 노인 합동 모니터링 추진

#### □ 맞춤형 찾아가는 치안 서비스 제공

- 도서 지역의 범죄는 지역의 폐쇄성과 범죄예방 관련 교육 부족에 기인함
  -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취약하고 범죄 후 즉각적인 서비스가 불충분한 상태로 진단됨

- 도서 주민들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피해자 맞춤형 찾아가는 서비스로 전환하고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긴급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함

## 2. 세부 시책

### 1) 도서 지역

#### 가. 사회적 약자 보호 시스템 구축

##### □ 합동 기동순찰팀 구성을 통한 스팟(SPOT) 활동 전개

- (배경) 불시 ‘합동 기동순찰팀’ 운영으로 도서 지역 치안 사각지대 해소 및 가시적 경찰 활동을 통한 지역사회 준법의식 확산을 도모함
- (임무) 염전·양식장 소재 비연륙 도서 5개소를 대상으로 염전·양식장 내 장애인·외국인 등 사회적 약자 대상 인권 침해 점검, 여성 1인 거주 근무지·학교 통합관사 취약요소 점검 등 범죄예방 활동, 헬기 순회 등 위력 순찰을 통한 가시적 효과 극대화

##### □ 인권침해 취약사업장 경·관 합동점검

- (배경) 도서지역 노동집약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기관별 정보 공유 체계 구축을 통해 사회적 약자 보호를 내실화
- (임무) 경·관 상시 소통창구 마련, 염전·양식장 등 도서 지역 인권침해 취약사업장 종사자에 대한 현황 공유 및 합동 점검으로 인권침해 조기 발견 및 예방, 지자체·NGO 등과 핫라인 구축 후 실종자 발견을 위한 합동 수색

##### □ 인권 침해 피해자 시설 입소 및 후견인 지정 협조 등 사례관리

- (배경) 장애인을 대상으로 발생한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사례를 사전적으로 진단하고 협력에 기반한 사후 관리·모니터링 필요성 제고
- (임무) 인권침해 피해자 시설입소·후견인 지정 협조 및 사례관리, 치료(약물, 심리) 조치 구축, 간담회 개최, 발달장애인지원센터과의 유기적 협업

#### □ 찾아가는 상담소 운영

- (배경) 도서 지역의 폐쇄적인 환경 요인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면서 효과적인 주민 권익 보호의 필요성이 나타남
- (임무) 유관기관(1366·성·가족 상담소) 협업, 범죄 취약 도서 방문상담 활동 및 범죄예방 홍보 수행, 지역 인프라(마을회관, 보건지소 등) 활용

#### □ 성폭력 피해자 의료 지원 서비스 제공

- (배경) 성폭력 피해자가 필요로 하는 의료 지원서비스 제공
  - 공중보건의가 배치된 전남 도서권 보건지소 23개소에서 제공 (신안 9개, 여수 5개, 영광 1개, 완도 7개, 진도 1개)
- (임무) 성폭력 피해 발생시 심리·의료 상담 제공, 응급키트(생식기·항문·혈액채취 등) 시행 등 의료 지원 및 법적 증거 확보 방안 마련

#### □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관리 활동 강화

- (배경) 도서 지역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관리를 통해 성폭력 재발 방지
  - 현 전라남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총 3,119명) 중 도서지역 신상정보등록 대상자는 목포 7명, 여수 15명, 보성 1명, 완도 22명, 진도 3명에 해당함 (총 48명, 1.5%)
- (임무) 점검 대상자 직접 대면을 통한 정확한 진위 여부 파악, 불성실 신고자·소재불명자·현행범 동종전력 확인 등 엄정 대응 수행

### 나. 도서 치안 인프라 확충

#### □交通安全시설 개선을 통한 도서 주민 안전 확보

- 도서 지역의 교통위험 사고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하여 위험 구간별 적합한 안전시설을 보강하고 사고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교통안전을 확보함

- 도서 지역 경찰관서 기준 2019년(4건) 대비 2020년(8건) 교통사고 사망자가 크게 증가함
- 섬 지역 사고 위험 구간별(선착장·커브길 등) 도로 개선 및 시설 보강, 교통사망사고 위험성이 높은 도로 구조와 환경 여건을 분석하여 선제적 대응 방안을 마련함
- 교통약자 맞춤형 보호 시설물을 구축함

#### □ 도서 지킴이 재정비

- 경찰력이 미치지 못하는 도서 지역의 도서 지킴이 주민 활동을 진단하고 개선하도록 함
  - 도서 지킴이 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운영지침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요구를 기반으로 실제 도서 지킴이 현황 점검 및 재정비가 2021년 8월부터 약 35일간 진행되었음
  - 구체적으로 도서 지킴이 미배치 도서에 신규 지정 등으로 수행됨
  - 도서 지킴이 설치 지역이 136개소에서 143개소로 증가하고 인원이 195명에서 198명으로 증가하였음

〈표 5-12〉 도서 지킴이 재정비 결과(21년 하반기 기준)

총 계		목포	여수	고흥	해남	무안	보성	영광	완도	진도
개소	136	25	23						30	
	→	→	→	8	5	1	2	7	→	35
	143	24	25						36	
인원	195	41	23						43	
	→	→	→	13	10	3	2	12	→	48
	198	37	25						48	

- 도서 지킴이로 활동하고 있는 주민들이 갖는 소속감과 자긍심을 고취하여야 함
  - 도서 지킴이는 경찰 인력이 배치되지 않은 유인도에서 주요 사건을 신고하는 활동으로 지역주민들의 봉사로 이루어짐

- 도서 지킴이로 활동하고 있는 주민들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고취하도록 함

#### □ 도서 치안 신고망 데이터베이스 구축

- 도서 치안 신고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분기별로 업데이트하도록 함
  - 유인도서 주민 실거주 여부, 도서 지킴이 현황, 선착장 CCTV 현황 및 연륙, 연도 변동사항 등을 정기적으로 확인함
  - 도서지킴이 지원사업 마련 및 신고망 보완, 경찰과의 유기적 협력관계 구축, 현장간담회 마련 및 의견청취, 우수 활동가에 대한 표창 수여 및 인센티브제 마련, 신고자 보상금 지급, 주기적인 도서 지킴이 활동 재정비

#### □ 도서 내 범죄예방을 위한 CPTED 구축

- 도서 지역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범죄의 예방을 위해 안전한 치안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역맞춤형 치안 시설을 확충하고 치안 안전망을 확보함
  - 학교 관사·보건진료소 등 여성 1인 거주지역의 CPTED 정상 작동 여부 점검 및 무인경비시스템 설치
  - 도서 선착장 CCTV 설치를 통한 외부인 범죄예방효과 제고
  - 경찰서별 중점 치안 시책(위기 어르신 발굴·도서안전 치안정책 등) 설명회 개최 및 CPTED 구축 토대 마련
  - 여성 1인 거주지역 및 도서 선착장 등 범죄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의 치안 인프라(무인경비시스템, CCTV 등) 구축, 경찰서별 지역맞춤형 치안 시책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범죄예방요소 확인 및 예방진단을 실시함
- 범죄 예방 활동 및 시설 구축 과정에서 기초단체·의회 및 현장 경찰 등 관련 기관 핫라인 구축을 통해 치안 안전망을 확보함



〈표 5-13〉 도서 관사 보건진료소 CPTED 현황

구분	개소	CCTV	무인경비	방범창	잠금장치	
					자동잠금	이중잠금
학교관사	69	69	48	62	705	667
보건진료소	72	72	28	69	56	69

## 2) 인구소멸 지역

### □ 공·폐가 합동 범죄예방진단 실시

- 경찰서 생안과장 주관으로 자율방범대 등 치안 협력단체와 협조하여 공·폐가 지역 내 취약지점 정보 공유 및 합동 순찰을 실시함
  - 사회복무요원을 적극 활용하고 필요 시 지역 경찰 참여
- 지자체·소방·시설주·시공사 등과 함께 범죄예방진단을 실시하여 문제점 및 시설개선 필요성을 적극 설명하도록 함
  - 국가안전대진단과 연계하여 실시하는 점을 부각하고 현장 상황에 밝은 마을 이장단 등을 활용하여 적극적인 참여 유도

### □ 여성 안심 구역 지정 및 관리 카드 정비

- 진단 결과 별도 관리가 필요한 공·폐가 지역은 범죄예방협의체 협의를 거쳐 여성안심구역으로 지정·관리함
  - 경찰서별 지자체, 시민단체, 전문가, 주민 등이 참여하여 치안 문제 논의 및 개선
  - 경찰서별 치안 여건 분석과 범죄예방진단 등을 바탕으로 여성·1인가구, 밀집 지역, 공·폐가 지역 등 여성 범죄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선정
- 공·폐가 관리에 필요한 세부항목을 최신 데이터로 갱신하고 지속적으로 범죄통계를 수집·분석하여 순찰 우선순위 선정에 활용함

#### □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한 범죄 취약환경 및 시설개선

- 재개발지역 등 공·폐가 밀집구역은 지자체·시공사에게 방범시설(CCTV, 방범등, 펜스) 보강을 요청함
- 개별 공·폐가의 경우는 지자체·건물주에게 출입구 봉쇄, 출입금지 경고문 부착, 공·폐가 철거 등 시설개선을 요청함
  - 시장·군수 등은 빈집이 안전사고, 범죄발생 우려가 높은 경우에는 소유자에게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특례법 제11조)
- 지자체와 공·폐가 자료를 공유하고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관련 정비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권유함
  - 범죄예방협의체·지역치안협의회 등을 통해 구체적인 개선방안 논의

#### □ 탄력 순찰 등 현장 대응 강화

- 공·폐가 취약지역을 순찰선으로 지정하여 탄력 순찰을 실시하고 가시적인 순찰을 통해 범죄 발생을 사전에 차단함
  - (주간시간대) 공·폐가 밀집지역 순찰 및 주민 요청사항 청취 후 지역경찰 관서 시책에 반영하여 주민 불안 감소 및 체감안전도 제고
  - (심야·새벽시간대) 경광등 점등 후 가시적 순찰을 실시하고 거동 수상자·방치 차량 위주로 검문 검색 강화
- 범죄 및 청소년 비행 등 확인 시, 형사·여청·112 등과 합동으로 즉시 대응하여 주민 불안을 조기에 해소함

#### □ 유관기관과 협력 확대를 통한 도서 치안 문제발굴 및 해결

- 지역 특색을 고려한 치안 인프라 구축을 목적으로 파출소·해양경찰·지자체 등 유관기관 협력이 필수적임
  - 노인 안전(목포), 유인도서 취약지 발굴(해남), 도서지킴이 활동 지원(완도) 등 지역의 환경과 실정을 고려한 도서 경찰서별 치안 시책을 참조 가능함

- 지역공동체 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역맞춤형 지원대책을 추진함
- 효과적인 지역 치안 환경 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치안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함
  - 경찰·지자체·해경·보건소 등 정보 공유, 유기적 협력에 기반한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 등 주민 인권과 안전을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유관 기관과 협력을 확대함
  - 범죄위험도 예측 분석시스템(Pre-CAS) 시연회, 유관기관 협력에 기반한 범죄예방시설 강화
- 특히 인구소멸지역과 도서지역은 지역 안전 순찰과 연계한 치안 문제발굴 및 해결이 필요함
  - 도서권 파출소(17개) 112신고는 3,407건, 5대 범죄는 138건 등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112신고·범죄에 대한 사전적인 치안환경 구축 및 사후 신속한 대응이 요구
  - 범죄 취약지 환경 개선 및 CPTED 구축 예산 확보 협력 등 기관 방문·공문 협조 등 협력관계 공고화 추진, 사회적 약자 대상 강제노역·성범죄 등 인권유린 범죄에 대한 정보 공유 등 협조체계 구축, 도서 긴급출동 시 요구되는 해양경찰·지자체 선박 운용 협력 추진

〈그림 5-1〉 지역맞춤형 주민체감 시책

도시지역	인구 소멸 지역
추진 전략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지역맞춤형 단계별 대응 전략 마련</li> <li>2. 국가안전대진단과 연계한 범죄취약지역 및 시설개선 추진</li> <li>3.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li> <li>4. 지자체 · 유관기관과 협업체계 강화</li> <li>5. 맞춤형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li> </ol>
	<div data-bbox="361 737 696 97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합동 기동순찰팀 구성을 통한 스팟(SPOT) 활동 전개</li> <li>• 인권 침해 취약사업장 경·관 합동점검</li> <li>• 인권 침해 피해자 시설 입소 및 후견인 지정 협조 등 사례관리</li> <li>• 찾아가는 상담소 운영</li> <li>• 성폭력 피해자 의료 지원 서비스 제공</li> <li>• 산상정보 등록대상자 관리 활동 강화</li> </ul> </div> <div data-bbox="361 997 696 113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통안전시설 개선</li> <li>• 도서 자립이 재정비</li> <li>• 도서 치안신고망 데이터베이스 구축</li> <li>• 도서 내 범죄 예방을 위한 CPTED 구축</li> </ul> </div> <div data-bbox="742 737 1076 113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폐가 합동 범죄예방진단 실시</li> <li>• 여성안심구역 지정 및 관리 카드 정비</li> <li>•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한 범죄 취약환경 및 시설개선</li> <li>• 탄력 순찰 등 현장 대응 강화</li> <li>• 유관기관과 협력 확대를 통한 치안 문제발굴 및 해결</li> </ul> </div>



## 제6장

# 결론

제1절 연구 요약

제2절 정책 제언



## 제1절

## 연구 요약

## □ 자치경찰 시책의 우선순위

- 자치경찰은 지역사회 근린 경찰 활동에 최우선 기능을 부여하여 자치경찰 활동의 가시화를 통해 사건·사고 및 범죄예방활동을 통한 주민 생활의 안정화에 가장 큰 중점을 두고 활동할 필요가 있음
  - ‘전남 자치경찰에 바란다’ 도민 설문조사에서도 향후 3년간 도민 안전 향상을 위해 가장 많은 투자가 필요한 자치경찰 분야로 응답자의 절반이 생활안전 및 범죄예방활동을 선택함
  - 분야별 중요도는 생활안전 및 범죄예방 활동 > 사회적 약자 보호 활동 > 교통안전 활동 순임

## □ 효과적인 범죄예방 시책

- 효과적인 범죄예방 활동은 범죄예방시설 설치·운영 및 경찰관의 순찰 강화 활동임
- 범죄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은 상시 지역순찰을 강화하여야 함
  - 생활안전을 가장 위협하는 장소는 유흥번화가와 주거지역임
  - 도시주변지역과 농·산촌 지역은 주거지역이 가장 생활안전을 위협하는 장소이며 어촌·도서지역은 유흥번화가와 함께 외국인 밀집지역도 생활안전을 위협하는 장소로 나타났음
- 지역순찰의 방법은 도보 순찰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자전거 순찰, 스쿠터 순찰, 차량 순찰 등의 우선순위로 순찰팀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 자치경찰은 주민이 요구하는 안전 서비스가 무엇인지 항상 귀를 기울여



듣고, 지속적으로 이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운영체제를 갖추어야 함

#### □ 효과적인 교통안전 시책

- 교통안전을 가장 위협하는 요소는 교통법규 위반과 이륜차 법규 위반임
  - 교통법규 위반을 위협하는 요소는 음주운전과 불법주정차로 나타났으며 어촌·도서 지역은 음주운전과 과속신호 위반으로 나타났음
  - 도시 중심지역 도민들은 이륜차 법규 위반을 가장 위협하는 요소로 꼽았음
  - 어촌·도서 지역 도민들은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안전시설 부족을 위협 요소로 꼽았음
- 효과적인 교통안전 시책은 법규위반단속과 교통안전 시설개선이 제시되었음
  - 효과적인 교통약자 보호 활동은 어린이 등하굣길, 노인시설 주변 보행로 등에 대한 안전 활동 강화와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내 교통시설 개선 활동으로 나타났음
  - 특히, 학교 주변 불법주정차 및 보행자 무단횡단 단속, 단속 카메라 설치, 학교 앞 교통 캠페인 등 교통지도의 필요성이 제시됨
- 교통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위반, 이륜차 법규위반에 대한 단속 강화와 안전한 인도 조성 및 확장, 사고다발지역의 도로정비, 교통안전구간 확보, 인프라 확보(교통안전 표시물 추가 설치 및 홍보, 안전시설 등) 등이 요청됨

#### □ 효과적인 사회적 약자 보호 시책

- 사회적 약자 보호 시책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자치경찰 지원활동임
- 지자체와의 연계를 통해 피해자들의 법률 및 상담 지원 등이 다양하게 진행되어야 함
  -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서와 시·군청과의 협조체

- 계 구축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 학교폭력과 관련해서는 시·군청의 아동청소년과, 교육지원청과 함께 캠페인 활동을 펼쳐야 함
  - 어르신 치매 및 실종과 관련해서는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가정폭력과 관련해서는 여성 상담센터 및 쉼터와 연계가 이루어져야 함
- 가장 시급하게 근절해야 할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응 등 청소년 범죄임
- 도시 지역은 청소년 범죄> 성범죄> 가정폭력 순임
  - 농·산촌 지역은 청소년 범죄> 성범죄> 아동학대 순임
- 지역 교육지원청 및 학교와의 협업을 통한 학교 주변 안전시설 확충 및 순찰 강화가 요구됨

#### □ 효과적인 소통 및 참여 시책

- 자치경찰과 지자체의 정기적인 미팅을 위한 제도적 공간과 기회가 마련되어야 함
- 독거노인, 생활보호 대상자, 장애인 등은 지자체에서 현황 파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자체와 소통 및 협력이 필요함
  - 교통안전 활동의 경우 각 면사무소와의 연계가 필요함
  - 어르신 범죄 예방 활동은 아파트 관리사무소, 이장님 마을 방문을 통해 홍보 활동을 전개할 수 있음
- 자치경찰 정책 제안은 지역 주민으로부터 관의 실행부서로 수렴되는 bottom-up 과정이 되어야 함
- 관이 정책의 설계를 하되 시책 개발 과정은 지역 주민의 자발성 및 협력에 바탕을 두어야 함
- 주민자치회를 활용하여 자치경찰 시책의 홍보 및 공유가 이루어지고 주민의 의견이 공식적으로 수렴될 수 있어야 함

- 파출소장이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여함으로써 동에서 시로 주민들의 의견이 지역 경찰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음
- 자치경찰제가 성공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지역 경찰의 인력 및 인사 운영 제도의 개선이 필요함
  - 지역 경찰과 주민 간 유대감을 형성하고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는 경찰의 순환보직 제도는 개선되어야 함
  - 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자치경찰이 되기 위해서는 지역 경찰 인력의 충원이 충분하게 이루어져야 함
  - 한정된 인력에서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업무 이외에 주민들을 위한 예방 활동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 주민의 참여는 자율성을 기반으로 하는 봉사활동이기 때문에 이들이 자긍심과 보람을 가질 수 있는 유인제도가 설계되어야 함
  - 자율방범대, 생활안전협의체 등 주민참여조직에 대한 지원을 통해 치안 활동을 촉진시키는 동시에 주민참여조직의 책임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주민자치조직 활동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가 필요함
  - 감사패, 상장, 유니폼, 우수사례 발굴 및 포상 등 참여주민들의 소속감을 키워 지속가능한 참여를 보장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음
  - 자치경찰 정책 공모사업, 주민자치조직 지원조례 제정, 자치경찰위원회와 주민자치조직 간 MOU 체결, 정기적인 간담회 등 제도적 지원 마련도 필요함

## 제2절 정책 제언

### □ 자치경찰 시책 방향

-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자치경찰정책에 대한 큰 방향 또는 지침을 안내하되, 세부 시책과 관련해서는 파출소·지구대별 주요 활동의 우선순위를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함
- 도시 중심 지역 이외의 도시 주변 및 농·산·어촌 지역에 대해서는 국가경찰권이 닿지 않는 소외지역 또는 외곽지역에 대한 자치경찰 활동을 전개함
  - 특히 도서지역과 인구소멸지역은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 맞춤형 시책이 필요함
- 향후에는 본 연구에서 정리된 자치경찰 시책 이외에 경찰청에서 기획되었으나 일선 경찰기관에서 의도대로 시행되지 않은 시책들에 대한 분석도 필요함
  - 자치경찰제 시행 이전에도 경찰청에서 다수 정책들이 수립되어 왔기 때문에 기존 정책에 대한 분석도 향후 자치경찰 시책 개발에 도움이 될 것임

### □ 자치경찰 시책 추진전략

- 지역맞춤형 단계별 대응 전략을 통한 범죄예방 및 안전한 치안환경 조성이 필요함
  - 인구감소 지역에 대한 치안 서비스 자원 재정비 필요
  - 인구수를 고려한 경찰관서 통폐합 및 인력 개편 실시
  - 인구변화 환경에 대응한 경찰의 주민접촉방안 마련
- 국가안전대진단과 연계한 범죄취약지역 및 시설개선 추진이 필요함
  - 도서 지역의 폐쇄성을 반영한 맞춤형 치안 시책 필요
  - 치안 환경 인프라(CCTV, 보안 등) 및 순찰 활동 강화
-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이 필요함

- 사회적 약자 인권침해 점검팀 운영 및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체계구축
- 범죄예방을 위한 지역의 물리적 안전 환경(방범시설 등) 조성
- 고령층 교통사고 피해 방지를 위한 예방 대책(노인보호구역 확대 등) 마련
- 지자체·유관기관과 협업체계 강화가 필요함
  -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한 범죄 취약환경 및 시설개선
  - 유관기관과 협력확대를 통한 문제발굴 및 해결
- 맞춤형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이 필요함
  - 빈번히 발생하는 암수 범죄 및 인권침해 사전 발굴 및 예방대책 마련
  - 1인 여성 가구를 대상으로 발생하는 범죄피해(스토킹, 주거침입, 성범죄 등) 예방 방안 확보

#### □ 도서지역 자치경찰 시책

- 합동 기동순찰팀 구성을 통한 스팟(SPOT) 활동 전개
- 인권침해 취약사업장 경·관 합동 점검
- 인권침해 피해 장애인 보호대책 강화
- 찾아가는 상담소 운영
- 성폭력 피해자 의료지원 시스템 구축
-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관리 활동 강화
- 도서지킴이 재정비 및 도서 치안 신고망 데이터 베이스 구축
- 교통안전시설 개선
- 도서 내 범죄예방을 위한 CPTED 구축

#### □ 인구소멸 지역 자치경찰 시책

- 지자체·소방·시설주·시공사·마을 이장단 등 지역사회 협력에 기반한 공·폐가 합동 범죄예방진단 실시

- 여성안심구역 지정 및 관리카드 정비
-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한 범죄 취약환경 및 시설개선사업 전개
- 탄력순찰 등 현장 대응 강화
- 유관기관과 협력 확대를 통한 치안 문제발굴 및 해결

#### □ 효과적인 지역 방법 순찰

- 자치경찰의 주요한 순찰업무는 기초질서 단속, 사회적 약자 보호 활동을 위한 주민 친화형 방법 순찰, 주·정차 교통위반 단속 등 지역 교통정리 등임
- 자치경찰의 시책인 효과적인 지역 방법순찰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방법순찰팀의 기본 임무는 주민 안전과 관련한 요구사항에 대한 대응임
  - 읍면동 구역 내 주민자치위원회 모임에 참여함으로써 주민들과의 상시적인 대화 채널을 유지하도록 함
  - 읍·면·동 구역의 안전 문제 해결을 위해 배치된 자치경찰사무 담당 인력을 조정하고 지역사회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향에서 자치경찰 보조인력의 활용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예를 들면, 지역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 또는 일정한 인턴제의 활용과 같은 방식으로 운영하여 자치경찰과 함께 지역 내 방법 활동 및 기타 자치경찰 관련 업무를 지원하도록 함

#### □ 자치경찰 활동 지역

- 자치경찰 사무의 비중 및 중요도가 높은 곳이 자치경찰의 중점 활동 지역이 될 것임
- 도시중심지역, 도시주변지역, 농촌 및 임야지역이 상존하는 곳은 그 지역 실정에 맞는 자치경찰 중점활동 장소를 중심으로 자치경찰 활동을 유지해야 함

〈표 6-1〉 자치경찰의 주요 활동 지역(예시)

	농·산·어촌	도·농 복합
생활안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 및 교육시설</li> <li>- 자연부락 및 공동주택단지</li> <li>- 공·폐가</li> <li>- 재래시장, 장터, 농산물 보관장소</li> <li>- 역, 터미널</li> <li>- 관광지, 유원지 및 유흥시설</li> <li>- 체육, 문화, 공원시설</li> <li>- 복지시설</li> <li>- 음면소재지가 아닌 기타지역</li> </ul>	<p>좌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중이용시설 및 청소년 유흥업소 밀집지</li> <li>- 청소년 운집구역(피시방, 오락실 등)</li> <li>- 동 소재지가 아닌 기타 지역</li> </ul>
교통안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린이 보호구역</li> <li>- 유원지 및 유흥가 주변</li> <li>- 자동차 전용 연결도로</li> <li>- 보행자가 많은 횡단보도</li> <li>- 주요 (학교 앞) 교차로 등 상습 교통법규 위반 도로</li> <li>- 상습 과속구간 및 교통사고 다발 지역</li> <li>- 인력시장</li> <li>- 급경사 커브 등 지역 주변도로</li> <li>- 주정차 금지도로</li> <li>- 주택가 이면도로</li> <li>- 소방통로 장애도로</li> <li>- 시·군 단위에서 특별한 목적으로 교통 통제하는 도로</li> <li>- 민원 잦은 도로</li> </ul>	<p>좌동</p>
지역경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군 소관의 관리시설</li> <li>- 지역문화재 관광시설</li> <li>- 지역축제 행사장</li> </ul>	<p>좌동</p>

○ 주민 안전에 취약한 지역을 선별하여 순찰 활동을 함

- 예를 들면, 주간 유동인구가 많은 도심 터미널, 역 근방의 상가, 관광시설을 중심으로 하고 야간에는 인적이 드문 주택가 밀집 지역 등을 중심으로 순찰활동을 전개함
- 이 경우 각 구역별 책임순찰제로 운영해야 할 것이며 시차 출·퇴근, 치안 수요 밀집 시간대 집중 활동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도록 조직화함

## □ 농산어촌형 자치경찰 보조 시책

- 인구가 적고 고령화가 심한 농·산·어촌 지역의 경우 상대적으로 주민 참여를 연계한 자치경찰 활동의 중요도가 높게 나타났음<sup>88)</sup>
- 농촌지역 수확기를 맞이하여 농산물 도난 방지를 위한 자율방범대와 함께 순찰활동을 전개함<sup>89)</sup>
  - 강원도 영월군 자율방범연합대는 순찰활동을 통해 지역 농산물을 보호하고 선제적인 범죄예방활동을 통해 주민들의 방법의식을 제고하고 있음
- 이외에 자율방범대와 연계한 야간순찰대/야간기동대 순찰, 교통안전교육대 조직 및 운영, 재난안전 및 도난방지 지휘·감시 통제소 설치·운영, 농어촌 지역, 소외지역 등 현장 탐방, 자치경찰관과의 교신 및 관제센터 운영, 공원순찰경찰대·기마경찰대·수상경찰대 등을 활용한 경찰 서비스 활동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야간순찰대/야간기동대 순찰: 야간 소음 행위, 이웃 간 분쟁 등 단속·감시, 영업 관련 자치법규 준수사항 감시 및 단속
  - 교통안전교육대 조직 및 운영: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교내 교육과 자전거 전용도로에서의 실습, 교육 수료 후 평가를 통해 자격증 등 수여, 지역 축제 및 행사 시 캠페인 활동
  - 재난안전 및 도난방지 지휘·감시 통제소 설치 운영: 동절기, 하절기, 추수 시기 등 구분하여 운영
  - 자치경찰관과의 교신 및 관제센터 운영 (119센터와 연계): 도 경찰청과의 상시 연락체제 운영으로 번갈아 농·어촌 소외지역 현장방문 활동을 벌임
  - 공원순찰경찰대, 기마경찰대, 수상경찰대 등 활용한 경찰서비스 활동 지원: 다양한 현장(농수산물 절도 등)에서 탐지견 활용, 지역사회 스포츠, 문화 축제 등에서의 안전 확보 서비스 지원, 휴가철 범죄예방활동, 소방 업무 지원, 국가경찰활동 지원, 관내 차량순찰, 역 주변 거점 근무, 범죄예

88) 박재희 외.(2021). 성공적인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전략과 과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기본연구과제.

89) 국제뉴스(2021.10.13.) 영월군 자율방범연합대, 농산물 도난방지 순찰활동 전개.



방 활동, 도로교통 단속, 속도위반 단속, 도보순찰, 침입경보 발생시 출동, 유실물 처리, 공공장소나 중요건물, 산업단지지역, 취약지역 등에 대한 순찰 및 범죄예방

#### □ 주민과의 일상적 협력관계 체계화

- 주민자치회 또는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상호 정보교환, 의견수렴 등의 기회를 갖기 위하여 정기적(격주 또는 매월)으로 모임을 갖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읍·면·동의 주민을 대표하는 조직인 주민자치위원회나 이통장회의 때 지역 경찰 대표인 지구대장이나 파출소장이 참여하도록 함
- 이러한 모임을 통해 주민자치위원이나 이통장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회의 결과를 시·군에 공식적으로 건의하고 피드백을 얻을 수 있음
  - 이를 통해 지역 주민이 지역 치안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자치경찰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음
  - 예를 들면, 지역 내 어느 구역이 범죄가 발생할 확률이 높은지, 지역순찰 강화 또는 CCTV설치가 필요한지, 지자체의 협조가 필요한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음
  - 모임이 발전함에 따라 주민 중심의 자치경찰자문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파출소·지구대 또는 주민자치센터 등에서 모임을 갖도록 함
- 구역별로 취약지구 등에 대한 순찰, 방법강화 등에 대한 논의를 함으로써 평상시·비상시 연락망체계 등을 활용한 자치경찰 활동이 되도록 주민과의 일상적 협력관계를 체계화할 필요가 있음
  - 단체장(시장·군수) 및 시·군의회 등 주로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선출직의 관심을 유도하여 자치경찰과 주민과의 일상적 협력관계가 강화될 수 있도록 함

#### □ 지자체와의 연계 강화

- 현재 사회적 약자 보호 활동을 위한 지자체와의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지원하는 기관별로 소통하는 창구가 분산되어 있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음

- 사회적 약자 보호 지원 활동은 지자체-경찰-기관-단체가 (가칭) 범죄피해자 지원협의체를 구성하고 협의체가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상근인력,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음
- 또한, 자치경찰 분야별로 자치경찰과 시·군 담당부서의 주기적인 만남을 정례화하여야 함
- 특히, 생활안전 분야의 경우 시·군 내 단일 창구를 만들어 주기적인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교통관리는 시·군 교통과, 사회적 약자 보호는 시·군 복지과와 협업을 하고 있지만 생활안전 및 범죄예방 분야는 시·군 여러 부서가 산재하여 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기초자치단체의 특별사법경찰업무 지정 공무원과 협력하여 자치경찰 활동을 수행하는 방안도 구체화해 볼 수 있음
  - 통상 농촌 및 임야 지역에서 요구되는 자치경찰 활동은 농산물 절도 행위에 대한 농산품 및 농가 보호, 음용수를 위한 식수원 보호, 농어촌 쓰레기 관리 및 식품위생관리, 인근 지방도로의 안전관리 등임
  - 이와 함께, 도주범 체포 및 색출을 위한 검문검색, 범인수색, 체포 활동과 같은 사법경찰 활동의 지원, 산림보호, 산불화재예방과 국립공원과 자연보호 관련 경찰권 행사 및 특별사법경찰업무를 수행을 지원함
- 이외 지자체와의 협력 업무에는 다음 사항들이 제시될 수 있음
  - 교통지도과: 택시불편, 버스 무정차, 불법주차
  - 교통행정과: 차량방치, 무등록 오토바이
  - 문화체육과: 노래방 주류 보관
  - 청소지원과: 쓰레기 투기 소각, 담배꽂초, 동물사체 처리
  - 일자리경제과: 유기견 동물학대



### ▣ 단행본 및 연구보고서

- 강선주(2012).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자치경찰제에 관한 연구. 경상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남제현(2007).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사무배분에 관한 연구: 주민생활중심의 자치경찰제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재희(2020). 부산형 자치경찰제 모형에 관한 연구. 지방정부연구, 23(4), 1-25.
- 박재희·이행준(2020). 울산시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사전진단.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정책이슈리포트
- 박재희·한부영·최선미(2020). 부산형 자치경찰제 추진 모델 개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정책이슈리포트
- 박재희·전대욱·최인수(2021). 성공적인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전략과 과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기본연구과제.
- 박진현(2000). 우리나라 자치경찰 도입 방안에 관한 실증적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9.
- 송하철(2013). 제주지역 자치경찰관과 국가경찰관의 직무만족에 관한 비교 연구. 가천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안영훈(2005). 유럽형 자치경찰제도 모델분석 - 프랑스·스페인·이탈리아 자치경찰제도를 중심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보고서.
- 안영훈(2007). 자치경찰 표준운영 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 행정자치부 자치경찰제 실무추진단.
- 안영훈·강기홍(2008). 자치경찰제 확대 및 강화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기본연구과제.
- 양영철(2021). 신지방자치경찰론 이론과 실제. 온누리디앤피.
- 윤영균(2013). 광역자치경찰제 연구. 목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이상열·남재성(2018). 자치경찰제 도입에 관한 시민 인식태도 연구. 한국치안행정논집, 15(1), 181-208.
- 이상훈·이상열(2020).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제의 도입방안 연구. 경찰학논총, 15(2), 75-99.
- 이황우(2003). 경찰행정학(제3판), 서울: 법문사
- 전남도청(2021) 전남도청 섬해양정책과 도서지킴이 현황 자료.
- 최종술(2003). 한국적 자치경찰제의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행정논총
- 통계청 및 중앙치매센터(2021) '21년 도정 주요 통계
- 한견우(1999). 지방자치경찰의 실시에 따른 법적 문제점. 치안논총.
- 한국은행(2021). 2000년 이후 전남지역 인구 동향 및 시사점 보도자료. 2021.7.26. 광주 2021-45호.
- 한부영·박재희(2019).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경북형 자치경찰모델 구상.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정책이슈리포트
- 행정자치부 자치경찰제실무추진단(2007). 자치경찰 표준운영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

## ■ 뉴스 기사

- 경찰기독신문(2021). “전남 여수서, 자치경찰제 정착 위한 ‘지역안전순찰’ 강화”. 2021. 08.09.
- 광남일보(2020). “화순경찰 읍내지구대, ‘온 동네 한 바퀴 순찰’ 실시”. 2020.02.17.
- 광남일보(2021). “완도경찰, 지역공동체 치안 활성화 사회안전망 구축”. 2021. 03.28.
- 광남일보(2021). “장성경찰, 교육기관 종사자 아동학대 예방 교육 실시”. 2021. 07.08.
- 광남일보(2021). “장성경찰, 학교폭력예방·청소년 선도 활동 전개”. 2021.04.01.
- 광주·매일신문(2021). “주민 밀착형 치안정책, 자치경찰제”. 2021.08.22.
- 광주매일신문(2020). “장흥경찰, 아동학대 예방 지자체 합동 점검”. 2020.06.30.

- 광주매일신문(2021). “강진경찰서, 범죄피해 위기아동 긴급지원”. 2021.08.17.
- 광주매일신문(2021). “구례읍내파출소, 보이스피싱 예방 홍보 활동”. 2021.07.11.
- 광주매일신문(2021). “목포경찰, 학교 불법 촬영 카메라 점검”. 2021.07.22.
- 광주매일신문(2021). “영광경찰, 여름방학 청소년 선도 앞장”. 2021.08.04.
- 광주매일신문(2021). “장흥경찰, 찾아가는 지문 등 사전등록”. 2021.07.18.
- 광주매일신문(2021). “진도경찰, 폭우 피해 주민 돕기 구슬땀”. 2021.07.11.
- 광주매일신문(2021). “진도경찰서, 전동킥보드 이용수칙 홍보 활동”. 2021.04.04.
- 국민일보(2021). “광양경찰서, 아동학대 예방 적극 나서”. 2021.08.19
- 내외뉴스통신(2021). “곡성경찰서, 안전속도 5030 홍보활동 실시”. 2021.05.18.
- 내외뉴스통신(2021). “목포경찰, 가정폭력 재발방지 위한 분리조치 및 피해자 긴급 생활물품 지원”. 2021.08.10.
- 내외뉴스통신(2021). “목포경찰, 노인성폭력 예방위해‘찾아가는 이동상담소’운영”. 2021.09.01.
- 뉴스핍(2020). “보성경찰서‘교통단속기 확대 설치로 사고 감소 추세’”. 2020.10.13.
- 뉴스핍(2021). “여수 ‘한재로’9월1일부터 4.5t이상 화물차-건설기계 통행 제한”. 2021.08.26.
- 데일리한국(2021). “전남 함평경찰, 상습 토사 유출지 보완공사 실시”. 2021.08.18.
- 데일리한국(2021). “전남 함평경찰, 어린이 통학버스 일제점검”. 2021.08.02.
- 데일리한국(2021). “전남 함평경찰, ‘위기 어르신’범죄예방 환경조성에 앞장”. 2021. 09.03.
- 목포MBC(2021). ”목포 도로에 락스 추정 물질 누출.. 방제작업 실시”. 2021.08.10.
- 무등일보(2019). “담양경찰, 범죄예방순찰 취약장소 집중 신청기간 운영”. 2019. 01.16.
- 무등일보(2020). “구례경찰, 아동안전지킴이집 점검 및 재위촉”. 2020.04.05.
- 무등일보(2020). “담양경찰, 자율방범대와 우리 동네 탄력순찰”. 2020.06.04.
- 문화일보(2021), “웃차림 가벼운 여름에‘불법 촬영’기승... 주저말고 신고를”. 2021.

08.06.

스포츠서울(2021). “해남경찰서 ‘도시지역 범죄예방’ 교육 실시”. 2021.08.13.

시사매거진(2021). “영광경찰서, 대형교통사고 예방 활동 총력 전개”. 2021.08.26.

아시아경제(2020). “전남경찰‘순천시 코로나19’확산 방지 적극 지원”. 2020.08.27.

아시아경제(2021). “광양경찰, 주민 제안사업 어르신 안전한 귀갓길 조성”. 2021.08.25.

아시아경제(2021). “광양경찰, 학교폭력·아동학대 예방 공모전 개최”. 2021.09.01.

아시아투데이(2021). “함평경찰, 사회적 교통약자 보호 교육 호응”. 2021.07.20.

이뉴스투데이(2021). “강진군, 활주로형 횡단보도 설치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 나서”. 2021.05.24.

전국매일신문(2021). “고흥경찰서, 학교폭력 없는 즐거운 학교 만들기 앞장선다”. 2021.09.02.

전남매일(2021). “영광경찰서, 주민 공감 치안 협력단체 간담회 개최”. 2021.08.26.

전남매일(2021). “자치경찰제와 범죄예방지단제도를 통한 참여치안 기대”. 2021.08.19. (2021년 11월 최종검색) .

전남매일(2021). “진도경찰서 유인도서 주민과 치안간담회”. 2021.09.02.

전남매일(2021). “고흥경찰서, ‘지역안전순찰’ 치안 문제 해결”. 2021.04.26.

전남매일.(2021) “영암경찰서, 교내 화장실 불법촬영카메라 점검”. 2021.07.25.

전남일보(2016). “신안군·경찰, 안전한 섬 만들기 ‘안간힘’”. 2016.06.23.

전남일보(2020). “순천경찰, 농산물 절도예방 자율방범대 합동 순찰”. 2020.11.04.

전남일보(2021). “곡성경찰, 맞춤형 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2021.03.22.

전남일보(2021). “나주경찰,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 교통안전교육”. 2021.09.01.

전남일보(2021). “나주경찰, 유원지·유휴가 주변 음주운전 집중단속”. 2021.08.04.

전남일보(2021). “나주경찰-동신대 산학협력단, 어르신범죄 피해 예방 업무 협약”. 2021.08.29.

전남일보(2021). “목포경찰, 학교 밖 청소년 선도·보호 거리홍보”. 2021.09.05.

- 전남일보(2021) “나주경찰,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예방 위한 협력 구축”. 2021. 08.23.
- 중도일보(2021). “목포경찰, 피해아동 보호 지원‘사각지대 해소’. 2021.04.05.
- 프레시안(2021). “여수경찰‘어르신 범죄피해 예방 적극 대응 나섰다’”. 2021.09.02.
- 프레시안(2021). “완도경찰서, 여름 휴가철 해수욕장 6개소 방역 점검”. 2021. 08.12.
- BIGDATAnews(2021). “무안경찰, 일체형 방범시설 설치로 범죄예방 기여”. 2020.11.02.
- e대한경제(2021). “무안군-경찰서, 농촌 인력시장 안전 인프라 지원”. 2021.06.18.
- news1(2021). “해남경찰서“은행 종사자 역할 중”... 보이스피싱 예방 활동”. 2021.03.24.
- news1(2021). “광양경찰, 대형교통사고 예방 위한 도로 안전진단 실시”. 2021. 08.30.
- NEWSIS(2019). “화순경찰‘고인돌 등댓불’이용 탄력 순찰로 방범활동 나서”. 2019. 09.24.
- NEWSIS(2021). “코로나 방역수칙 외면, 심야영업 여수 홀덤펍 업주·손님 무더기 적발”. 2021.08.20.
- NSP통신(2021). “광양경찰, ‘찾아가는 장애인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2021.09.03.

## ▣ 웹사이트

La Direzione Corpo Polizia Municipale.

[https://poliziamunicipale.comune.fi.it/chi\\_siamo/direzione.html](https://poliziamunicipale.comune.fi.it/chi_siamo/direzione.html).

(2021년 8월 15일 검색).





## ‘전남 자치경찰에 바란다’ 도민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올해 7월1일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에 따라, 전라남도 자치경찰위원회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의뢰하여 ‘전남형 자치경찰 치안정책 개발연구’를 실시하고 있으며, **도민이 원하는 지역 맞춤형 치안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도민들의 목소리를 듣고자** 합니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은 전남형 자치경찰 정책 수립과 활동을 위한 소중한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① 남 ② 여

○(연령) ① 만19세 이하 ② 만20~29세 ③ 만30~39세 ④ 만40~49세  
⑤ 만50~59세 ⑥ 만60~69세 ⑦ 만70세 이상

○(직업) ① 회사원 ② 주부 ③ 학생 ④ 자영업  
⑤ 공무원 ⑥ 무직 ⑦ 기타

○(시군) ① 목포시 ② 여수시 ③ 순천시 ④ 나주시 ⑤ 광양시 ⑥ 담양군  
⑦ 곡성군 ⑧ 구례군 ⑨ 고흥군 ⑩ 보성군 ⑪ 화순군 ⑫ 장흥군  
⑬ 강진군 ⑭ 해남군 ⑮ 영암군 ⑯ 무안군 ⑰ 함평군 ⑱ 영광군  
⑲ 장성군 ⑳ 완도군 ㉑ 진도군 ㉒ 신안군

○(지역) ① 도시중심지역 ② 도시주변지역 ③ 농촌지역 ④ 어촌지역  
⑤ 산촌지역 ⑥ 섬지역 ⑦ 공장밀집지역 ⑧ 기타지역

○ 설문조사 참여 시, 추첨을 통해 모바일 상품권(5천원권)을 드립니다. 동의하실 경우 휴대폰 번호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동의(휴대폰 번호 입력) : \_\_\_\_\_

② 미동의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안내

『전남자치경찰에 바란다』 설문조사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정보 주체는 개인정보 수집을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거부하실 경우 추첨 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1.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휴대폰번호  
- 컴퓨터에 의해 자동 수집되는 항목 : 접속IP정보, 서비스이용기록, 접속로그
2.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 설문조사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모바일 상품권 지급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2021. 12월 까지

## 1 자치경찰에 대한 인식

1. **(자치경찰 인식)** 자치경찰제도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① 전혀 모른다. ② 모른다. ③ 보통이다. ④ 잘안다. ⑤ 매우 잘안다.
2. **(자치경찰 시행)** 자치경찰제의 시행이 지역의 치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 2 생활안전

지역 내 주민의 생활안전을 위해 자치경찰이 추진해야 할 지역순찰 및 범죄예방, 주민참여 방범활동 지원 등

3. **(범죄 안전성)** 현재 거주하는 지역은 범죄로부터 어느 정도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안전하다. ② 안전하다. ③ 보통이다. ④ 불안하다. ⑤ 매우 불안하다.

4. **(생활안전활동 만족도)** 현재 거주하는 지역에서 경찰의 생활안전활동에 대해 어느정도 만족하십니까?  
 ① 매우 만족한다. ② 만족한다. ③ 보통이다. ④ 불만족한다. ⑤ 매우 불만족한다.
5. **(범죄 위험요소)** 현재 거주하는 지역에서 어떤 범죄로부터 가장 위험을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폭력 ② 절도 ③ 살인 ④ 성폭력 ⑤ 기타( )
6. **(생활안전 위험장소)** 현재 거주지역에서 범죄로부터 주민의 안전이 가장 위협받는 장소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2개 항목 필수응답)  
 ① 주거지역(일반 주택가, 아파트 단지, 원룸·다세대 주택 밀집지 등)  
 ② 교육지역(학교 주변, 학원가 등)  
 ③ 상업지역(대형 백화점·마트, 주요 쇼핑지역, 귀금속 상가 등)  
 ④ 유흥·번화가(주점·음식점 밀집지역 등)  
 ⑤ 교통시설 주변(버스정류장 인근, 주차장, 지하도 등)  
 ⑥ 공업지역(공장 밀집지역, 조선소 지구 등)  
 ⑦ 공원지역(공원, 산책로, 놀이터 등)  
 ⑧ 관광지역(우리 지역 내 주요 관광지, 국립·도립·시립·군립공원 등)  
 ⑨ 외국인 밀집지역
7. **(범죄예방활동)** 현재 거주지역의 범죄예방을 위해 가장 효과적인 자치경찰 활동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경찰관의 순찰 강화  
 ② 범죄예방시설 설치·운영(CCTV, 비상벨, 셉테드-범죄예방환경설계 등)  
 ③ 주민참여 치안활동(범죄 취약지 합동순찰, 순찰장소 선정 참여 등)  
 ④ 범죄예방 홍보·교육 강화(최근 발생하는 범죄유형과 예방법 등)  
 ⑤ 생활안전 위협시설 지도 단속  
 ⑥ 기타( )

8. **(치안활동 참여)** 현재 거주하는 지역의 자율방범 순찰 등 공동체 치안활동에 참여할 의사가 있으신지요?

① 적극 참여하겠다. ② 여건이 되면 참여하겠다. ③ 관심없다.

9. **(기타 생활안전)** 범죄예방·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의견이나 제안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기재해주시시오.(없으시면 '없음'으로 표시)

### 3 교통안전

지역 내 교통안전을 위해 교통지도·지원, 교통안전교육·홍보, 교통안전시설 설치 등 자치경찰이 추진해야 할 교통안전 활동

1. **(교통 안전성)** 현재 거주지역의 교통은 어느 정도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안전하다. ② 안전하다. ③ 보통이다. ④ 불안하다. ⑤ 매우 불안하다.

2. **(교통활동 만족도)** 현재 거주하는 지역에서 경찰의 교통활동에 대해 어느정도 만족하십니까?

① 매우 만족한다. ② 만족한다. ③ 보통이다. ④ 불만족한다. ⑤ 매우 불만족한다.

3. **(교통안전 위협 요소)** 교통안전을 가장 위협하는 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도민의 교통법규 위반

- ② 신호기, 횡단보도 미설치 등 **교통안전시설 부족**
  - ③ **교통단속 활동 및 장비 부족**
  - ④ 오토바이, 전동킥보드 등의 **이륜차 법규 위반**
  - ⑤ 기타 ( )
4. **(교통위반 위협 요소)** 도민의 교통법규 위반사례 중 가장 위협적인 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음주운전
  - ② 보복·난폭운전
  - ③ 불법 주정차
  - ④ 과속·신호위반
  - ⑤ 보행자 무단횡단
  - ⑥ 기타 ( )
5. **(교통안전 강화)**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자치경찰 활동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법규 위반 단속**(음주운전, 과속, 신호 위반 등)
  - ② **교통안전시설 개선**(신호체계 개선, 야간에 눈에 잘 띄는 횡단보도 확대 등)
  - ③ 교통안전 **예방 활동**(출·퇴근 시간대 교통관리 등)
  - ④ 교통안전 **교육·홍보·캠페인**(초등학교 주변, 보행자 많은 곳 등)
  - ⑤ **교통약자 보호 강화**(어린이·노인보호구역 지정 확대 및 관련시설 정비 등)
6. **(교통약자 보호)** 어린이, 노인 등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자치경찰 활동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내 단속강화**
  - ②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지정 확대**
  - ③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내 교통시설 개선**
  - ④ 어린이 등하굣길, 노인시설 주변 보행로 등 **안전 활동 강화**

⑤ **교통안전 홍보·교육·캠페인**

⑥ 기타 ( )

7. **(기타 교통안전)** 교통안전을 위한 제안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기재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없음'으로 표시)

#### 4 사회적 약자보호

사회적약자란 아동, 청소년, 노인,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보호가 필요한 사람으로 자치경찰이 이들에 대해 한 보호 및 학대, 폭력, 성폭력 등 예방활동

1. **(사회적 약자 안전성)** 현재 거주하는 지역의 사회적약자는 어느 정도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안전하다. ② 안전하다. ③ 보통이다. ④ 불안하다. ⑤ 매우 불안하다.
2. **(보호활동 만족도)** 현재 거주하는 지역에서 경찰의 사회적약자 보호활동에 대해 어느정도 만족하십니까?  
① 매우 만족한다. ② 만족한다. ③ 보통이다. ④ 불만족한다. ⑤ 매우 불만족한다.
3.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가장 시급하게 근절해야 할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개 항목 필수응답)  
① 아동학대 ② 성범죄 ③ 가정폭력 ④ 학교폭력 등 청소년 범죄  
⑤ 노인학대 ⑥ 장애인 대상 범죄

4. **(사회적 약자 보호활동)**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가장 필요한 자치경찰활동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사회적약자 범죄에 대한 엄정대응, 신속한 수사
- ② 불법촬영 안심구역 설치 등 정책 추진
- ③ 성폭력, 아동학대, 가정폭력 등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강화
- ④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 ⑤ 가해자 재범 방지를 위한 선도 교정프로그램 운영
- ⑥ 아동보호기관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 ⑦ 기타 ( )

5. **(범죄피해자 지원)** 범죄 피해를 입은 사회적약자에 대한 지원책으로 가장 필요한 것은?

- ① 법률상담 지원
- ② 심리상담 지원
- ③ 금전 등 물질적 지원
- ④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환경개선
- ⑤ 가해자로부터 보호조치

6. **(기타 사회적 약자 보호)**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의견이나 제안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기재해주시시오.(없으시면 '없음'으로 표시)



## 5 종합 의견

☐ **(분야별 중요도)** 향후 3년간 도민 안전 향상을 위해 가장 많은 투자가 필요한 자치경찰 분야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생활안전 및 범죄예방 활동
- ② 사회적 약자(아동, 여성,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보호활동
- ③ 교통안전 활동

☐ **종합적으로 자치경찰에 바라는 점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기재해주세요.**  
(없으시면 '없음'으로 표시)